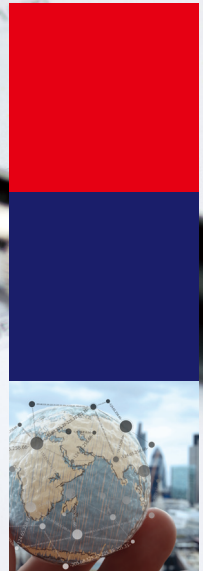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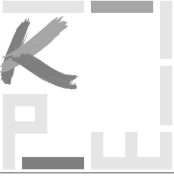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27-0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2000년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나타냈던 인도는 2016년 이탈리아를 추월하여 세계 7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는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했으며, 2020년에는 인도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고성장 추세는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2014년 출범한 인도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의 효과에 따른 인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개발, 제조업과 금융산업 육성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Make in India'로 잘 알려진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향후 인도가 중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전 세계의 시선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부상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기업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지수와 변수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

업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과 대(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에 수고해준 연구진의 노력 외에도 자문위원, 심의위원, 익명의 내외부 평가자의 조언과 비판이 본고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가 정책 입안자들과 관련 연구자에게는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고대합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택**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이 플랜테이션 중심의 상품 작물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1년 개혁·개방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친시장·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

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소수의 대기업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1, 2, 3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이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 권역에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한·인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인도 경제협의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

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 하면서 한·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 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실현가능한 대안임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지역별·산업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의 선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신규 진입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과 목적	22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23
3. 연구의 구성	26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27
1. 산업정책	28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28
나. 모디 정부	40
다. 소결	48
2. 산업구조	50
가. 개요	50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57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73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74
가. 데이터	74
나. 주요변수	76
2. 기업특성 분석	79
가. 개요	79
나. 산업별 비교	84

다. 소유구조별 비교	115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131
3. 소결	142
가. 산업별 기업특성	144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147
다. 지역별 기업특성	148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51

1. 개요	152
2. 중요소생산성 추정	154
가. 추정 모형	154
나. 데이터	156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159
3. 기업특성별 중요소생산성 비교	161
가. 산업별 비교	161
나. 소유구조별 비교	167
다. 지역별 비교	172
4. 소결	177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179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180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186
가. 기업규모	188
나. 비용	190
다. 이윤	193

라. 위험	197
3. 소결	20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3
1. 요약	204
2. 시사점	209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209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210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212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13
3. 연구의 한계	214
참고문헌	215
부록	221
Executive Summary	223



표 차례

표 2-1. 1940~80년대 주요 산업정책	31
표 2-2. 1990년대 연도별 산업정책	37
표 2-3. '메이크 인 인디아' 비전 및 목표	41
표 2-4. '디지털 인디아'와 '스킬 인디아'의 주요 내용	42
표 2-5. '스타트업 인디아'의 주요 내용	43
표 2-6. 모디 정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조치	45
표 2-7. GST 법안 주요 내용	47
표 2-8. 인도의 시기별 산업정책	49
표 2-9. 2015/16년 인도 산업별 국내총부가가치(GVA) 규모 및 비중과 국내총자본형성(GCF) 규모 및 비중	51
표 2-10. 2014/15년 인도 소유구조별 국내총생산(GDP) 규모 및 비중과 국내총자본형성(GCF) 규모 및 비중	53
표 2-11. 2014/15년 주별 산업구조	56
표 2-12. 산업별 성장률	58
표 2-13. 1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59
표 2-14. 2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60
표 2-15. 3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61
표 2-16. 소유구조별 산업별 평균 고용 증가율	65
표 2-17. 주별 1차 산업 비중 추이	66
표 2-18. 주별 2차 산업 비중 추이	68
표 2-19. 주별 제조업 비중 추이	69
표 2-20. 주별 3차 산업 비중 추이	70
표 3-1. 인도 국가산업분류(21개 부분 - 대분류)	80
표 3-2. 인도 권역별 지역 구분	81
표 3-3. 기초통계(1996~2015년, 20년 평균)	82

표 3-4. 변수의 기간별 기초통계	83
표 3-5. 총수입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87
표 3-6. 총자산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89
표 3-7. 총비용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0
표 3-8. 총보수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2
표 3-9. 세전순익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3
표 3-10. ROA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4
표 3-11. 총고정자산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5
표 3-12. 총부채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6
표 3-13. 유동비율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97
표 3-14. 총수입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0
표 3-15. 총자산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1
표 3-16. 총비용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2
표 3-17. 총보수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3
표 3-18.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3
표 3-19. ROA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4
표 3-20.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5
표 3-21. 총부채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6
표 3-22.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107
표 3-23. 총수입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09
표 3-24. 총자산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0
표 3-25. 총비용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1
표 3-26. 총보수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1
표 3-27.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2
표 3-28. ROA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3

표 3-29.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3
표 3-30. 총부채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4
표 3-31.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115
표 3-32. 총수입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17
표 3-33. 총자산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18
표 3-34. 총비용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19
표 3-35. 총보수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0
표 3-36.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1
표 3-37. ROA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2
표 3-38.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2
표 3-39. 총부채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3
표 3-40.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124
표 3-41. 총수입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5
표 3-42. 총자산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7
표 3-43. 총비용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7
표 3-44. 총보수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8
표 3-45.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9
표 3-46. ROA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29
표 3-47.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30
표 3-48. 총부채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30
표 3-49.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131
표 3-50. 총수입 기간별 통계(권역별)	133
표 3-51. 총자산 기간별 통계(권역별)	134
표 3-52. 총비용 기간별 통계(권역별)	136
표 3-53. 총보수 기간별 통계(권역별)	137

표 3-54. 세진순익 기간별 통계(권역별)	138
표 3-55. ROA 기간별 통계(권역별)	139
표 3-56.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권역별)	140
표 3-57. 총부채 기간별 통계(권역별)	141
표 3-58.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권역별)	142
표 4-1. 변수의 정의	157
표 4-2. 변수의 산업별 통계적 특성 1	158
표 4-3. 변수의 산업별 통계적 특성 2	159
표 4-4. 생산함수 추정결과	160
표 4-5. 산업간 총요소생산성 비교	162
표 4-6. 2차 산업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164
표 4-7. 3차 산업 중 금융과 비금융서비스 총요소생산성 비교	165
표 4-8. 정보통신서비스의 총요소생산성	166
표 4-9.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168
표 4-10.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교	169
표 4-11.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171
표 4-12. 외국계 기업 중 한국기업의 총요소생산성	172
표 4-13.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1차 산업	174
표 4-14.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2차 산업	175
표 4-15.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3차 산업	176
표 5-1.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총 투자 금액	181
표 5-2.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투자형태(신규법인 기준)	182
표 5-3.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형태별 투자 금액(1980~2016년) ...	184
표 5-4. 우리 기업의 인도 지역별 · 업종별 진출 현황(2015년 11월 기준)	186

표 5-5. 한국기업 기초통계(1996~2015년, 20년 평균)	187
표 5-6. 한국기업 총수입 기간별 통계	189
표 5-7. 한국기업 총자산 기간별 통계	189
표 5-8. 한국기업 총비용 기간별 통계	191
표 5-9. 한국기업 총보수 기간별 통계	193
표 5-10. 한국기업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	193
표 5-11. 한국기업 ROA 기간별 통계	195
표 5-12. 한국기업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	197
표 5-13. 한국기업 총부채 기간별 통계	197
표 5-14. 한국기업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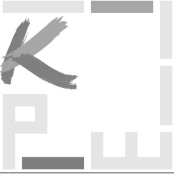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1870년대 인도의 철도망	29
그림 2-2.	인도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52
그림 2-3.	주요 국가의 GDP 비중	52
그림 2-4.	소유구조별 고용 증가율 추이	54
그림 2-5.	인도의 산업 비중	57
그림 2-6.	산업별 공식 민간부문 대 정부부문 비율	62
그림 2-7.	정부부문의 국내순생산 산업별 비중	62
그림 2-8.	민간 공식부문의 국내 순생산 산업별 비중	63
그림 2-9.	소유구조별·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64
그림 3-1.	주요 변수의 1, 2, 3차 산업별 비중에 대한 기간별 추이	85
그림 3-2.	주요 변수의 금융과 비금융 부문 비중 기간별 추이	99
그림 3-3.	주요 변수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비중 기간별 추이	108
그림 3-4.	주요 변수의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비중 기간별 추이	116
그림 3-5.	주요 변수의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비중 기간별 추이	126
그림 3-6.	주요 변수의 권역별 비중 기간별 추이	132
그림 5-1.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신규 법인 수	180
그림 5-2.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업종별(대분류 기준) 구분(1980~2016년)	181
그림 5-3.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투자형태 추이(신규법인 기준, 1980~2016년)	183
그림 5-4.	2011~15년 총수입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88
그림 5-5.	2011~15년 총자산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0

그림 5-6.	2011~15년 총비용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1
그림 5-7.	2011~15년 총보수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2
그림 5-8.	2011~15년 세전순익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4
그림 5-9.	2011~15년 ROA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5
그림 5-10.	2011~15년 총고정자산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6
그림 5-11.	2011~15년 총부채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8
그림 5-12.	2011~15년 유동비율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199
그림 6-1.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210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CMIE의 Prowess 데이터베이스	74
글상자 3-2. 인도의 조직화부문	75
글상자 6-1. 인도 정부의 공기업 매각 방식	211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



1. 연구배경과 목적

2000년대 초반 선진국 위주의 경기하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신흥경제권의 부진,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Brexit)의 현실화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2000년에 세계 12위(한국 13위)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 9위(한국 14위)로 올라섰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2015년에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인도의 고성장 기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규모는 2016년에는 러시아, 2017년에는 브라질을 추월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도의 고성장 추세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호황이라기보다 2014년 5월 집권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인 모디노믹스의 효과에 따른 인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디노믹스로 대변되는 고성장, 친시장 정책에 따라 인도정부는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 제조업과 금융산업 육성, 공기업, 토지, 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도 'Make in India'로 잘 알려져 있는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향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 제조업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인도의 산업연구는 산업 수준의 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도 경제 전반 및 산업구조 관련 연구와 더불어 기업 수준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인도의 세계 제조업 허브 성장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더욱이 모디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3대 개혁

법안(노동법, 토지수용법, GST법) 중 GST(Goods and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법의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도 경제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인도 진출을 위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수준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부문별 기업특성의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수립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지수와 변수를 활용했으며,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인도 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기업과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관련 정책수립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인도 기업의 주요 특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앞으로 인도 경제 및 산업을 보다 미시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인도의 산업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 인도 개혁개방 전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특히 이 당시 시작된 경제개혁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에 따른 예상치 못했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 최근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로 Alfaro and Chari(2009)가 있다. Alfaro and Chari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년 말 단행된 인도 개혁·개방 전후 인도 기업과 산업의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Alfaro and Chari의 연구결과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과 개혁·개방 전에 이미 존재하던 기업들이 인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lfaro and Chari는 새로운 사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에 한정되었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기업들이 산업생산 및 이윤을 50% 이상 점유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lfaro and Chari는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자산, 총매출과 같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등의 수익성 관련 지수를 분석했다는 점에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2000년대 이후의 인도 산업의 특성에 대한 변화인 반면, Alfaro and Char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전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주 목적이었다.

인도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한 최근 연구로 Thomas and Narayanan(2012)이 있다. Thomas and Narayanan은 생산성 추정에서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의 생산성에 대한 이질성을 분석했다. Thomas and Narayanan은 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여 수출기업과 내수중심의 기업과의 생산성 차이와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도 Thomas and Narayanan과 동일한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했으나 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기업을 다양한 분류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국내에서의 인도 기업 또는 산업 관련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다. 먼저 이순철 외(2007)은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고 제조업 중 6개 세부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각 세부산업의 잠재생산량과 수출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교역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조충제 외(2011)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경영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만 노무와 세무환경 악화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 인도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발급, 한국 전용공단 설립, 현지투자지원센터의 확대를 요청했는데, 현 시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수준 반영된 상태이다.

조충제, 송영철(2014)은 인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현황에 대해 조사했으며, 인도 진출 한국기업 중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이들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한·인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순철, 김완중(2015)은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경제의 구조변화, 내수시장의 성장, 그리고 인도 내수시장에서의 주요국의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고와는 다른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보완적인 연구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인도 산업 및 기업 연구는 산업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설문조사 및 교역 관련 자료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인도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방면의 분석을 시행했다. GDP의 산업별 분해 또는 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보다 미시적으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으나 분석 기간이 보다 최근이며, 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본고는 먼저 인도의 산업구조에 대한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 관련 변수들의 기초 통계의 시계열을 활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구축하

였으며, 추정된 생산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도의 기업 수준 생산성 데이터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20년간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산업 특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고는 인도 주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지출 관련 총비용과 총보수, 이윤 관련 세전순익과 총자산이익률 및 총고정자산, 위험 관련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이용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보고는 기업의 특성을 1, 2, 3차 산업별, 금융과 비금융 부문별, 공공과 민간기업별, 지역별 기업 특성들을 비교했으며, 인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과 현재 인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특성도 분석했다.

본 연구가 이용하는 데이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인도 산업생산의 70%를 차지하므로 인도 산업의 특성 분석을 위한 샘플링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보고는 생산함수 관련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인도 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구분을 활용하여 인도 산업 및 기업들의 특성을 비교했다. 보고는 기업 및 산업 특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 산업구조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인도 산업정책의 변천을 인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리하여 인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했다.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1. 산업정책

2. 산업구조



1. 산업정책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1) 독립 이전

식민지 이전 인도는 어느 정도 농업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편이었으며 농업과 공업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다. 당시 인도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자급자족 형태로 벼, 밀, 수수 등의 식용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농업은 기존의 봉건적 제도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데다 환금작물로 농작물이 전환되면서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영국이 자국의 공산품 판매를 위해 기존의 가내수공업을 위축시키면서 제조업이 붕괴되었다.

영국은 인도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가공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면서, 인도 영농업자들에게 식용작물 대신 목화, 황마,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생산하도록 강요하였다. 상품 작물로의 전환은 인도의 식량 소비생산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는 기근과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1765~1858년의 식민지 기간 동안 인도는 가뭄과 식량 재배 감소로 12번의 기근과 4번의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그러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의 농산물 수출량은 유지되어 경제적 타격은 더욱 심하였다. 당시 인도의 농업 종사 인구는 70%, 공업 12%, 무역 및 운송업 6%, 서비스직 10%로 농업 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영국의 정책으로 인해 인도 내 식량과 공업 원자재 생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¹⁾²⁾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동인도회사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향신료나 섬유제품과 같은 가공제품 수출에 주력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인도의 대외무역 성격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영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에 원자재와 가공제품의 교환체계를 설립하는 산업정책을 펼쳤다.

1) Clingingsmith and Williamson(2005).

2) Chatterjee and Jetli(2009).

산업의 생산량은 당시 수요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도 내 생산재와 자본재 생산의 불균형은 무역 불균형을 확대시켰고, 이는 독립 이후 수입 대체전략과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의 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19세기 중반 인도의 철도 건설 산업은 인도 경제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1853년에 시작된 인도 철도 시스템은 1910년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철도시스템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철도를 통해 영국은 인도 전역의 원자재를 영국으로 수출하였고, 영국 제품을 인도 전역으로 운송, 판매하였다. 비상시 병력을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 철도건설은 영국의 상업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지만, 향후 인도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철도는 단순히 운송 및 교통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곡물가격 안정과 인도의 석탄 및 목화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2) 독립 이후

독립 직후 인도의 산업은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기술력이 낮았고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도는 독립 직전 수립된 봄베이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경제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개발을 추진하였다. 인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나 당시 초대 총리인 네루 총리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 인도의 산업정책은 ① 중공업에 중점을 두고 자본재의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였으며 ②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공공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당하였고 ③ 민간부문의 투자 또한 이윤에 기반을 두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독립 이후 제1차 5개년계획(1951~56)은 1947년 영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하면서 발생한 농업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여타 산업에

4) Clingingsmith and Williamson(2005).

표 2-1. 1940~80년대 주요 산업정책

정책명	발표 연도	주요내용
산업정책 결의안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1948	• 산업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규정
산업법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 산업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
산업정책 결의안 Industrial Policy Resolution	1956	•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 확립을 위해 산업을 ① 정부독점 ② 단계적 국영화 ③ 정부주도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는 산업 세 가지로 분류
영세기업 산업정책 Small-scale Industrial Policy	1967	• 영세기업적합산업을 규정하여 3억 5,000만 루피 이상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을 제한
독점적·제한적 거래 관행법 Monopoly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 소규모 산업 진입제한 기업을 2억 루피 이상으로 재분류 • 가격과 자원분배를 통제하여 독점 예방
산업면허정책 Industrial Licensing Policy	1970	• 산업을 ① 핵심분야 ② 투자규모 5,000만 루피 이상 ③ 투자규모 1,000만~5,000만 루피 ④ 투자규모 1,000만 루피 이하인 산업 네 가지로 분류하고 ①~③에 해당하는 산업은 면허 보유 기업만 운영허가
외환규제법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73	• 해외자본의 투자를 통제
산업정책 성명 Industrial Policy Statement	1973	•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에 대한 허가제를 모든 산업에서 의무화 • 영세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해당분야의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투자 확장 금지
노동쟁의법 Industrial Disputes Act	1976	• 300명 이상의 기업의 해고나 구조조정 규제
산업정책성명 Industrial Policy Statement	1977	• 영세기업 역할 강조와 산업 분권화
산업정책성명 Industrial Policy Statement	1980	• 내수시장의 경쟁 확대와 기술개발 강조
산업면허 축소	1988	• 26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면허 면제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1985	• 낙후 산업의 특정 분야 진입에 한해 부록(Appendix I)의 산업들에 대한 대기업 규제 삭제 • 대기업 규정 최소 자산한도를 2억~10억 루피로 설정

자료: Sivadasan(2006, 온라인, 검색일: 2016. 6. 21); Mishra(2014); Thakur, Gupta, Singh(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차 개발계획(1956~61)부터는 주요 산업과 중공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산업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때 제시된 중공업 기반의 산업 전략은 노동보다는 자본재 위주의 산업육성에 중심을 두었으므로, 고용확대라는 5개년계획의 목표와 상충되었다.

민간과 공공의 산업 역할을 규정한 첫 정책은 1948년 산업정책결의안(Industrial Policy Resolution)과 산업정책성명(Industrial Policy Statement) 이었다. 이 결의안은 산업을 크게 ① 정부의 독점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인정하는 산업(탄약과 무기 제조, 원자력 에너지, 철도 분야) ② 국영기업이 독점하되 민간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석탄, 철광, 제철, 항공기 제조, 선박 건조, 전화기와 전보기 등 통신장비 제조, 석유 등) ③ 국가가 규제하는 산업(기계, 화학, 비료, 고무, 시멘트, 제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 ④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민간기업의 활동이 허용되는 분야도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나 민간의 활동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1990년대 경제개방정책을 펼칠 때까지 1948년 결의안은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다만 당시 발표된 산업정책결의안의 내용을 실행할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1950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인도의 정부주도 산업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헌법 7차 부록(Schedule)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의 투자 결정을 조율하고 기간산업(commanding heights)⁵⁾을 확보, 보호하기 위해 산업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국가통제 경제 체제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인도 정부는 같은 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구성하여 이후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1951년 발표된 산업법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1951년 산업법(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은 산업

5) 에너지, 금융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일컫음.

면허(Industrial License)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산업 규제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독립 이후 인도는 외화를 확보하고 자족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대체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산업뿐 아니라 수입에도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발표된 산업면허제도는 1960년대 중반 산업 성장을 둔화의 요인이 되었는데, 수입 면허와 관세는 무역을 제한,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 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⁶⁾

1956년 산업정책결의안은 1948년 산업정책결의안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인도는 사회주의와 계획되고 신속한 개발을 국가 목표로 채택하고 모든 공공이익을 위한 서비스와 기본, 전략적 산업을 공공분야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또 필수적인 산업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은 국가가 담당하여 광범위한 산업 개발의 책임을 맡았다. 결의안에서 산업은 정부에 독점권이 있는 산업, 점차 국영화하는 사업, 정부가 주도권을 갖지만 민간기업이 보완하는 3가지로 분류되었다.⁷⁾ 즉, 민간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독점하는 17개의 산업, 국가가 주도하되 민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12개의 산업, 민간의 영역으로 구분되나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나머지 산업으로 나누었다. 또한 산업 기반의 분포를 넓히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해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안을 포함하였다. 1956년 결의안은 1948년 결의안과 함께 1990년대 개혁개방 전까지 산업정책의 기틀이 되었다.

1960~70년대에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주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964년에는 독점규제위원회(Monopolies Inquiry Commission)를 설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한하였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경제를 강조하였다. 독점규제위원회는

6) Singh(2008); Chatterjee and Jetli(2009).

7) Chatterjee and Jetli(2009), p. 8.

우선순위 분야에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과 자원 분배가 통제되었으며 대기업의 독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7년 소기업산업정책(Small-Scale Industrial Policy)은 공장과 기계설비 투자 금액으로 소기업을 규정하여 영세기업적합업종을 선정, 일부 생산 품목은 소기업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할당하였다. 기존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던 중견, 대기업들은 기존 설비하에서 생산이 허용되었으나 추가적인 생산설비의 확장은 금지되었다. 1967년 산업 라이선스관리위원회(Dutt Committee / 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는 3억 5,000만 루피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1969년에 발표된 독점적·제한적 거래 관행법(Monopoly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MRTP)은 대기업을 자산 2억 루피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재정의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영세기업적합산업에 진입이 제한되었다.

1970년 발표된 산업면허정책(Industrial Licensing Policy)은 기존의 3가지 산업분류 대신 산업을 ①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분야(Core Sector) ② 5,000만 루피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③ 1,000만~5,000만 루피 규모의 투자 사업들로 구성되는 중간 규모 부문(Middle Sector) ④ 투자규모가 1,000만 루피 이하로 면허가 필요 없는 비면허사업 4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이 정책 역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역할을 핵심 산업과 중공업, 수출 지향적 산업에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73년에는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설비확장을 제한하였고 해외 자본의 투자와 자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제하였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을 넘을 수 없었다. 같은 해 발표된 산업정책성명(Industrial Policy Statement)에서 인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제조업 설립, 특히 대

규모 소비재 생산에서 대기업과 외국기업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영역을 더욱 축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장려정책을 이어갔다. 또 소기업 장려정책 기조를 뒷받침하여 소비재 생산에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신규 설비확장을 금지하였다. 1,000만 루피 이하의 고정자본 투자는 산업 면허가 면제되었으나 이 역시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5,000만 루피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1976년 노동쟁의법(Industrial Disputes Act)은 고용인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해고나 구조조정에서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으며 1982년에는 한층 더 나아가 규제 대상을 고용인 1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1977년 산업정책성명은 기존의 대기업 억제정책에서 한층 더 나아가 영세기업, 가내수공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산업의 분권화를 강조하였다. 영세기업은 인구 5만 명 이하의 마을에 위치한 기계와 설비 투자가 10만 루피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었다. 대기업의 생산이 금지된 소기업 보호 품목이 18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국내 기술로 가능한 분야에서는 외국기업과의 금융적, 기술적 합작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자본 100%의 외국기업은 수출 지향적 기업과 첨단기술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외국자본의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⁸⁾

1980년대에는 산업 면허 규제 철폐를 비롯하여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의 산업정책성명은 내수시장의 경쟁 확대와 기술 개발을 강조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① 생산시설의 최적효율성 달성 ② 생산성 제고 ③ 고용률 증대 ④ 완화 ⑤ 농업기반 강화 ⑥ 수출 지향적 산업 육성 ⑦ 높은 가격과 저품질로부터 소비자 보호였다. 더불어 생산시설의 확대가 연 5%씩 자동 허용되었고 에너지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과 산업공정, 혹은 대체에너지 탐사 산업에 특별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또한 소규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8) Singh(2008).

생산시설의 투자제한 금액을 200만 루피로 확대하였다.

1985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규제철폐와 산업자유화 정책 도입을 확대하였다. 1988년에는 26개 금지산업(Negative List)을 제외하고 산업 면허가 면제되었다. 다만 투자와 기업 위치에 대한 제한은 남겨두었다. 이 시기 자동차산업, 시멘트, 면화, 식품가공업, 폴리에스테르 섬유 산업은 면허 취득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산업 현대화와 생산규모 확대를 달성하였다. 또한 수입이 제한 혹은 금지된 품목의 수를 축소하여 교역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3) 1990~2000년대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수입대체전략과 정부주도 산업 전략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되면서, 7차 5개년개발계획(1985~90)이 시작되었고 1991년 급격한 변화를 불러온 정부의 산업정책이 도입되었다. 1990년 말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는 기존의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산업자유화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산업면허제도 폐지, 공공분야 독점 산업의 수 축소, 1969년 제정된 독점적·제한적 거래 관행법 하의 투자 제한을 철폐하여 외국인투자 자동승인을 도입하고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산업, 공공파이낸스, 금융, 외국인투자, 환율관리 등 다양한 범위의 개혁방안이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대내외적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향상을 꾀했다.⁹⁾

1991년에 발표된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과 산업정책성명은 폐쇄적이었던 인도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신호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도는 기존 정부주도의 비효율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인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업면허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안보와 전략적, 사회적 우려가

9) Singh(2008).

표 2-2. 1990년대 연도별 산업정책

발표연도	주요내용
19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면허제도를 폐지 - 대기업의 사업 확장 사전 승인절차 폐지 - 국영기업의 독점 산업 수를 17개에서 8개로 축소 - 소규모 영세기업의 주식 최대 24%까지 대기업에 인수 허용
199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탐사와 정유산업이 공공부문 독점 산업에서 제외 • 발전부문 산업이 국내외 민간에 개방 • 부실제조기업법(Sick Industrial Companies Act) 조항 적용이 공공부문까지 확장
199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산업 제외로 공공부문 독점 산업은 6개로 축소 • 산업면허 요구 산업 15개로 감소(자동차, 가전제품, 가죽 등 산업면허 제외) • 영세기업 고유업종 축소(기성복 제외)
199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크 의약품(bulk drugs) 산업 면허제 폐지 및 해당분야 FDI 자동승인제 실시 • 통신분야 민간과 해외자본에 개방 • 법인세 인하
199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책 발표 • 제약산업 정책 완화 및 가격통제 범위 축소
1996~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제 산업 14개로 축소(전자제품 제외) • 영세기업 재정의(투자 자산규모 750만 루피→3천만 루피) • 비영세기업의 제조상품에 대한 수출의무 75%에서 50%로 축소 • 석탄 가격 규제 철폐 및 석탄산업 민간개방 • 자동승인제 적용 산업 수 확대 • 공기업을 평가, 감정하는 투자회수위원회(Disinvestment Commission) 설립
199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제 적용 산업 수 14개에서 9개로 축소 • 15개의 산업이 영세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 • 법인세를 인하 및 배당세(tax on dividends) 폐지 • 9개 공기업(IOC, IPCL, ONGC, BPCL, HPCL, NTPC, SAIL, VSNL, BHEL; PSE: Public Sector Enterprise)을 “Navaratnas(9개의 보석)”으로 선정하여 강화된 자주권을 부여하고 GAIL과 MTNL 두 기업에도 동일한 권한 부여 • PSE의 효과적 자주권 행사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발행된 696가지의 PSE 가이드라인 철폐

자료: Sivadasan(2006, 온라인, 검색일: 2016. 6. 21); Thakur, Gupta, Singh(2012); Nagaraj(20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있어 공공분야에 할당된 18개 산업(석탄, 갈탄, 석유정제, 주류, 담배, 제약, 가전제품, 유해 화학물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면허제도를 폐지했다. 민간의 투자가 금지된 산업 또한 17개에서 8개로 축소되었으며 생산시설 확장 제한을 완화하였다. 석유탐사와 정제, 탄광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였고 발전 부문도 국내, 해외 민간투자를 개방하였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분야

의 지분을 뮤추얼펀드와 금융기관, 일반 대중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경쟁력이 약한 공공분야의 산업은 산업금융재건위원회(BIFR: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에 경영참여권을 주었으며, MRTP에 따른 투자 전 승인 심사는 폐지되었다.

첨단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허용되어 해외자본의 지분을 51%까지 허용하였다.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무역 회사에도 해외자본의 지분을 51%까지 허용하였다. 더불어 우선순위 산업과 관련한 기술협약을 자동승인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 절차를 완화하였다.

해외자본에 경제를 개방하면서 특별경제지구(Special Economic Zone, SEZ) 해외자본의 제조업 투자를 지분 100%까지 자동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04년 민간금융에 대한 FDI의 지분이 74%까지 허용되었으며 석유탐사와 석유제품 마케팅, 석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과 LNG 파이프라인은 해외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었다. 2005년 통신분야의 특정 서비스 FDI 지분 허용은 49%에서 74%로 증가하였다.

1992년 제정된 수출수입정책(Export-Import Policy)은 인도의 무역 자유화 정책 도입을 재확인시켰다. 제한품목(Negative List)을 제외한 모든 교역에서 수입면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자본재와 중간재가 관세 부과로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해졌다. 2002년 남아 있던 수입 수량제한 규제 또한 폐지되었다.¹⁰⁾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그 보호 정도는 감소하였다. 1999년에 영세기업 생산 전용 품목은 821개였으나 2005년에는 506개로 축소되었고 다시 500만 루피 이하의 투자규모에서 가능한 전용 품목을 20개로 축소하였다. 2006년의 중소기업개발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은 기업(enterpris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10) Felipe, Kumar, and Abdon(2013).

로 인정한 법적 체계로 영세기업과 소기업, 중견기업의 규모를 각각 제조업은 250만 루피, 5,000만 루피, 1억 루피로, 서비스업은 100만 루피, 2,000억 루피, 5,000만 루피로 재정의하였다. 인도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직업훈련과 여성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는 안을 담았다.

2002년에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은 경쟁 지향적 법적 체계를 설립하고 반경쟁적 관행과 지배력 남발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듬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설립되어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주는 관습을 예방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경쟁법은 2007년과 2009년에 개정되어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의 제재를 담당하고 있다.

특정산업을 겨냥한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발전을 포함하여 통신, 도로, 항구 등 주요 인프라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2003년의 발전법(Electricity Act)을 통해 전력 생산의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이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민간이 전력보급과 그리드분야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도로와 교량의 건설, 보수에 외국인 자본이 100% 허용되었으며 MRTP 조항은 고속도로에서 대기업을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1년에 발표된 국가제조업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은 제조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여 인도를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으려 추진하였다. 2022년까지 당시 16%였던 제조업의 GDP 비중을 22%까지 끌어올리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가투자제조지역(NIMZ: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 중소기업 지원, 직업교육 기회 제공, 녹색제조업(Green Manufacturing) 진흥, 사업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51년의 산업법(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부터 지속되어왔던 산업면허제도 또한 주류, 담배, 항공우주전자제품(electronic aerospace)과 방산, 폭

발물, 유독화학물질 5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정책의 기반을 제공하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재탄생되었다.

나. 모디 정부

2014년 5월 취임한 모디 총리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 방식과 달리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를 추구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고성장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¹¹⁾

특히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산업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중공업 육성정책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25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와 '스킬인디아(Skill India)'를 포함하여 FDI 개방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의 다양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5년 7월 인도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및 각종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 전자제품 제조, 디지털 인프라, 직업교육과 디지털 역량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약 1조 1,300억 루피(약 178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인디아'¹²⁾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11)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12) 기존 디지털 정책들을 통합, 재구성하여 관련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둠. 신세린(2015b).

표 2-3. '메이크 인 인디아' 비전 및 목표

-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
-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
- 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심 빈곤자 및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 제조업 부문 기술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자료: 조총제, 송영철, 이정미(2015); <http://www.makeinindia.com>(검색일: 2015. 8. 15).

있다. 디지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지방까지 브로드밴드 구축과 통신망 보급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연관하여 2020년까지 전자제품 순수입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에 Vedanta Group, Reliance Industries Ltd. 등의 민간기업들 또한 약 7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³⁾

'스킬 인디아'는 인도의 산업 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나온 정책이다. 인도 정부는 '스킬 인디아'를 통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25개 핵심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과 기업인을 양성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⁴⁾¹⁵⁾ 이 정책은 기술교육과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과 멘토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개발법 수정안(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3) 신세린(2015b).

14) 인도의 기업인밀도(인구 1000명당 신규기업의 수)는 2012년 0.12로 매우 낮은 편이며 정식기술교육을 받는 비율도 노동인구의 2.3%에 불과함.

15) 인도 정부는 2014년 11월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을 신설하여 과거 개별 부처별로 추진하던 각종 인력양성 및 교육, 기술개발정책 등을 '스킬 인디아'로 통합하여 추진, 관리하도록 함. 신세린(2015b).

표 2-4. '디지털 인디아'와 '스킬 인디아'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디지털 인디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 완화와 디지털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사회로의 이전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인프라 제공 •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증진(Digital Empowerment)
	주요 개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전자제품 순수입 0(제로) 달성 • 직업교육 및 1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 2019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브로드밴드 구축 • 스마트폰 보급률 100% 달성 및 무선망 전국 보급 •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eKranti) 제공, 보건, 교육, 금융서비스 등의 온라인화 •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스킬 인디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발전 •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세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개발미션: 2022년까지 4억 명에게 25개 분야 100종의 기술훈련 제공 • 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PMKVY): 자격증 및 보상 제도 • 훈련자금지원제도: 34만 명에게 기술훈련자금 5,000~15,000루피(78~2,360 달러) 대출 • 2015 기술개발 및 기업가정신정책: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네트워크 및 멘토 프로그램 • UDDAN- 대학(원)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제공, 기업들에 고용플 제공 • 훈련평가 및 보상 표준제도, 산학협동직업교육

자료: 인도전자정보통신부(MEIT)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2); MSDE 웹사이트(검색일: 2016. 10. 4); 신세린(2015b).

Development (Amendment) Bill)을 통해 제조업의 경우 영세기업을 투자규모 500만 루피, 소기업을 1억 루피, 중견기업을 3억 루피로, 서비스업의 경우 영세기업의 투자규모를 200만 루피, 소기업을 5,000만 루피, 중견기업을 1억 5,000만 루피로 각각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투자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같은 해 영세기업적합품목으로 남아 있던 20개의 품목을 모두 해제하였다. 이로써 현재 정부와 공기업이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생산구매품목 358개를 제외하고 1951년 산업법(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에서 지속되었던 영세기업 우대정책이 사실상 종료되어 자본의 규모와 관계없이 생산 제한이 없어졌다.¹⁶⁾

영세기업 지원정책은 현재 기존의 진입제한 대신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

16) 신세린(2015a).

표 2-5. '스타트업 인디아'의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 스타트업기금 조성(4년간 매년 250억 루피, 약 3억 7,500만 달러) • 창업·폐업 기간 단축 • 3년간 9개 노동법과 환경법을 기업 자율인증으로 대체 • 특허출원 비용 80% 감면 및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지원 • 3년간 법인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 면제 • 벤처 투자자금 세금 면제 • 스타트업 인디아 허브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 제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정부 입찰 시 규제 완화 • 혁신경진대회 및 기업기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큐베이터 제공 • 31개 혁신·R&D 센터 설립(13개 스타트업센터, 18개 기술경영인큐베이터)

자료: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 웹사이트(검색일: 2016. 11. 1); 신세린(2016).

다. 2015년 2,000억 루피 규모의 영세기업개발신용지원기관(MUDRA: 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 Bank)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5~100만 루피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6년 1월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에¹⁷⁾ △각종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에 향후 4년간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타트업 인디아'는 인도의 복잡한 규제와 세제, 불안정한 R&D 환경 등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자 이를 해결하여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창업인큐베이터와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기반이 제공되며, 기업 등록과 취소, 노동법 등 각종 규제가 간소화되고, 세제 혜택과 창업 자금 등이 지원된다. '스타트업 인디아'는 인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뿐 아니라 IT, 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⁸⁾

17) 인도 정부는 스타트업을 5년 이내 등록기업과 기업규모 2억 5,000만 루피 이하로 정의함. 신세린(2016).

모디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이를 유인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 정책이다. 인도는 90년대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산업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제한하였으나 모디 총리는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한 구자라트 모델을 기반으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확대, 최소투자기준 완화, 투자승인절차 간소화 및 세제혜택 등의 FDI 확대 정책을 발표해오고 있다.

모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 실현 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철도, 광산 등 기간산업을 개방하고 산업별로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승인 투자금액을 확대하여 투자기간을 단축시켰다. 특히 2016년 방위산업, 단일 소매업(Single Retail) 등 여러 분야에 걸쳐 FDI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Negative List에 포함된 일부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FDI 자동승인이 가능해졌으며 항공, 국방 분야의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가 확대되었다. 방송통신, 항공 분야는 외국인투자 지분의 100%, 제약 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의 경우 74%까지 자동승인 루트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항공과 방위산업의 경우 기존 49%의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가 100%까지 확대되었다. 단일 소매업의 경우 인도 내 조달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현지 조달(Local Sourcing)규제를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APPLE, IKEA 등 해외 단일 브랜드 유통사들의 대인도 진출 확대가 가능해졌다.¹⁹⁾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은 금융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비은행 금융기업 관련(other financial services carried by 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투자에 대해서도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²⁰⁾

18) 신세린(2016).

19) 이 조치로 인해 애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애플의 인도 내 지역 점 개점이 가능해짐. 애플은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해 CEO Tim Cook이 인도를 방문 모디 총리를 직접 대면하는 등 노력해왔음.

표 2-6. 모디 정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조치

구분	주요내용
MAT ¹⁾ 적용 완화 (Minimum Alternat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로열티, 기술서비스사용료, 이자소득에 대해 MAT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개인투자자 모두 적용 • 부동산, 인프라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MAT 미적용
FIIA 설립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별 외국인투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관련한 이슈, 분쟁, 애로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
FIPB 기능 강화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PB의 외국인 투자 승인한도 금액 확대(120억 루피→300억 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 루피(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의 경우 FIPB의 승인만 요함.²⁾
통관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통관 서류 단순화
온라인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시 환경/산림 평가 요청을 온라인으로 실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manent Account Number(PAN), Tax Deduction Account Number(TAN), Corporate Identity Number(CIN) 발급 간소화

주: 1) 최저한세(MAT)란 감면세액을 적용했을 경우 납부세액이 최저한세 이하로 되었을 때 최소한 최저한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도는 MAT를 1980년대에 도입했으며, 교육세 등 추가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21% 정도임.

2) 300억 루피 이상의 투자규모의 경우 인도경제내각위원회(CCEA: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의 승인을 요함. 한편 인도의 대부분의 FDI는 자동승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분야의 경우(ex. 49%를 초과하는 방송분야 FDI) 정부 승인을 요함.

자료: 신세린(2015a); DIPP(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나 모디 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에 업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베스트 인디아’는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Promotion), 인도 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Industry)와 주정부기관의 비영리 합작기구로 기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투자진흥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상담과 투자 촉진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잠재적 투자자들의 투자 전 상담부터 제조업을 위한 토지 확보, 투자 후 고충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과 맞닿아 있는데 인도는 현재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순위(Ease of Doing Business)

20) Business Standard(2016. 10. 25), “DIPP notifies 100% FDI in more financial services”(온라인, 검색일: 2016. 12. 6).

를 2015년 134위에서 50위권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6년에는 130위를 기록하였다.

기업환경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디 정부는 노동법, 토지법,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 3가지의 개혁을 추구해왔다. 노동 개혁을 위해 노동법 관련 16가지의 서류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공장법(Factories Act)²¹⁾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추가근로 확대(50 → 100시간),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 등 근로자 권익 향상과 함께 고용유연화를 비롯한 보다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²²⁾²³⁾²⁴⁾ 토지수용 절차와 주민들의 동의를 완화하는 토지법 개혁 또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주정부들이 각각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GST(CGST: Central GST)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GST(SGST: State GST)로 이원화(dual GST system)하는 상품서비스세(GST)의 법안이 2016년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로 주별로 상이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던 인도의 간접세를 통일하여 ‘조세 체계의 단순화 → 기업들의 거래 비용 감축으로 인한 생산 활동 증대 → 인도 경제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²⁵⁾

모디 총리의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인도는 현재 중국을 넘어서는 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디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인도의 연방정부 시스템이 각 주별로 산업정책에 큰 자율성을 부

21) 공장법이란 공장의 등록과 허가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동 법안은 공장 노동자의 권익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김신주(2016).

22) 인도는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음. 김신주(2016).

23) Reuters(2014. 6. 30), “Factbox – India’s stringent labour laws”(온라인, 검색일: 2016. 7. 2); Economic Times(2014. 7. 8), “What India’s five manufacturing hubs expect from Modigovernment to kick-start growth”(온라인, 검색일: 2016. 7. 2).

24) 이정미(2014).

25) 김신주(2016).

표 2-7. GST 법안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GST 특례 규정 ²⁶⁾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GST 관련 법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중간(inter-state)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회(Parliament)가 관련 법안 제정 권한을 가짐.
IGST의 과세 및 징수 ²⁷⁾	중간(inter-state) 상거래 공급물품에 대한 GST는 인도 정부(Government of India)가 과세 및 징수하도록 하며, 세수는 GST 위원회(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가 결정한 조세 분배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가짐. ²⁸⁾
공급의 정의 ²⁹⁾	GST 법안은 기존 286조항의 '판매 및 구매 발생 기준으로 세금 부과(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where such sale or purchase takes place)' 내용을 '공급 발생 기준으로 세금 부과(the supply of goods of services or both, where such supply takes place)'로 변경
IGST에 대한 가산세 ³⁰⁾	중간(inter-state) 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가산세(additional tax)는 1%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세금의 부과 및 징수권은 2년 혹은 GST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인도 정부에 귀속됨.
보상 ³¹⁾	GST 법안의 도입으로 세율 조정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주(state)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세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함.

자료: The Constitutions(One Hundred and Twenty_Second Amendment) Bill(2014); 김신주(2016).

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는 취임 당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Team India를 구성하여 주정부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도의 29개 주마다 집권 정당이 달라 정책이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각 주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통과는 물론 실행 협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26) *The Constitutions(One Hundred and Twenty Second Amendment) Bill*(2014), Insertion of new article 246A, and Special provision with respect to goods and services tax.

27) *ibid.*, Levy and collec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 in course of inter-State trade or commerce.

28) GST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 주의 조세 및 재무를 담당하는 주정부기관의 장관들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GST 법안 관련 논의를 하며, 향후 GST 위원회의 논의에서 GST 세율이 결정됨.

29) *ibid.*, Amendment of article 286.

30) *ibid.*, Arrangement for assignment of additional tax on supply of goods to States for two years or such other period recommended by the Council.

31) *ibid.*, Compensation to States for loss of revenue on account of int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

다. 소결

인도의 산업정책은 정책 목표와 성격에 따라 크게 ① 1757~1947년 기간 식민지 시기 ② 1947년 독립 이후부터 1991년 개방 이전 ③ 1991년 개방 이후 ④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인도는 농업과 제조업의 후퇴를 겪었다. 영국은 상품 작물 위주의 플랜테이션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영국산 대량생산 상품으로 기존의 수공업이 붕괴되었다. 철도 등의 산업화 기반이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총 성장률은 낮았으며 자본재가 발전하지 못해 산업이 불균형적이었다.³²⁾ 독립 이전인 1944년에 인도의 관료들은 자본재 생산을 포함한 산업화 전반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권장한 15년 경제개발계획인 봄베이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독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추진되는 정부주도의 5개년 계획의 기반이 되었다.³³⁾

독립 후 1950~80년대 인도의 경제 및 산업정책은 중앙집권적 계획, 주요 산업 국유화, 과도한 규제, 보호무역주의, 외국자본의 선택적 도입의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수입대체정책은 제품 가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으며, 산업면허제도로 기업의 투자와 진입이 금지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과거의 수입대체전략과 정부주도의 개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면허가 필요한 산업과 영세기업 보호 품목의 수가 축소되었으며,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국제수지 유동성 문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1990년대 인도는 기존의 산업보호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개방 정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산업면허제도 는 폐지되고 국가 독점 산업의 수는 감소하였다. 외국자본 규제가 크게 완화되

32) Chatterjee and Jetli(2009), p. 8.

33) Sanyal(2010).

표 2-8. 인도의 시기별 산업정책

시기	주요내용
영국 식민지 시기 1757~194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으로부터 면 등 대량생산제품 수입, 면화, 황마 등 원자재 수출 • 가내수공업 중심의 제조업 붕괴 • 플랜테이션 농업 전환 • 영국 기업 중심의 식민지 착취 구조 • 인프라 보급과 철도 개설을 통한 교역 활성화
독립 이후 195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도의 개발계획 수립 • 산업면허제도를 통한 주요 산업의 국영화 • 수입대체전략 • 영세기업 보호업종 지정을 통한 대기업,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 • 중공업 중심의 개발계획
개방 이후 1990~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면허제도 폐지를 통한 국영산업 민영화 • 수입자유화를 통한 수입대체전략 포기 •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 영세기업 보호업종 품목 축소
모디 정부 201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중심의 개발정책 •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 • 친기업 정책과 기업환경 개선 •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등 개혁 조치

자료: Sivadasan(2006, 온라인, 검색일: 2016. 6. 21); Thakur, Gupta, Singh(2012); Nagaraj(20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였으며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제한도 폐지되었다. 금융과 환율관리, 국영기업 혁신 등 다양한 개혁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제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제 자유화 추세는 최근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구자라트 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모디 총리가 2014년 5월 인도 중앙정부의 총리로 취임하면서 정부주도의 산업 운영 탈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를 추구하는 '모디노믹스(Modinomics)'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라 불리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꼽을 수 있다. 모디 정부는 과거 중공업 중심의 인도의 산업발전 모델이 인력활용과 산업발전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제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와 기업환경 개선, '스킬 인디아'와 '디지털 인디아' 등 제조업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발표하여 이행 중이다.³⁴⁾

2. 산업구조

가. 개요

인도의 산업구조는 인도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자유화, 민영화, 글로벌화에 기반을 둔 1991년 개혁·개방 이후 인도 산업의 특성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는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의 결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산업 성장의 주체가 변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별 산업구조가 보다 상이하게 개편되었다.

1) 농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2015/16년 인도 국내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 기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3.2%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업, 제조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의 비중은 29.7%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러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국내총자본형성(GCF: Gross Capital Format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산업별 GCF는 GDP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CF는 서비스업이 5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33.9%, 1차 산업 7.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인도의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을 통해

34)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표 2-9. 2015/16년 인도 산업별 국내총부가가치(GVA) 규모 및 비중과
국내총자본형성(GCF) 규모 및 비중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GVA		GCF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122,794	100.0	40,649	100.0
1차 산업(농림수산업) 전체	20,931	17.0	3,146	7.7
2차 산업(공업) 전체	36,498	29.7	13,799	33.9
광업	3,187	2.6	1,306	3.2
제조업	19,943	16.2	6,686	16.4
전기, 가스, 수도	3,202	2.6	3,618	8.9
건설	10,167	8.3	2,190	5.4
3차 산업(서비스업) 전체	65,365	53.2	23,704	58.3
도소매, 유지, 보수	14,829	12.1	3,602	8.9
통신, 방송	7,987	6.5	3,603	8.9
금융, 부동산, 임대업 및 전문서비스	25,344	20.6	10,169	25.0
공공 및 국방, 기타 서비스	17,205	14.0	6,330	15.6

주: 1) 국내총부가가치는 2011~12년 부가가치(GVA) 기준 명목 GVA이며 국내총자본형성은 지출(by use) 기준임.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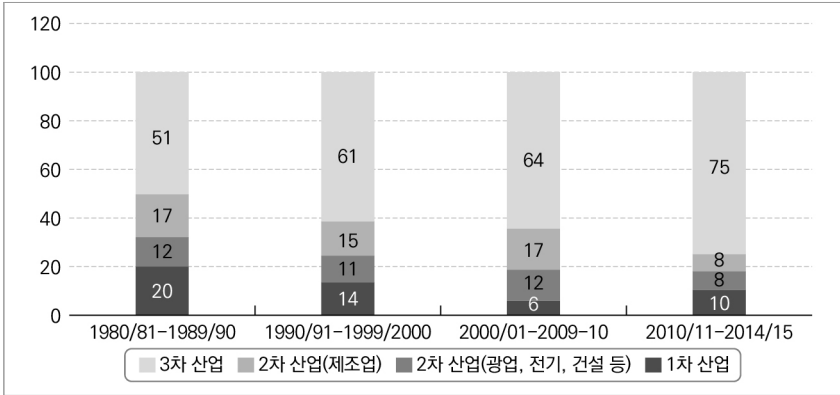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9).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2]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차 산업의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인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2010/11~2014/15년 기간을 제외하면 2차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5~17%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2차 산업 비중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40여 년간 15% 내외에 머물러 있어 제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1차 산업인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 달리 인도에서는 서비스부문이 농업부문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조기탈산업화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

그림 2-2. 인도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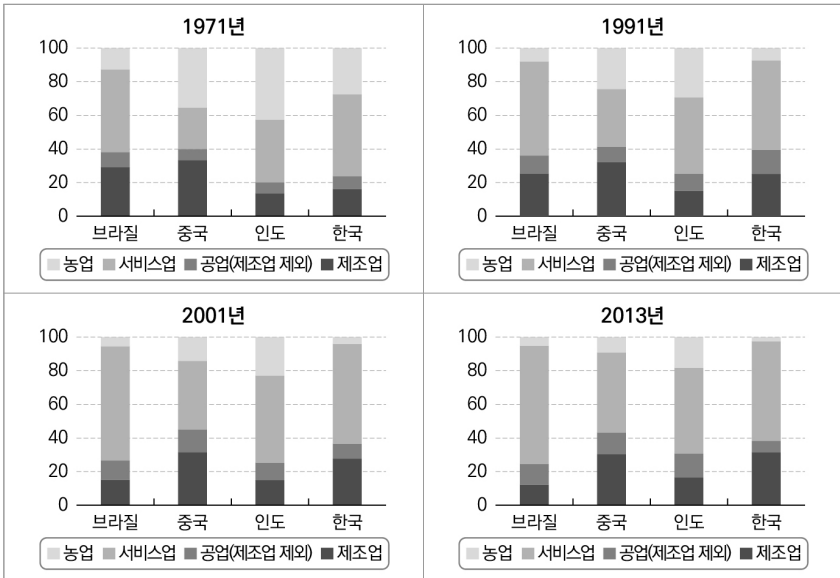
주: 1) 산업의 성장 기여율은(비교연도 산업 실질부가가치 - 기준연도 산업 실질부가가치)/(비교연도 실질GDP - 기준연도 GDP) × 100(%)임.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9).

그림 2-3. 주요 국가의 GDP 비중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6. 5. 9).

다. Rodrik(2014)에 의하면 인도와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탈산업화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에서 시작했고, 2차 산업 대신 서비스업 의존도를 높여가는 경향을 보인다.

2)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산업 성장 주체의 변화

인도는 독립 후 사회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을 도입했으며 정부주도의 공업화 전략을 취했다. 인도 정부는 1970년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시스템하에서 중공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부문에 공기업이 진출하는 폐쇄적인 산업정책을 펼쳤다.³⁵⁾ 그 결과 인도는 연평균 3%대의 저조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인도 정부의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은 포괄적 접근법을 취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랐다.³⁶⁾ 1991년 이후 인도 산업 성장

표 2-10. 2014/15년 인도 소유구조별 국내총생산(GDP) 규모 및 비중과
국내총자본형성(GCF) 규모 및 비중

(단위: 십억 루피, %)

구분	GDP		GCF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비금융 공기업	7,588	6.6	3,874	9.5
금융 공기업	3,184	2.8	142	0.3
정부	11,447	10	5,224	12.9
정부부문 계	22,219	19.4	9,239	22.7
비금융 민간기업	37,836	33	17,260	42.5
금융 민간기업	3,319	2.9	356	0.9
가계	51,350	44.8	13,794	33.9
민간부문 계	92,505	80.6	31,410	77.3

주: NAS 2011~12 명목 GDP, GCF는 자산(by asse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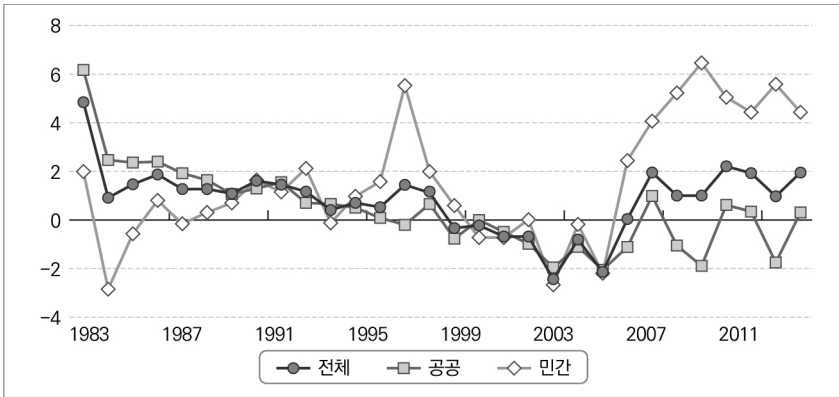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9).

35) 이 웅 외(2013), pp. 35~36.

36) *Ibid.*, p. 38.

그림 2-4. 소유구조별 고용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0).

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했으며, 그 결과 2014/15년 인도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 정부부문은 19.4%로 민간 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총자본형성 또한 민간부문이 77.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부부문은 22.7%로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금융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여전히 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GDP에서 금융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전체 GDP에서 민간 금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2.9%와 유사하다.

1990년대 민간 분야 중심의 성장은 기간별 고용 증가율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체적으로 음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 증가율은 경기침체가 있었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양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지역별 산업구조의 편차 심화

인도의 주별 산업구조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주정부 역량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1991년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주별 산업구조는 보다 극명하게 나

뒀어졌다. 노동규제가 높은 주정부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반면, 경제 자유화와 인프라 수준이 높은 주에서는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주정부의 지원책,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서비스 또한 주별로 상이하게 발전했다.³⁷⁾

인도의 주는 아루나찰프라데시(30.2%)와 시킴(27.0%)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들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인 안다만니코바르제도(61.1), 찬디가르(88.4), 델리(87.5), 푸두체리(58.2)³⁸⁾인데, 이 지역은 서비스업이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인도 남쪽 지역의 케랄라주와 타밀나두 주는 연안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무역, 숙박, 요식업이 성장한 결과 서비스업 비중이 인도 전체의 평균을 상회한다. 인도의 금융 중심지인 뭍바이가 주도인 마하슈트라 주에서도 3차 산업 비중이 6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주들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농업 비중은 적은 편이다. 특히 델리와 찬디가르 연방 직할지의 농업 비중은 1%도 미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농업 비중이 높은 주는 아루나찰프라데시(45.4%), 마드라프라데시(36.7%), 우타르프라데시(28.9%), 안드라프라데시(27.6%), 라자스탄(27.5%), 편잡(26.7%), 나갈랜드(26.5%)가 있다. 중부에 위치한 마드라프라데시 주를 제외하면 농업

37) 장지호, 김정렬, 조영희(2010).

38) 인도에는 현재 7개 연방직할지가 있으며, 연방직할지는 여타 주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장관(Administrator) 또는 지사(Lieutenant-Governor)가 통치한다. 그러나 델리와 푸두체리는 기타 연방직할지와 달리 부분적인 주의 권한이 부여되어 별도의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장관 위원회(Executive Councils of Ministers), 주 총리(Chief Minister)가 있으나, 특정 법안은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7개 연방직할지: ① 안다만-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 ② 찬디가르(Chandigarh) ③ 다드라-나가 하벨리(Dadra and Nagar Haveli) ④ 다만-디우(Daman and Diu) ⑤ 락샤드weep(Lakshadweep) ⑥ 푸두체리(Puducherry, 舊 폰디체리) ⑦ 델리(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자료: 외교부(2015), p. 117.

표 2-11. 2014/15년 주별 산업구조

(단위: 천만 루피, %)

주	1차산업 (농림수산업)		2차산업 (제조업·광업 포함)		3차산업 (서비스업)		합계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안드라프라데시	1435.0	27.6	1072.2	20.6	2693.1	51.8	5200.3
아루나찰프라데시	70.8	45.4	38.0	24.4	47.0	30.2	155.9
아쌘	416.5	22.7	400.5	21.8	1021.0	55.5	1838.0
비하르	922.3	22.9	696.7	17.3	2403.8	59.8	4022.8
차티스가르	452.3	21.5	800.9	38.1	848.7	40.4	2101.9
고아	39.2	8.0	223.1	45.6	226.7	46.4	489.0
구자라트	1562.7	20.4	2742.9	35.8	3350.8	43.8	7656.4
하리아나	817.7	18.8	1137.5	26.1	2397.9	55.1	4353.1
히마찰프라데시	161.0	19.5	303.5	36.8	361.3	43.7	825.9
잠무 카슈미르	193.0	22.0	223.5	25.4	462.6	52.6	879.2
자하르칸드	371.2	18.8	670.3	33.9	933.7	47.3	1975.1
카르나타카	1231.0	17.5	1641.0	23.4	4149.3	59.1	7021.3
케랄라	541.9	13.7	798.8	20.2	2622.1	66.2	3962.8
마드라프라데시	1865.7	36.7	1071.3	21.1	2143.1	42.2	5080.1
마하라슈트라	1665.6	9.9	4443.1	26.3	10758.2	63.8	16866.9
마니푸르	30.6	21.4	32.1	22.4	80.5	56.2	143.2
메갈라야	38.2	15.1	77.7	30.7	137.5	54.3	253.3
미조람	16.7	16.3	26.8	26.0	59.4	57.7	103.0
나갈랜드	53.3	26.5	28.0	13.9	119.7	59.5	201.0
오디샤	584.5	18.8	1046.5	33.7	1477.1	47.5	3108.1
편잡	933.5	26.7	824.2	23.6	1740.6	49.8	3498.3
라자스탄	1581.3	27.5	1540.5	26.8	2623.6	45.7	5745.5
시킴	12.5	10.1	77.8	62.9	33.5	27.0	123.8
타밀나두	1137.6	11.6	2612.9	26.8	6016.5	61.6	9767.0
텔랑가나	770.6	17.9	1075.3	25.0	2460.1	57.1	4306.0
트리푸라	62.7	23.4	55.2	20.6	150.1	56.0	268.1
우타르프라데시	2824.1	28.9	1890.3	19.4	5048.5	51.7	9763.0
우타라칸드	200.0	14.4	506.4	36.5	680.8	49.1	1387.2
웨스트벵갈	1891.3	23.6	1296.9	16.2	4820.6	60.2	8008.7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5.8	9.4	18.2	29.5	37.6	61.1	61.5
찬디가르	1.2	0.4	32.6	11.2	257.0	88.4	290.8
델리	37.7	0.8	527.3	11.7	3946.5	87.5	4511.5
푸두체리	12.4	4.8	95.6	37.0	150.2	58.2	258.2

주: 1) 명목GDP 기준,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고아,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케랄라,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트리푸라는 2013/14년 기준.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0).

비중이 높은 주들은 인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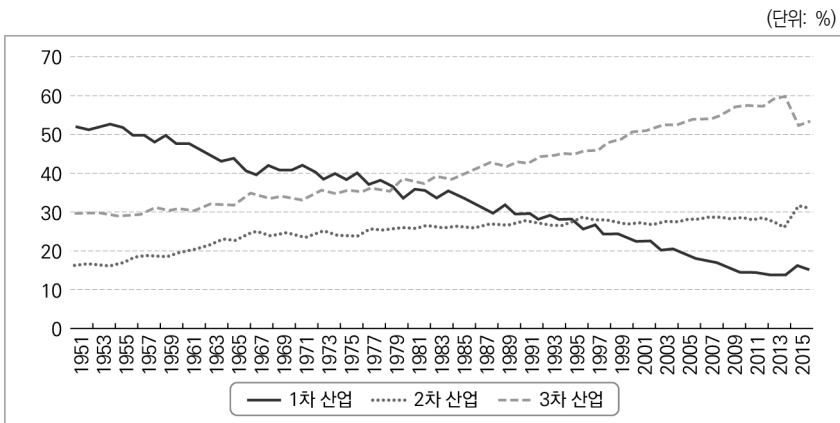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킵 주로 62.9%이며, 그 다음은 고아(45.6%)이다. 2차 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은 연방직할지인 찬디가르(11.2%), 델리(11.7%)가 있다. 한편 서비스와 농업 비중이 둘 다 높고 2차 산업 발전이 낮은 주로는 인도의 동북부지역인 비하르(17.3%), 웨스트 벵갈(16.2%) 등이 있다.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1) 인도 전체 산업구조 추이

1947년 독립 후 1950년대 인도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 1950년대 인도의 1차 산업 비중은 50%에 육박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GDP의 40%를 농업이 차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업은 2차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대체되었다. 인도의 1차 산업 비중은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5. 인도의 산업 비중



주: National Account Statistics(NAS) 2004-05 요소비용(factor cost) 기준: 인도 GDP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2014/15 이후 NAS 2011-12 부가가치(GVA) 기준.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1).

표 2-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기간	1차산업	2차산업 (전체)	2차산업 (광업, 전기, 건설등)	2차산업 (제조업)	3차산업	전체
1950s	2.62	5.62	5.40	5.80	3.97	3.58
1960s	1.80	5.92	6.35	5.55	4.68	3.65
1970s	0.30	3.79	2.96	4.45	4.33	2.64
1980s	3.33	6.03	5.62	6.36	6.84	5.45
1990s	3.08	5.51	5.13	5.83	7.81	5.92
2000s	2.64	7.98	7.85	8.07	9.01	7.54
2011/12- 2015/16	2.21	4.08	1.66	6.03	9.31	6.33

주: 1) 인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1950s은 1950/51-1959/60 기간임.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1).

1950/51년 전체 GDP의 51.9%의 1차 산업 비중이 2015/16년 15.4%까지 축소되었다. 반면 2차 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6.2%, 29.5%에서 31.2%, 53.4%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의 성장률은 인도 전체 산업별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와 2011/12년에서 2015/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2차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1990년대와 2011/12년에서 2015/16년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서비스업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가) 1차 산업의 부문별 추이 및 특징

1차 산업의 성장률은 3% 내외로 지난 40여 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 가운데 임업 성장률이 1969/70년에서 1989/90년까지

표 2-13. 1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기간	1차산업 전체	농업	임업	수산업
비중	1969/70	40.9	33.4	9.4	1.1
	1990/01	29.5	24.9	3.9	1.1
	2013/14	13.9	11.9	1.3	0.8
성장률	1969/70~1989/90	2.6	2.7	0.0	4.1
	1990/91~2013/14	3.1	3.1	1.7	4.7

주: National Account Statistics(NAS) 2004-05 요소비용(factor cost) 기준.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1).

0.0%, 1990/91년에서 2013/14년 1.7%로 가장 저조했으며, 임업 비중은 1969/70년 9.4%에서 2013/14년 0.8%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농업 성장률은 1차 산업의 85%에 달하는 만큼 1차 산업 전체의 성장률과 유사한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40년 기간 GDP의 33.4%에서 11.9%까지 축소되었다.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4%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

1차 산업의 비중 축소와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농업은 인도 인구의 58%가 종사할 정도로 인도 국민의 주요한 생계 수단이며,³⁹⁾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에서도 식품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1차 산업은 인도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나) 2차 산업의 부문별 추이 및 특징

2차 산업의 경우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업 성장률이 개혁·개방 이후 둔화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률이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9/70년 13.1%에서 2013/14년 14.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

39) 한국무역협회(2015), 인도 농업 현황 및 전망.

표 2-14. 2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기간	2차산업 전체	광업	제조업	등록 제조업	비등록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비중	1969/70	24.6	2.5	13.1	6.6	6.8	1.0	8.0
	1990/01	27.6	3.5	15.1	9.0	6.2	2.0	7.1
	2013/14	26.1	1.9	14.9	10.6	4.4	1.9	7.4
성장률	1969/70~1989/90	4.7	5.7	5.0	5.8	3.9	7.7	3.2
	1990/91~2013/14	6.2	3.6	6.5	7.3	4.9	6.3	6.7

주: National Account Statistics(NAS) 2004-05 요소비용(factor cost) 기준.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1).

하는 요인으로는 △수요 측면 △제도 측면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저임금 상황에서 인도의 내수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인도의 복잡한 기업법, 경직적 노동법과 기반시설의 부족은 제조업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 볼 때, 인도 제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⁴⁰⁾ 특히 등록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체 제조업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등록 제조업의 비중은 1969/70년 6.6%에서 2013/14년 10.6%까지 확대되었다.⁴¹⁾ 후발 개발도상국의 조기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인도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도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스마트 시티’ 등의 제조업확대 정책은 인도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도가 조기 탈산업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해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 3차 산업의 부문별 추이 및 특징

3차 산업은 1990/91년 이후 인도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는데, 비중이 크지

40)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41) 등록제조업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표 2-15. 3차 산업의 부문별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기간	3차 산업 전체	도 소 매	요 식 업	철도	철도 외 운송	창고	통신	은행 · 보험업	부동산 · 사업 서비스	정부 및 국방 서비스	기타 서비스
비중	1969/70	33.3	9.8	0.8	1.3	2.7	0.1	0.2	1.7	6.0	4.5	7.3
	1990/01	42.5	11.5	0.9	1.2	4.3	0.1	0.4	3.9	7.8	6.3	7.1
	2013/14	59.9	14.2	1.3	0.9	5.6	0.1	4.3	10.0	10.6	5.4	7.4
성장률	1969/70~1989/90	5.5	5.1	5.2	3.8	6.7	5.7	6.2	8.9	5.4	6.2	4.0
	1990/91~2013/14	8.1	7.5	8.1	5.1	7.7	4.7	18.6	11.0	8.0	5.8	6.7

주: National Account Statistics(NAS) 2004-05 요소비용(factor cost) 기준.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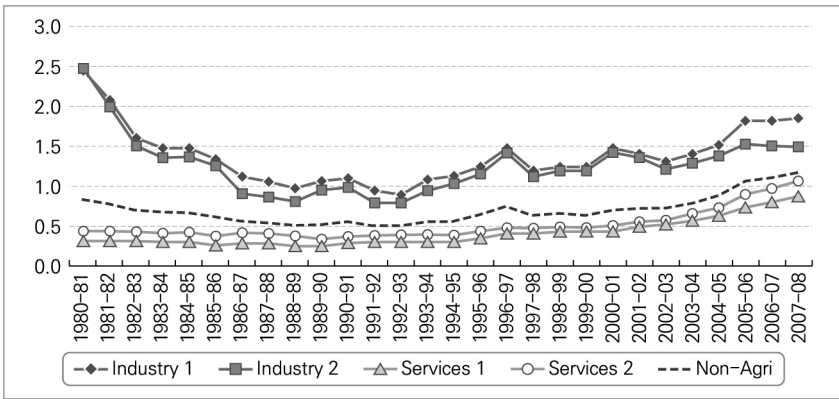
않았던 통신, 은행·보험업, 부동산 및 산업 부문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통신 부문은 1990/91년 이후 연평균 18.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화와 더불어 인도가 전세계 IT 아웃 소싱의 중착점 역할을 함으로써 IT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통신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도에서 고성장 추이를 보인 서비스업의 경우 IT, 통신, 은행업 등 숙련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확대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도 모디 정부는 서비스업의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디아’, ‘스킬 인디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산업별·소유구조별 추이

인도 산업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1980년대 국가 주도의 공업화로 인해 전체 산업에서 공식(Organized) 민간분야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1991년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민간부문이 인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확대되었다. 특히 소유구조의 변화는 2차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198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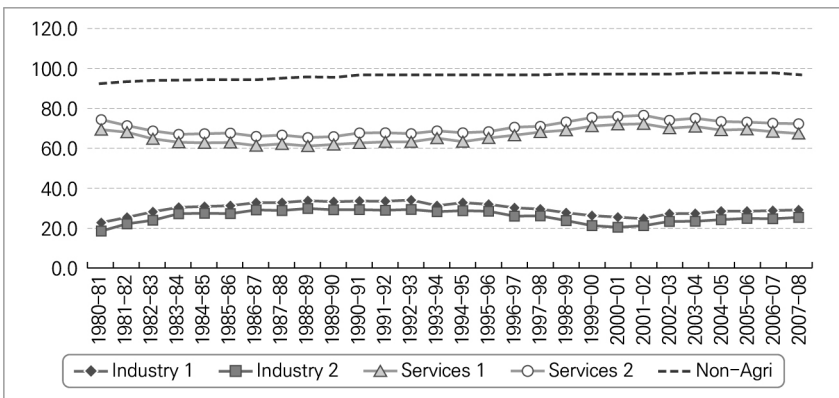
그림 2-6. 산업별 공식 민간부문 대 정부부문 비율



주: Industry 1은 2차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Industry 2는 Industry 1에서 건설을 제외; Service 1은 도소매, 숙박 및 요식업, 운송, 통신, 금융 등 모든 서비스업; Service 2는 Service 1와 건설업을 나타냄.
 자료: Surajit Mazumdar(2012), p. 19 직접 인용.

년 공식 민간부문의 2차 산업은 정부부문의 2.5배 규모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1 배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2차 산업의 공식 민간부문이 정부부문 규모의 2배 수준(2007/08년 기준)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그림 2-7. 정부부문의 국내순생산 산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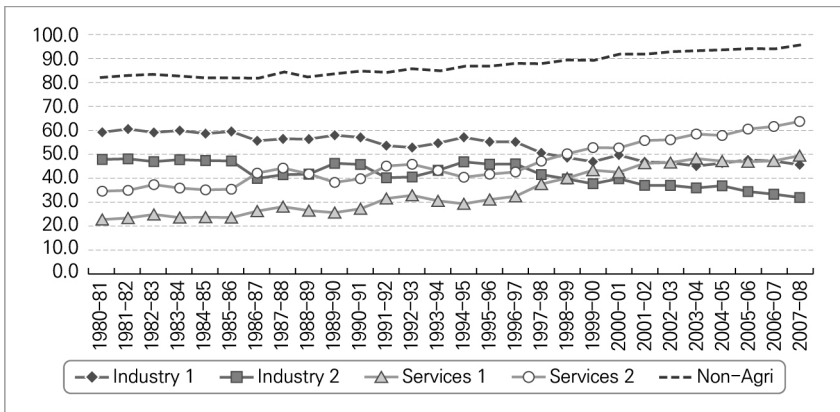
주: Industry 1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Industry 2는 Industry 1에서 건설을 제외; Service 1은 무역, 숙박 및 요식업, 운송, 통신, 금융 등 모든 서비스업; Service 2는 Service 1와 건설업을 나타냄.
 자료: Surajit Mazumdar(2012), p. 18 직접 인용.

소유구조별 산업구조 추이를 보면, 정부부문의 산업별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비해 공식 민간부문의 산업별 비중은 1980/81년부터 2007/08까지 큰 변동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서비스 비중은 2차 산업 비중을 역전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1991년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은 민간부문 중심의 서비스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산업별 고용 비중은 정부부문의 경우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는데, 2011/12년 서비스업 비중은 75%이며, 제조업은 6%, 제조업 제외 2차 산업 16%, 농업 3%로 나타났다. 반면 2011/12년 민간부문의 비중은 1차 산업 8%, 제조업 46%, 서비스업 4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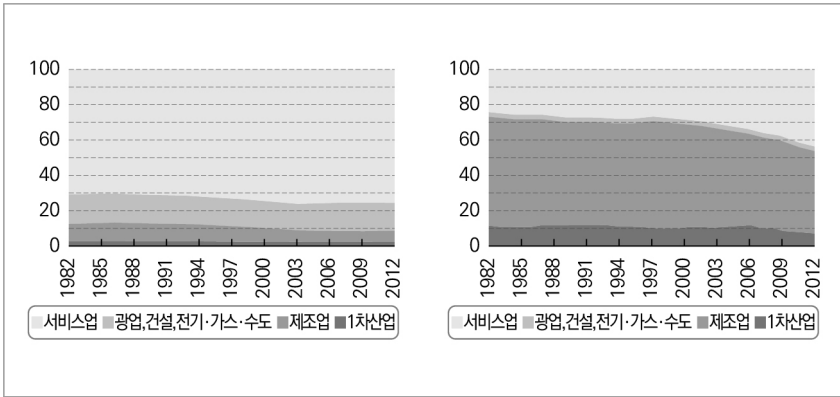
정부부문의 경우 고용 비중의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민간부문의 추이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2011/12년과 1981/82년의 정부부문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은 4%p 감소, 서비스 비중은 4%p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을 제외한 2차 산업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다. 민간부문 고용의 경우 1981/82년과 비교해 보면 1차 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각각 4%p, 15%p 감

그림 2-8. 민간 공식부문의 국내 순생산 산업별 비중



주: Industry 1은 2차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Industry 2는 Industry 1에서 건설을 제외; Service 1은 도소매, 숙박 및 요식업, 운송, 통신, 금융 등 모든 서비스업; Service 2는 Service 1와 건설업을 나타냄.
 자료: Surajit Mazumdar(2012), p. 18 직접 인용.

그림 2-9. 소유구조별 · 산업별 고용 비중 추이



주: 왼쪽 그림은 정부부문이고, 오른쪽 그림은 민간부문을 나타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소한 반면 서비스 비중이 19%p 증가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고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도 개혁 · 개방 기인 1991년 이후 정부부문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차 산업의 정부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분야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부부문의 제조업 고용은 1991/92년부터 2001/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2% 감소했으며, 2001/02년부터 2011/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2.3%가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민간부문 고용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금융 · 보험 · 부동산과 운송 · 창고 · 통신은 2001/02년부터 2011/12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10.9%, 17.2%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였다. 2차 산업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1981/82년에서 1991/92년까지 연평균 0%, 1991/92년에서 2001/02년까지 연평균 0.6%, 2001/02년에서 2011/12년에는 연평균 1.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표 2-16. 소유구조별 산업별 평균 고용 증가율

(단위: %)

구분	기간	전체	1차 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매·소매·무역	금융·보험·부동산	운송·창고·통신	커뮤니티·사회·개인서비스
정부	1981/82~2011/12	0.4	0.1	0.9	-1.1	0.6	-0.9	1.3	2.0	-0.3	0.7
	1981/82~1991/92	2.2	2.2	1.9	2.2	3.0	0.6	3.0	5.0	1.2	2.4
	1991/92~2001/02	-0.2	-1.7	-1.4	-3.2	0.1	-1.1	0.0	0.1	-0.2	0.5
	2001/02~2011/12	-0.6	-0.2	2.2	-2.3	-1.2	-2.1	0.9	1.0	-1.9	-0.7
민간	1981/82~2011/12	1.6	0.2	0.2	0.7	1.9	1.7	2.6	4.3	7.9	2.3
	1981/82~1991/92	0.6	0.6	-1.9	0.0	1.3	0.8	0.7	-1.0	3.1	2.3
	1991/92~2001/02	0.7	-0.6	-4.4	0.6	0.5	-3.3	1.2	3.5	3.9	1.3
	2001/02~2011/12	3.6	0.8	7.3	1.3	4.0	7.7	6.0	10.9	17.2	3.5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3) 산업별·지역별 추이

가) 1차 산업

1980/81년부터 2014/15년 기간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게 축소된 지역은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연방직할지로 55.6%에 달했던 비중이 약 47%p 낮아진 8.9% 까지 축소되었다. 같은 시기에 시킴, 하리아나 주의 1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약 40%p, 오디샤 주의 경우 35%p, 트리푸라, 라자스탄, 펀잡,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약 30%p 내외 축소되었다. 비중의 변화율이 가장 큰 주는 안다만 니코바르제도로 비중이 84% 감소되었으며, 그 뒤로 텔리(83%), 고아(81%), 시킴(81%), 푸두체리(80%), 케랄라(75%), 마하슈트라(75%), 하리아나(74%) 순으로 비중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나갈랜드 주의 경우 농업 비중 축소폭은 3%p, 축소비율은 16% 이다. 두 번째로 축소비율이 낮은 아루나찰프라데시

표 2-17. 주별 1차 산업 비중 추이

(단위: %)

지역	1980/81	1990/91	2000/01	2010/11	2014/15
전체	35.7	29.5	22.3	14.6	16.8
안드라프라데시	42.9	36.7	30.2	24.0	24.0
아루나찰프라데시	44.3	42.5	34.4	29.4	29.2
아쌘	45.4	38.3	33.9	22.4	20.2
비하르	46.0	38.2	38.8	23.0	18.9
차티스가르	-	-	19.9	19.7	18.6
고아	19.1	12.1	11.0	4.4	3.6
구자라트	37.3	25.2	15.0	13.3	13.3
하리아나	53.4	44.9	30.4	16.8	14.1
히마찰프라데시	46.8	36.9	24.8	18.8	18.6
잠무 카슈미르	-	-	30.1	22.9	17.5
자하르칸드	-	-	17.6	14.0	16.6
카르나타카	43.1	32.6	28.3	17.0	14.7
케랄라	36.6	31.2	22.0	10.0	8.8
마드라프라데시	48.9	41.0	23.6	22.5	30.3
마하라슈트라	26.7	21.4	15.3	8.9	6.7
마니푸르	46.3	35.2	29.9	21.2	19.7
메갈라야	36.7	24.7	23.0	16.7	15.5
미조람	-	-	19.9	21.0	18.1
나갈랜드	29.5	27.9	31.5	27.4	24.7
오디샤	50.2	35.8	28.8	18.0	15.4
편잡	49.1	47.1	36.6	23.9	20.2
라자스탄	48.9	45.0	28.4	23.3	19.4
시킴	48.8	42.0	21.6	8.3	9.5
타밀나두	24.3	21.6	16.7	8.3	7.1
텔랑가나	-	-	-	14.8	12.8
트리푸라	52.4	40.4	25.5	25.1	22.1
우타르프라데시	50.4	41.2	33.9	23.0	21.6
우타라칸드	-	-	27.5	11.3	9.4
웨스트벵갈	30.1	29.0	29.0	18.3	15.8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55.6	58.8	32.6	10.0	8.9
찬디가르	-	-	1.0	0.5	0.3
델리	4.0	3.0	1.3	0.8	0.7
푸두चे리	18.6	12.8	6.6	4.6	3.8

주: 1)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고아,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케랄라,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트리푸라의 2014/15년 값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아 2013/14년 값을 사용함.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주가 34%인 것을 고려한다면 나갈랜드 주의 농업 비중 변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1차 산업의 비중 축소가 보다 가속화되었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서비스를 포함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 간 산업구조가 보다 상이하게 되었으며, 지역간 성장격차가 커졌다. Bhattacharya & Sakthival(2004)는 인도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주들과 그렇지 않은 주들 간의 산업 성장 격차가 보다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 2차 산업

시킵, 히마찰프라데시, 마니부르, 오디샤, 트리부라, 찬디가르는 198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특히 시킵주와 히마찰프라데시의 경우 주 규모가 작은 주로 1990년대 이후 인도의 제약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제조업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2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⁴²⁾

2차 산업의 비중이 변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우타르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드야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고아, 나갈랜드가 있다. 한편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웨스트벵갈, 델리, 푸두체리 등의 경우 2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특히 2차 산업 비중의 변화는 제조업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시킵으로 2000/01년 3.8%에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이 2013/14년 33.7%까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주는 우타라 칸드로 2000/01년 11.4%에서 2013/14년 29.3% 확대되었다. 규모가 큰 인도의

42) ASI(Annual Survey of Industries) 2013-2014에 의하면 시킵주의 산업은 96.13%가 의약품(89.7%), 화학제품(6.43%)으로 구성, 히마찰프라데시의 경우 의약품(33.51%), 화학제품(15.9%)으로 구성.

표 2-18. 주별 2차 산업 비중 추이

(단위: 천만 루피, %)

지역	1980/81	1990/91	2000/01	2010/11	2014/15
전체	25.7	27.6	27.3	27.9	30.9
안드라프라데시	20.1	22.2	22.6	21.6	19.6
아루나찰프라데시	24.4	24.3	19.1	32.4	30.8
아삼	14.7	17.0	18.0	23.0	23.0
비하르	26.4	31.3	10.7	21.2	18.5
차티스가르	-	-	37.8	41.9	41.9
고아	35.0	36.1	42.0	43.1	33.2
구자라트	30.4	37.5	40.3	41.0	38.2
हरियाणा	19.8	24.4	27.9	29.6	27.0
हिमाचलप्रदेश	20.1	25.4	36.6	41.3	38.0
जम्मू कश्मीर	-	-	23.3	25.2	25.9
जहarkhand	-	-	40.6	42.0	36.1
कर्नाटक	23.3	26.2	24.2	29.5	26.2
केरल	25.3	24.0	21.0	22.4	20.3
मद्राप्रदेश	24.3	28.5	25.8	30.3	24.6
महाराष्ट्र	36.0	36.3	27.6	30.7	28.6
मणिपुर	10.4	13.7	21.3	29.7	25.8
मेगhalaya	19.5	21.8	24.0	29.4	30.0
मिजoram	-	-	16.5	16.4	15.7
नागaland	16.2	26.4	13.2	12.7	13.8
ओडिशा	19.5	26.7	24.5	34.3	33.4
पंजाब	20.0	24.2	23.1	30.8	27.0
राजस्थान	20.9	22.2	27.8	29.7	30.6
सिक्किम	20.9	18.7	23.2	59.2	60.6
तमिलnadu	35.0	35.2	30.5	31.5	28.0
तेलंगana	-	-	-	28.7	24.3
त्रिपुरा	10.1	9.4	21.3	23.2	23.1
उतारप्रदेश	16.9	22.0	22.7	24.2	20.8
उतारकांड	-	-	22.5	36.3	40.3
वेस्टबंगाल	31.2	29.4	18.2	20.0	18.7
अंडमान निकोबारकेन्द्र	17.8	8.4	11.6	24.6	21.9
चण्डीगढ़	-	-	19.4	13.6	12.3
दिल्ली	25.3	28.9	19.3	12.1	9.7
पुदुचेरी	54.2	57.4	47.9	41.0	31.1

주: 1)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고아,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케랄라, 마니पुर, 미조람, 시킴, 트리पुर라의 2014/15년 값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아 2013/14년 값을 사용함.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표 2-19. 주별 제조업 비중 추이

(단위: %)

지역	1980/81	1990/91	2000/01	2010/11	2014/15
전체	13.9	15.1	15.5	16.2	17.7
안드라프라데시	12.3	13.0	11.5	10.4	10.5
아루나찰프라데시	6.3	5.8	3.2	2.3	2.3
아쌘	7.3	6.9	6.4	8.1	7.5
비하르	15.2	18.0	5.8	5.9	4.1
차티스가르	-	-	14.2	16.0	14.4
고아	24.6	28.5	30.8	25.2	20.3
구자라트	22.0	29.6	29.4	28.1	24.6
하리아나	14.5	20.4	19.9	19.5	16.9
히마찰프라데시	4.6	10.4	12.2	17.7	16.5
잠무 카슈미르	-	-	4.4	7.6	7.7
자하르칸드	-	-	17.7	21.6	15.4
카르나타카	15.1	18.7	13.8	17.3	15.3
케랄라	14.5	15.1	9.5	7.9	7.2
마드라프라데시	13.8	17.3	12.8	12.7	9.6
마하라슈트라	27.6	28.4	19.1	21.6	18.5
마니푸르	4.8	6.1	7.0	5.2	4.6
메갈라야	3.9	4.8	1.8	6.7	6.7
미조람	-	-	1.6	1.1	1.7
나갈랜드	2.7	8.2	1.7	1.8	1.7
오디샤	11.5	13.4	9.9	14.4	12.6
편잡	11.7	16.6	14.9	20.6	18.3
라자스탄	11.8	11.9	12.9	12.6	14.8
시킴	6.1	5.1	3.8	37.1	33.7
타밀나두	27.2	25.0	20.1	21.2	18.3
텔랑가나	-	-	-	16.2	14.3
트리푸라	5.5	4.6	4.1	3.4	2.5
우타르프라데시	10.1	15.2	12.5	14.1	11.6
우타라칸드	-	-	11.4	26.3	29.3
웨스트벵갈	21.7	18.8	10.2	11.2	9.7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10.8	8.5	3.0	0.8	0.6
찬디가르	-	-	9.7	6.4	5.3
델리	18.4	21.3	10.4	6.0	4.8
푸두체리	17.5	24.1	41.6	31.2	22.9

주: 1)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고아,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케랄라,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트리푸라의 2014/15년 값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아 2013/14년 값을 사용함.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주요 주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구자라트 주로 2013/14년 제조업 비중은 24.6%이며, 시킴이 제약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데 반해 구자라트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⁴³⁾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주는 연방직할지를 제외하고 나갈랜드(1.7%), 미조람(1.7%), 아루나찰프라데시(2.3%), 트리푸라(2.5%), 비하르(4.1%), 마니푸르(4.6%), 메갈라야(6.7%), 궤탈라(7.2%), 아쌘(7.5%) 등 동북부 지역의 주이다. Chakravorty and Lall(2007)은 특히 인도의 발전된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혜택을 보다 많이 받았으나, 동북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 때문에 산업화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⁴⁴⁾

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된 주는 안다만 니코바르 연방직할지와 푸두체리 연방직할지이다. 연방직할지와 델리 인근인 하리아나 주, 금융 중심지인 마하슈트라 주를 제외하면 서비스업이 크게 확대된 지역은 제조업 및 2차 산업의 성장이 저조했던 비하르 등 동북부 지역의 주가 대부분이다. 동북부 지

표 2-20. 주별 3차 산업 비중 추이

(단위: 천만 루피, %)

지역	1980/81	1990/91	2000/01	2010/11	2014/15
전체	37.6	42.5	50.5	57.5	52.3
안드라프라데시	37.0	41.2	47.2	54.3	56.5
아루나찰프라데시	30.9	33.1	46.5	38.2	40.0
아쌘	39.9	44.7	48.1	54.6	56.8
비하르	27.7	30.5	50.5	55.7	62.6
차티스가르	-	-	42.4	38.4	39.5
고아	45.8	51.8	47.0	52.5	63.2
구자라트	32.3	37.2	44.7	45.8	48.6

43) ASI(Annual Survey of Industries) 2013-2014에 의하면 구자라트의 산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24.74%), 화학제품(19.6%), 금속(15.85%)으로 구성

44) 동북부의 경우 오리샤, 서부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등의 예외 지역이 존재.

표 2-20. 계속

(단위: 천만 루피, %)

지역	1980/81	1990/91	2000/01	2010/11	2014/15
하리아나	26.8	30.7	41.7	53.6	58.9
히마찰프라데시	33.1	37.8	38.6	39.9	43.3
잠무 카슈미르	-	-	46.6	51.9	56.6
자하르칸드	-	-	41.9	44.0	47.2
카르나타카	33.6	41.2	47.6	53.5	59.1
케랄라	38.1	44.8	57.0	67.6	70.9
마드라프라데시	26.8	30.4	50.6	47.2	45.1
마하라슈트라	37.2	42.3	57.1	60.5	64.7
마니푸르	43.5	51.1	48.8	49.1	54.5
메갈라야	43.9	53.4	53.0	53.8	54.5
미조람	-	-	63.6	62.6	66.2
나갈랜드	54.2	45.7	55.4	59.9	61.5
오디샤	30.3	37.5	46.7	47.7	51.2
편잡	30.9	28.8	40.2	45.3	52.8
라자스탄	30.2	32.8	43.8	47.0	50.0
시킴	30.4	39.5	55.2	32.4	29.9
타밀나두	40.7	43.3	52.8	60.2	64.8
텔랑가나	-	-	-	56.5	62.9
트리푸라	37.5	50.1	53.1	51.7	54.8
우타르프라데시	32.8	36.8	43.4	52.8	57.7
우타라칸드	-	-	50.0	52.4	50.3
웨스트벵갈	38.7	41.5	52.8	61.6	65.5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27.1	32.6	55.8	65.4	69.2
찬디가르	-	-	79.5	85.9	87.4
델리	70.7	68.1	79.3	87.1	89.7
푸두체리	27.1	29.7	45.4	54.4	65.1

주: 1)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찬디가르, 고아, गुजरात, 히마찰프라데시, 케랄라,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트리푸라의 2014/15년 값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아 2013/14년 값을 사용함.

2) 1차 산업은 농업·임업·수산업, 2차 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전기·가스·수도, 3차 산업은 운송, 숙박, 정부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6. 5. 12).

역의 경우 1차 산업의 축소된 비중을 서비스업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2차 산업의 성장이 부진했다.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2. 기업특성 분석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산업정책과 산업구조를 통해 인도 산업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물론 데이터의 시기와 연구목적은 상이하나 이러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별 기업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며, 특히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도 기업의 부문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가. 데이터

본 연구는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을 위해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

글상자 3-1. CMIE의 Prowess 데이터베이스

Prowess 데이터베이스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과 상당수의 비상장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데이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금융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Prowess는 인도 국가산업분류(NIC: National Industry Classification) 체계에 따라 기업들을 분류하는데,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부터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및 모든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3차 산업에 이르는 자세한 분류체계를 제공한다. NIC는 전체 산업을 21개 부문(section)으로 구분하고 이를 88개의 산업분야(Division)로 정의한다. 88개 산업분야는 다시 238개의 산업 및 1304개의 세부산업으로 분류된다(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 2008, pp. 9-13).

대다수의 산업관련 데이터는 산업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Prowess 데이터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Prowess는 소유구조(Ownershi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연구자는 한 산업의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점유구조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방면의 산업분석이 가능하다.

Prowess 데이터의 유용성은 Chari and Gupta(2008)의 비교분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Prowess 데이터와 인도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례산업설문조사(the Annual Survey of Industries, ASI) 데이터를 비교하였는데, ASI는 제조업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반복 횡단면 데이터(Repeated Cross-Sectional Data)를 수집하는 반면, Prowess 데이터는 제조업 포함 모든 산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각종 데이터 분석에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 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는 세부산업의 비교 시 Prowess에 속한 기업들의 총매출이 ASI의 약 77%를 차지하므로 Prowess 데이터의 대표성 문제는 크지 않음을 강조하였다(Alfaro and Chari 2009, p. 14).

인도의 기업들은 주로 공식·비공식(formal, informal sectors), 조직화·비조직화(organized, unorganized sectors), 또는 등록·비등록 부문(registered, unregistered sectors)으로 구분된다(이웅 외 2013, p. 125). 조직화 부문은 1, 2, 3차 모든 산업의 기업들 중 예산회계 서류나 보고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정과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을 포함한다(Sahoo 2010, p. 2). 반면 비조직화 부문에는 기업의 활동과 이에 대한 각종 통계의 수집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속해 있다. 1956년 제정된 인도 회사법(the Company Act of 1956)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생산과 판매 등의 기본 정보를 인도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조직화 또는 등록 부문의 정의가 보다 이해하기 쉽다. 제조업에서 조직화 부문에 속하는 기업은 10명 이상을 고용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Saha, Sen, and Maiti 2013, p. 6).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1948년 제정된 인도 공장법(Factories Act of 1948)에 따라 정부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조직화와 등록 부문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공식부문은 조직화 또는 등록 부문을 말하며, 비공식부문은 비조직화 또는 비등록 기업들을 포함한다.

이터는 인도 주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CMIE(Centre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의 Prowess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이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 알 수 있는데, Prowess의 데이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인도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기업들의 법인세 총합은 인도 전체 법인세의 약 75%, 이 기업들로부터 징수되는 간접세(exercise taxes)는 인도 전체 간접세의 95% 이상이다.⁴⁵⁾

본고에서 사용한 Prowess 데이터는 조직화 부문(Organized Sector)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조직화 부문이란 정부에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있는 등록기업(registered company)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조직화 부문(Unorganized Sector)에 속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정보는 이용하지 못하였다.⁴⁶⁾

45) Alfaro and Chari(2009), p. 13.

46) 인도의 비조직화 부문 또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규모는 대략 GDP의 50% 정도를 차지한다(Kalyani 2016, p. 79).

나. 주요변수

본 연구는 인도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주요 변수를 추출 또는 산출하여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업특성 관련 변수는 기업규모, 비용, 이윤, 부채의 4가지 항목으로 나뉜다.⁴⁷⁾ 이와는 별도로 회귀분석을 통한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생산성의 추정값을 구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1) 기업규모

본고는 기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총수입(total income)과 총자산(total asset)을 이용하였다. 총수입은 한 기업이 일정 회계연도 기간(1년) 창출한 모든 종류의 수입을 합한 값이다.⁴⁸⁾ 총수입은 지속적인 영업활동 외에도 중단된 사업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임시적이며 예외적인 수입을 전부 포함한다. 총수입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투자활동, 판매 및 투자 외의 행위로부터의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또한 총수입은 현금 유동성(cash flow)의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괄한다. 총수입은 총매출(sales), 금융서비스를 통한 수입(income from financial services), 기타수입(other income), 전기 및 임시수입(prior period and extraordinary income)으로 구분된다.⁴⁹⁾ 생산과

47) 본고에서 설명하는 변수들의 정의는 CMIE(2016)의 내용을 참고하였다(CMIE 2016, "ProwessIQ Database Directory").

48) CMIE(2016), p. 388.

49) 기업규모를 포함한 한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매출(sales)이 대표적이다. 총매출(sales)은 한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보상받는 금전적 대가로서 비금융 활동(non-financial activities)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CMIE 2016, p. 388). 즉, 총매출은 산업재화(industrial goods)를 판매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후 획득한 수입이다. 산업재화 판매 수입은 상품판매, 고철, 전기 등의 판매(sales of goods, scrap, electricity)와 하자보수, 건설, 도급으로 발생하는 수입 등을 포함한다. 한 기업이 수령한 금융혜택(fiscal benefits) 또한 총매출의 일부로 간주된다. 통상 제조업 분석에서는 총매출을 주로 사용하나, 본 연구는 금융권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총매출과 총수입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총수입만을 사용하였다.

영업을 포함한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상을 자산(asset)이라고 하며 총자산(total assets)은 한 기업이 회계기간 또는 연도의 마지막 날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동자산(current assets)과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의 총합이다.⁵⁰⁾

2) 비용

본고에서 채택된 비용 관련 변수는 총비용(total expenditure)과 총보수(Compensation to Employees)이다. 총비용은 한 기업이 일정 회계기간 동안 기업운영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의 총합이다. 총보수는 한 기업이 피고용자들(employees)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로 월급(Salary), 임금(Wage), 보너스 및 모든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포함한다.

3) 이윤

이윤 관련 변수로는 세전순이익(Profit Before Tax),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총고정자산(Gross Fixed Assets)이 채택되었다. 이윤을 나타내는 변수로 세전순이익이 사용되었으며, 투자관련 수익이 한 기업의 이윤에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총자산이익률과 총고정자산이 추가되었다.

세전순이익은 한 기업이 일정기간(회계연도 기간)에 취득한 당기순이익(Net Profit)이다.⁵¹⁾ 여기서 세전이란 세금을 포함한 여타 공제 전을 의미하며, 순이익은 회계순이익(Accounting Profit)이며,⁵²⁾ 총수입과 재고증감을 합한 값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나타낸다.⁵³⁾

50) 유동자산은 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며, 비유동자산은 일반적 기업운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판매 또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을 의미하며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일컫는다.

51) CMIE(2016), p. 960.

52) 세전순이익은 회계순이익(accounting profit)이며 경제학에서 통상 사용되는 이윤(economic profit)과는 구분된다.

53) 세전순익 = 총수입 + 재고증감 - 총비용 + 직접세.

ROA는 총자산 대비 순이익이며 총자산이 수익창출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⁵⁴⁾ 본고에서는 연간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사용하였다.

총고정자산은 한 회사의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고정자산의 합이다. 여기서 고정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산이며 영업활동에서 판매에 사용되는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고정자산을 수익성 관련 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이에 대한 축적이 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것이므로, 중장기적 수익성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4) 부채

본 연구는 부채 관련 변수로 총부채(Total Liabilities)와 유동비율(Current Ratio)을 채택하였다. 총부채는 한 기업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모든 금전상의 의무이다. 여기서 제3자란 주주(株主), 채권자, 정부를 말한다. 정부가 포함되는 이유는 유예된 세금도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Current Asset)을 유동부채(Current Liability)로 나누어 구하며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⁵⁵⁾⁵⁶⁾ 통상적으로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며 유동부채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부채이다.

54) ROA = 세전순익/ 총자산.

55) 김영규, 감형규(2014), p. 829.

56) 유동비율은 한 기업의 유동성(liquidity)과 지급능력(solvency)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비율로 2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ibid.*, p. 829).

2. 기업특성 분석

가. 개요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도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을 산업별, 소유구조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산업은 1, 2, 3차 산업과 금융 및 비금융으로, 소유구조는 공기업, 사기업, 민관합작기업으로, 지역은 5개 권역별로 각각 구분되었다. 세부 산업별 분석은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과 현재 인도 정부의 집중 육성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제조업이 선정되었다.

먼저 1, 2, 3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구분에 따랐다. 즉, 농림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제조업, 건설, 전력 산업 등은 2차 산업으로, 모든 서비스 관련 산업들은 3차 산업으로 구분되었으며 구체적인 분류방식은 [표 3-1]에서 보여준다.

금융과 비금융 산업의 분류에서 금융은 다시 은행과 비은행으로 분류된다. 소유구조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민관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기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지역 구분은 조충제 외(2010)에서 제시한 4대 권역 구분에 기타 권역이 추가되었다.⁵⁷⁾ 이 4대 지역구분은 인도권역위원회(Zonal Councils)의 권역구분에서 중부권역에 속해 있는 4개 주 중 경제비중이 낮고 문화적으로 북부지역과 유사한 우타르프라데시, 마드야프라데시, 우타르칸드를 북부권역에 포함시켰으며, 차티스가르는 지역적 성격에 따라 동부권역에 포함시켰다. 본고는 조충제 외(2010)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동북부 8개 주는 기타권역으로 분류하였다.⁵⁸⁾

57) 조충제, 최윤경, 송영철, 이순철(2010),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pp. 44~47.

58) 현재 인도의 지역구분은 29개 주(state)와 7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를 포함하여 총 36개로

표 3-1. 인도 국가산업분류(21개 부분 - 대분류)

부분	산업부문	분류
A	농업, 임업, 어업(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차
B	Mining and quarrying(광업)	2차
C	제조업(Manufacturing)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E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	
F	건설업(Construction)	
G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리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	운수업과 창고업(Transportation and storage)	3차
I	숙박 및 음식점업(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J	정보통신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	금융보험업(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Real estate activities)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P	교육서비스업(Education)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S	기타 서비스업(Other service activities)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U	국제 및 외국기관(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주: 이 표의 구분은 인도 국가산업 분류의 대분류(NIC 1st digit) 21개임.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2008), 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All Economic Activities).

나뉜다. Prowess에서의 구분은 36개가 아닌 38개인데 마하라슈트라 주의 대도시인 Pune와 타밀나두 주의 주도인 Coimbatore가 독립 지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두 도시들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각각 마하라슈트라와 타밀나두에 속하도록 조정하였다.

표 3-2. 인도 권역별 지역 구분

권역	주
북부권역	하리아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engal), 자하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기타 권역 (북동부 포함 나머지 지역)	나갈랜드(Nagaland), 마니푸르(Manipur), 메갈라야(Meghalaya), 아쌈(Assam), 트리푸라(Tripura),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미조람(Mizoram), 시킴(Sikkim)

자료: 조총제 외(2010), pp. 46~47,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먼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값으로 변환되었다. 보고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에서 제공하는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기준년도는 2011년이다.

본 연구가 수집한 데이터의 시계열 범위는 1996~2015년의 20년간이다. 저자는 연도별 데이터 대신, 모든 통계의 5년간 평균을 사용하여, 연도 시계열 데이터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고의 기간은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년의 4개 기간으로 구분된다. 1996~2000년 기간은 인도가 1990년대 초 개혁개방을 단행한 후를 나타내며, 2001~2005년 기간은 인도의 본격적인 고성장 기간이다. 2006~2010년 기간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포함하며, 2011~2015년 기간은 가장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다.

1996~2015년의 20년간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3-3]에서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기초통계는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이다. 표준편차 대신 변동계수를 채택한 이유는 변수 간 또는 부문별 변동성 비교를 위함이고 평균과 함께 중앙값을 포함함으로써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파

표 3-3. 기초통계(1996~2015년, 20년 평균)

변수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기업규모				
총수입	253,127	3,450.0	11.7	148.0
총자산	297,707	7,408.6	14.8	213.6
지출				
총비용	268,517	3,108.1	12.2	123.6
총보수	226,932	280.2	10.2	12.4
수익, 수익성				
세전순익	270,432	249.9	16.3	1.5
총자산이익률	251,170	0.02	8.10	0.01
총고정자산	247,972	2,204.0	11.8	97.5
부채, 위험				
총부채	299,358	7,367.73	14.89	210.18
유동비율	272,502	7.35	43.23	1.77

주: 1) 개, 백만루피, %, 배.

2) 총자산이익률과 유동비율은 비율이므로 총자산으로 가중평균을 구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약하였다.

[표 3-3]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값에 비해 평균이 매우 크며, 변동계수가 매우 큰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는 규모가 큰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동비율을 보면 평균은 7 이상으로 기업들의 유동성이 높아 보이지만 중앙값은 2 미만이므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유동성은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4]는 각 기간별 변수의 통계를 제공한다. 모든 변수들의 평균값은 2001~05년 기간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6~10년 기간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기간의 모든 값들이 전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값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평균과 중앙값의 급증세는 인도 기업들의 실적 및 규모가 2010년 이후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표 3-4. 변수의 기간별 기초통계

변수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996-2000				
총수입	37,347	2,628.6	8.3	271.1
총자산	39,174	5,804.1	10.1	357.2
총비용	37,743	2,524.9	8.3	280.8
총보수	35,015	218.5	7.4	16.4
세전순익	37,382	146.9	12.7	4.2
총자산이익률	37,214	0.01	7.89	0.01
총고정자산	36,966	1,841.8	9.2	167.8
총부채	39,206	5,799.2	10.1	356.6
유동비율	38,406	4.50	6.72	1.89
2001-2005				
총수입	58,655	2,665.4	10.9	150.3
총자산	66,105	5,502.4	13.4	211.6
총비용	61,096	2,460.6	11.0	146.5
총보수	53,429	225.4	9.0	11.7
세전순익	61,538	186.6	18.4	1.0
총자산이익률	58,225	0.02	8.35	0.00
총고정자산	57,797	1,876.9	11.7	106.5
총부채	66,338	5,484.6	13.5	209.9
유동비율	61,097	3.21	7.79	1.59
2006-2010				
총수입	90,763	2,993.5	12.2	102.2
총자산	112,220	5,893.3	15.5	154.7
총비용	97,537	2,628.2	12.8	75.4
총보수	79,726	241.5	10.3	9.4
세전순익	98,617	266.7	15.1	1.8
총자산이익률	89,839	0.02	7.61	0.01
총고정자산	89,383	1,790.6	13.0	68.7
총부채	112,901	5,856.6	15.5	152.2
유동비율	100,272	5.30	29.99	1.49
2011-2015				
총수입	66,362	5,687.3	10.9	183.0
총자산	80,208	13,614.9	13.2	288.1
총비용	72,141	5,005.9	11.4	135.7

표 3-4. 계속

변수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총보수	58,762	463.0	9.7	19.5
세전순익	72,895	375.0	15.5	1.1
총자산이익률	65,900	0.01	7.83	0.01
총고정자산	63,826	3,667.5	10.5	117.6
총부채	80,905	13,500.3	13.3	279.8
유동비율	73,424	10.92	33.08	1.28

주: 1) 개, 백만루피, %, 배.

2) 총자산이익률과 유동비율은 비율이므로 총자산으로 가중평균을 구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

하지만 유동비율의 중앙값 추이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996~2000년 기간 유동비율의 평균 중앙값은 1.89로 안정적 유동성의 기준인 2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하락세를 보이며 2011~15년 기간 평균 중앙값은 1.28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상당수의 인도 기업들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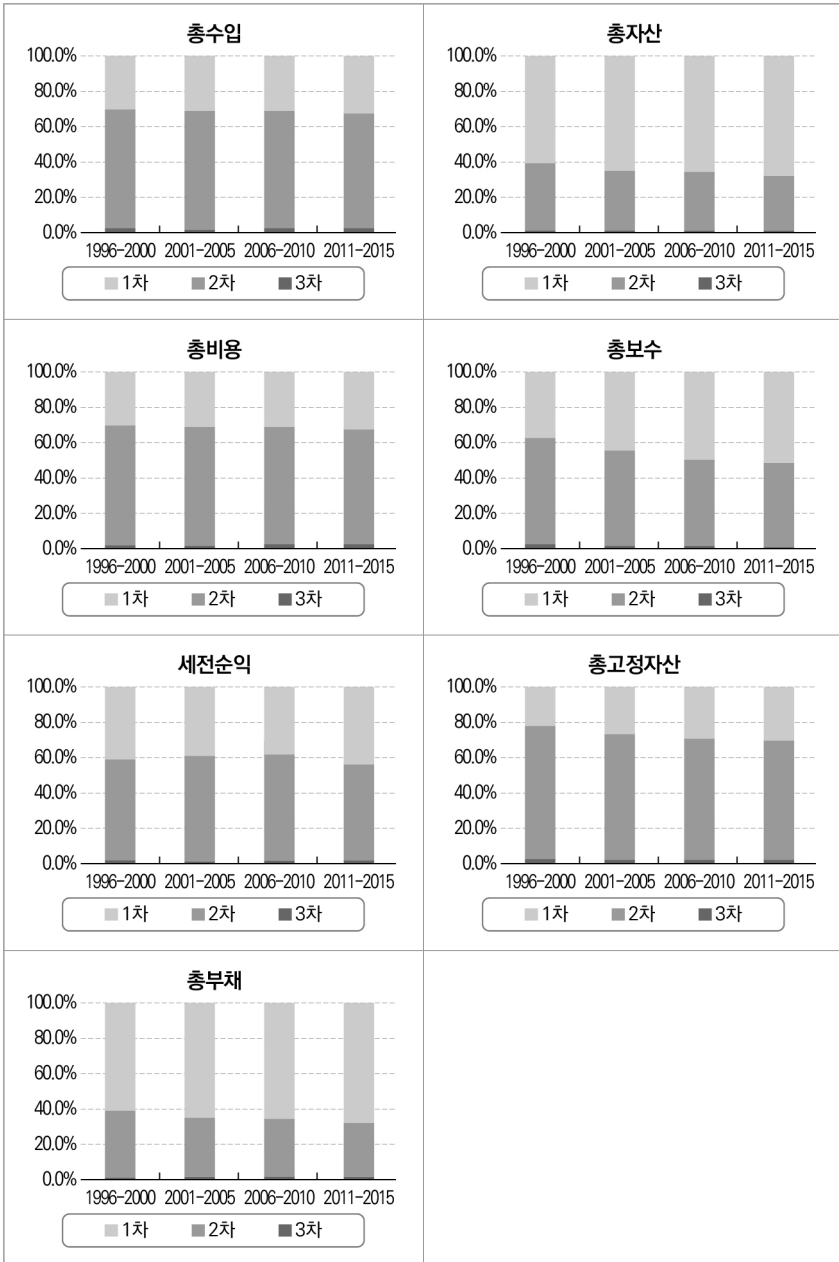
나. 산업별 비교

1) 1, 2, 3차 산업

[그림 3-1]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지출에 대한 변수인 총비용과 총보수, 이윤 및 수익성을 보여주는 세전순이익, 총고정자산, 채무관련 위험을 알 수 있는 총부채에 대한 기간별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1996~2000년 ② 2001~05년 ③ 2006~10년 ④ 2011~15년의 4개로 구분된다.

전체 총수입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차 산업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15년 평균 2.1%를 차지하였으며, 2차 산업의 비중도 1996~2000년 기

그림 3-1. 주요 변수의 1, 2, 3차 산업별 비중에 대한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간 66.9%에서 2011~15년 기간 다소 감소한 65.7%를 기록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 또한 20년간 1.6% 상승하여 2011~15년 기간 32.2%를 나타냈다.

총자산은 총수입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2차 산업의 비중이 30% 이상이었으며, 1차 산업의 비중은 1% 대로 매우 낮았다. 1996~2000년 기간 총자산의 60.6%를 차지했던 3차 산업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1~15년 기간 67.7%를 차지하였다.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38.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1~15년 기간 31.2%를 기록하였다. 총자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1~15년 기간 1.1%를 보였다.

총비용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이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년 기간 동안 1.5% 상승하였다. 2011~15년 기간 기준 총비용의 전체 표본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2.1%, 66.2%, 31.6% 이다.

총비용과는 달리 피고용자들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의 합인 총보수는 20년 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총보수에 대한 1차 산업의 비중은 1996~2000년 2.2%에서 2011~15년 1.5%로 감소하였다. 2차 산업의 비중의 하락이 보다 두드러지는데, 20년 기간 동안 13.4p% 감소하여 2차 산업이 총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5년 평균 47.3%를 기록하였다.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1996~2000년 기간 평균 37.1%에서 2011~15년 기간 51.3%로 14.1%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세전순익에 대한 비중은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2011~15년 기간 1, 2, 3차 산업의 평균 비중은 각각 1.9%, 54.6%, 43.6% 이었다.

총고정자산도 1, 2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인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1차 산업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평균 2.4%에서 2011~15년 기간 1.5%로 감소하였고, 2차 산업도 같은 기간 75.4%에서

68.4%로 7%p 감소하였다.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년 기간 7.9%p 증가하여 2011~15년 평균 30.1%를 나타냈다.

총부채의 경우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1, 2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1차 산업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1.3%에서 2011~15년 기간 1.1%로 소폭 감소했고, 2차 산업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8.0%에서 31.2%로 6.8%p 하락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년 기간 동안 60.6%에서 67.7%로 7.1%p 상승했다.

[표 3-5]는 총수입에 대한 1, 2, 3차 산업별 주요 통계를 5년 기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총수입 평균은 1996~2000년 기간에 비해 2001~2005년 기간 동안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2010~15년에는 모든 산업의 평균이 대폭 증가했다. 20년간 평균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이 187%(3,269 → 9,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

표 3-5. 총수입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043	2,310.4	3.0	388.9
	2001~2005	1,666	1,932.3	3.4	255.8
	2006~2010	2,417	2,430.3	4.2	204.0
	2011~2015	1,635	4,779.1	4.6	453.9
2차	1996~2000	20,108	3,269.4	8.2	495.0
	2001~2005	26,410	3,930.6	10.1	452.8
	2006~2010	36,178	5,004.7	10.9	494.0
	2011~2015	26,085	9,384.7	9.7	848.3
3차	1996~2000	16,196	1,855.3	7.2	73.8
	2001~2005	30,579	1,613.8	9.5	29.4
	2006~2010	52,168	1,630.7	9.8	20.6
	2011~2015	38,642	3,207.2	8.9	37.0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음으로 1차 산업이 107%, 3차 산업이 73%를 나타냈다.

데이터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변동계수를 보면 2차 산업의 값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3차 산업과 1차 산업의 순이다. 2006~10년 기간까지 모든 산업의 변동계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1~15년 기간에는 소폭 감소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중앙값도 평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2006~10년 기간에 비해 2011~15년 기간의 중앙값이 대폭 증가한 것은 평균의 변화와 일치한다.

전 기간에 걸쳐 총수입의 평균은 2차 산업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차와 3차의 순서였다. 3차 산업 대비 1차와 2차 산업 총수입 평균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1996~2000년 기간 각각 1.2배와 1.8배였다. 1차 산업 평균의 상대적 크기는 2011~15년 기간 1.5배로 전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차 산업 평균의 3차 산업 대비 상대값은 2.9배로 급증했다.

3차 산업과 비교한 1, 2차 산업의 중앙값에 대한 상대값은 산업 간 평균의 차이보다 중앙값의 차이가 훨씬 컸으며, 2차 산업의 상대적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3차 산업 대비 1차 산업의 상대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5.3배에서 2011~15년 기간 12.28배로 상승하였고, 2차 산업의 상대 중앙값은 같은 기간 6.7배에서 22.9배로 급증하였다.

산업별 총수입의 기간별 평균과 중앙값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입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차와 3차 순이었다. 특히 2차 산업의 총수입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최근에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 산업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큰데, 이는 표본기업들의 총수입 분포가 양의 왜도(positively skewed 또는 skewed to the right)를 가지며, 적은 수의 기업들이 매우 큰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총수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소수의 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평균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중앙값과 최빈값 순으로 통계 값의 크기가 정해

진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특히 3차 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 평균이 중앙값의 약 87배로 1차(약 10배)나 2차(11배) 산업에 비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3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기업들의 수가 1, 2차 산업에 비해 매우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6]은 총자산의 산업별 통계에 대한 기간별 추이를 제공한다. 총자산의 기간별 평균은 3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2차와 1차 순인 반면, 중앙값은 2차 산업이 가장 크고 1차와 3차 산업의 순이었다. 이러한 평균과 중앙값의 산업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3차 산업에 소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함을 보여준다.

3차 산업의 총자산 평균이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이 3차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 분포의 변동성 또한 평균과 같이 3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2차와 1차 순이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2011~15

표 3-6. 총자산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106	2,721.9	3.2	434.5
	2001~2005	1,832	2,093.2	4.1	262.4
	2006~2010	2,842	2,732.2	5.5	194.8
	2011~2015	1,839	6,127.3	5.0	453.5
2차	1996~2000	20,911	4,132.9	6.5	504.5
	2001~2005	28,332	4,277.4	7.8	397.5
	2006~2010	41,552	5,350.0	8.4	386.2
	2011~2015	29,943	10,784.9	1. 6.9	752.4
3차	1996~2000	17,157	8,035.7	10.4	209.7
	2001~2005	35,941	6,762.4	14.5	113.5
	2006~2010	67,826	6,357.1	17.6	81.7
	2011~2015	48,426	15,774.0	14.6	151.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년 기간에 평균과 중앙값이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변동계수는 모든 산업에서 2006~10년 기간에 비해 2011~15년 기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7]은 총비용의 산업별 통계를 보여준다. 총비용은 총수입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평균과 중앙값은 2차 산업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1차와 3차 순이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업의 총비용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급증하였다.

1차 산업의 총비용 평균은 2001~05년 기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였고 특히 2011~15년 기간의 평균은 전 기간 평균 대비 98% 증가하였다. 2차 산업의 평균은 20년 기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3차 산업의 평균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15년 기간 역시 96% 가량 증가하였다. 1차 산업의 중앙값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125% 급증하였다. 2차와 3차 산업의 중앙값도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였다. 2, 3차 산업의 변동계수 추이는 유사하였다. 첫 15년 기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

표 3-7. 총비용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051	2,236.7	2.9	399.3
	2001~2005	1,735	1,836.6	3.3	239.0
	2006~2010	2,556	2,199.3	4.1	166.9
	2011~2015	1,742	4,363.7	4.6	376.2
2차	1996~2000	20,284	3,170.7	8.3	511.3
	2001~2005	27,185	3,678.6	10.2	441.3
	2006~2010	38,174	4,505.7	11.3	424.3
	2011~2015	27,909	8,481.2	10.1	725.1
3차	1996~2000	16,408	1,747.0	7.3	78.2
	2001~2005	32,176	1,462.4	9.6	30.0
	2006~2010	56,807	1,391.3	10.2	14.0
	2011~2015	42,490	2,730.2	9.2	27.5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고 2011~15년 기간에는 전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1차 산업의 변동계수는 20년 기간 동안 점차 증가하여 1996~2000년 기간 2.9에서 2011~15년 기간 4.6을 기록했다.

20년 기간 동안 산업간 평균의 차이의 변화는 2차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996~2000년 기간 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의 평균 비용이 1.8배, 1차 산업의 평균 비용이 1.3배 컸으나, 이후 산업 간 평균 비용의 격차는 증가세를 보여 2011~15년 기간 2차 산업의 평균 비용이 3차 산업에 비해 3배 이상이었으며, 2차 산업은 1.6배를 기록했다.

변동계수의 산업 간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1996~2000년 기간 1차 산업 대비 2차와 3차 산업의 변동계수 크기는 각각 2.9, 2.5였으나 2011~15년 기간 각각 2.2와 2.0을 기록했다. 20년 기간 가장 큰 변화는 산업 간 중앙값의 차이이다. 1996~2000년 기간 3차 산업에 비해 1, 2차 산업의 중앙값은 각각 5.1배, 6.5배 컸으나 이후 급증하여 2006~10년 기간 각각 12.0배, 30.4배를 기록했다. 2011~15년 기간 산업 간 중앙값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3차 산업에 비해 1차 산업의 중앙값은 13.7배 컸으며, 2차 산업의 중앙값은 1차 산업 대비 26.3배를 나타냈다.

[표 3-8]은 총보수에 대한 각 산업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총보수도 모든 산업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총보수의 평균은 2차 산업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3차와 1차 산업 순이었다. 하지만 중앙값은 1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는 3차 산업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패턴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차 산업의 총보수 평균은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대폭 증가한 반면, 2차와 3차 산업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각 산업의 중앙값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각 산업의 변동계수 추이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과 중앙값에 비해 변화는 적은 편이다.

표 3-8. 총보수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1차	1996~2000	1,021	165.9	3.4	22.4
	2001~2005	1,580	132.0	3.7	15.9
	2006~2010	2,258	133.5	4.6	11.4
	2011~2015	1,539	257.9	4.6	31.1
2차	1996~2000	19,905	232.6	6.3	26.8
	2001~2005	25,982	249.0	6.9	24.9
	2006~2010	35,164	269.6	7.4	23.1
	2011~2015	25,455	493.0	5.9	49.0
3차	1996~2000	14,089	202.8	9.2	6.2
	2001~2005	25,867	207.5	11.3	3.7
	2006~2010	42,304	224.2	12.9	3.1
	2011~2015	31,768	450.0	12.5	6.3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년 기간 동안 산업 간 총보수 평균의 차이는 첫 10년간 형성된 뒤 이후에는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996~2000년 기간 1차 산업 대비 2차 산업의 총보수는 1.4였으며 3차 산업은 1.2를 나타냈다. 이후 2차와 3차 산업의 총보수 평균은 1차 산업에 비해 각각 1.9배와 1.7배였으며 이 격차가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20년 기간 동안 변동계수의 차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11~15년 기간 총보수의 변동계수는 1차 산업 대비 2차 산업이 1.3배, 3차 산업이 2.7배 높았다.

산업 간 증양값의 상대적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6~2000년 기간 3차 산업 대비 2차와 3차 산업의 증양값은 각각 4.3배와 3.6배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15년 기간 3차 산업에 비해 2차 산업의 증양값이 7.8배 컸으며, 2차 산업의 증양값도 5.0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에서는 1차 산업의 평균이 3차 산업의 평균보다 높았으나 총보수에서

는 3차가 1차보다 높았는데, 이는 3차 산업에서 피고용인에게 지불되는 총보수의 비중이 1차 산업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9]는 세전순익의 1, 2, 3차 산업별 통계를 기간별로 제공한다. 세전순익의 평균을 보면 1996~2000년 기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2차 산업의 평균이 2001~05년 기간에서 2006~10년 기간 급증세를 보였다. 1차 산업의 평균은 1996~2000년 기간에 비해 2001~05년 기간 급락했으며, 반대로 2006~10년 기간에는 급증했다. 전 기간 대비 1차와 3차 산업의 평균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 또한 눈에 띈다.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1차 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차와 3차 산업 순이었으나, 이후 순위가 변동되어 2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차와 3차가 뒤를 이었다. 특히 3차 산업의 세전순익 중앙값이 매우 작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 기업들의 순익이 매우 작으며 소수의 기업들이 매우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여준다. 1차 산업의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12.3을 기록

표 3-9. 세전순익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050	149.4	7.3	12.3
	2001~2005	1,743	67.1	11.4	2.3
	2006~2010	2,578	190.4	7.1	3.1
	2011~2015	1,747	286.5	8.9	4.1
2차	1996~2000	20,196	158.9	13.3	7.6
	2001~2005	27,230	267.9	17.6	4.6
	2006~2010	38,272	416.5	13.4	9.1
	2011~2015	28,082	508.8	13.8	7.3
3차	1996~2000	16,136	136.7	11.8	2.2
	2001~2005	32,565	132.9	16.5	0.3
	2006~2010	57,767	171.6	15.3	0.6
	2011~2015	43,066	303.7	16.6	0.4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했으나 이후 급락한 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2011~15년 기간 4.1을 나타냈다. 2차 산업의 중앙값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1~15년 7.3을 기록했으며, 3차 산업의 중앙값은 1996~2000년 2.2를 기록한 후 대폭 감소하여 2011~15년 0.4에 그쳤다. 변동계수는 2차와 3차 산업에 비해 1차 산업이 작은 편이나 모든 산업의 변동성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은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이익률)의 산업별 통계를 기간별로 제공한다. ROA의 산업별 평균은 2차 산업이 가장 높았으나 2011~15년 기간에 진입하면서 1차 산업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차와 3차 순이었다. 20년 기간 동안 3차 산업의 ROA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값은 2차 산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차와 3차 산업 순이었다. 변동계수는 3차 산업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1차와 2차 산업은 기간별로 순위가 변동하였는데, 3차 산업의 산포도(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분포한 정도)가 타 산업에 비해 크며, 이는 데이터의 변량(variation)이 고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10. ROA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038	0.02	-0.70	0.01
	2001~2005	1,658	0.01	7.34	0.00
	2006~2010	2,398	0.03	3.86	0.01
	2011~2015	1,632	0.03	4.11	0.01
2차	1996~2000	20,094	0.02	8.56	0.00
	2001~2005	26,370	0.03	5.15	0.01
	2006~2010	36,093	0.04	2.90	0.02
	2011~2015	26,035	0.02	3.98	0.01
3차	1996~2000	16,082	0.01	6.44	0.01
	2001~2005	30,197	0.01	17.28	0.00
	2006~2010	51,348	0.01	14.07	0.01
	2011~2015	38,233	0.01	12.15	0.00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1. 총고정자산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1차	1996~2000	1,078	1,505.3	3.5	194.8
	2001~2005	1,732	1,224.0	4.4	135.0
	2006~2010	2,585	1,096.4	4.7	104.8
	2011~2015	1,674	2,109.0	4.0	229.4
2차	1996~2000	20,636	2,489.1	8.7	271.7
	2001~2005	27,465	2,791.8	8.9	233.4
	2006~2010	38,414	2,863.9	10.1	208.2
	2011~2015	27,156	5,914.9	8.6	402.1
3차	1996~2000	15,252	993.2	7.6	62.1
	2001~2005	28,600	1,030.7	19.1	31.3
	2006~2010	48,384	981.6	18.8	18.2
	2011~2015	34,996	1,980.8	12.9	31.4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1]은 총고정자산의 통계를 기간별로 보여준다. 총고정자산의 평균과 증양값은 2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차와 3차 산업 순이었으며, 20년 기간 동안 이 패턴은 변화가 없었다. 변동계수는 1996~2000년 기간 2차 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차와 1차 산업 순이었으나 이후 3차 산업의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순위는 3차, 2차, 1차 순으로 변동되었다.

1차 산업의 평균은 첫 15년 기간 동안 감소하다가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 2차 산업의 평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역시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3차 산업의 평균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이 또한 2011~15년 기간 2배 이상 상승했다.

1차 산업의 증양값은 평균과 같은 추이를 보였으나, 2차 산업의 증양값은 평균과 달리 첫 15년간 감소하다가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3차 산업의 증양값도 2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11~15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고정자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산업의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이다. 모든 산업의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3차 산업의 경우 1996~2000년 기간 평균이 중앙값의 16.0배를 기록했고, 이후 급증하여 2011~15년 기간 평균이 중앙값보다 63배 큰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총고정자산의 소수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2]는 총부채의 1, 2, 3차 산업별 통계를 기간별로 제공한다. 총부채의 평균은 전 기간 3차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차와 1차 산업 순이다. 중앙값은 평균과 달리 20년 기간 동안 2차 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차와 3차 순이다. 변동계수는 3차가 가장 높았고 2차와 1차 산업의 순서였으며, 특히 3차 산업의 변동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든 산업의 평균과 중앙값은 2006~10년 기간에 비해 2011~15년 기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동비율의 산업별 통계에 대한 기간별 추이는 [표 3-13]이 보여준다. 전 기

표 3-12. 총부채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106	2,721.9	3.2	434.5
	2001~2005	1,833	2,092.2	4.1	262.3
	2006~2010	2,848	2,726.4	5.5	194.1
	2011~2015	1,853	6,076.1	5.0	448.7
2차	1996~2000	20,917	4,131.7	6.5	504.2
	2001~2005	28,382	4,270.2	7.8	395.9
	2006~2010	41,756	5,322.6	8.4	381.6
	2011~2015	30,186	10,702.5	6.9	735.0
3차	1996~2000	17,183	8,023.2	10.4	208.9
	2001~2005	36,124	6,731.0	14.5	112.3
	2006~2010	68,304	6,311.6	17.6	80.1
	2011~2015	48,866	15,631.2	14.7	145.9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3. 유동비율 산업별 통계 기간별 추이(1, 2, 3차 산업)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1차	1996~2000	1,085	2.44	1.22	1.81
	2001~2005	1,710	2.73	1.27	1.67
	2006~2010	2,566	8.56	8.05	1.69
	2011~2015	1,734	2.11	13.35	1.29
2차	1996~2000	20,787	1.93	2.34	1.92
	2001~2005	27,763	1.99	2.31	1.72
	2006~2010	39,973	2.23	8.52	1.69
	2011~2015	29,087	17.07	11.13	1.19
3차	1996~2000	16,534	6.15	6.30	1.83
	2001~2005	31,624	3.85	7.89	1.40
	2006~2010	57,733	6.81	28.16	1.27
	2011~2015	42,603	8.22	31.24	1.45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간에 걸쳐 모든 산업의 유동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유동비율의 중앙값이 전부 2 미만이라는 것인데, 과반수의 기업들의 유동성이 적정수준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값과 달리 유동비율의 평균은 1996~2005년의 10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2 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2011~15년 기간 2차 산업의 유동비율 평균이 8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수의 기업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보이는 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을 보면 2011~15년 기간을 제외하면 3차 산업의 유동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차와 1차 순이었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변동계수가 2011~15년 기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 또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적은 수의 기업들만이 높은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금융과 비금융 부문

[그림 3-2]는 금융과 비금융 기업들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간별 비중을 보여준다. 2011~15년 기간 기준 총수입에서 비금융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6%였으며 금융권 기업들의 비중은 14.4%였다. 금융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다. 전체 수입에서 비금융권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83.6%에서 2006~10년 기간 88.4%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15년 85.6%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 기업 중 은행을 제외한 기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며 2011~15년 3.5%를 기록했으며, 은행의 비중은 2011~15년 증가하여 10.9%를 나타냈다.

총자산 비중은 2011~15년 기준 금융권이 56.1%였으며 이 중 은행의 비중이 44.5%였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업이 11.6%를 기록했다. 20년 기간 동안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소폭 증가했고 비금융 기업의 비중은 다소 하락했다.

총비용의 비중은 비금융 기업들이 85% 이상을 점유했으며 금융기업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 기간 금융과 비금융의 비중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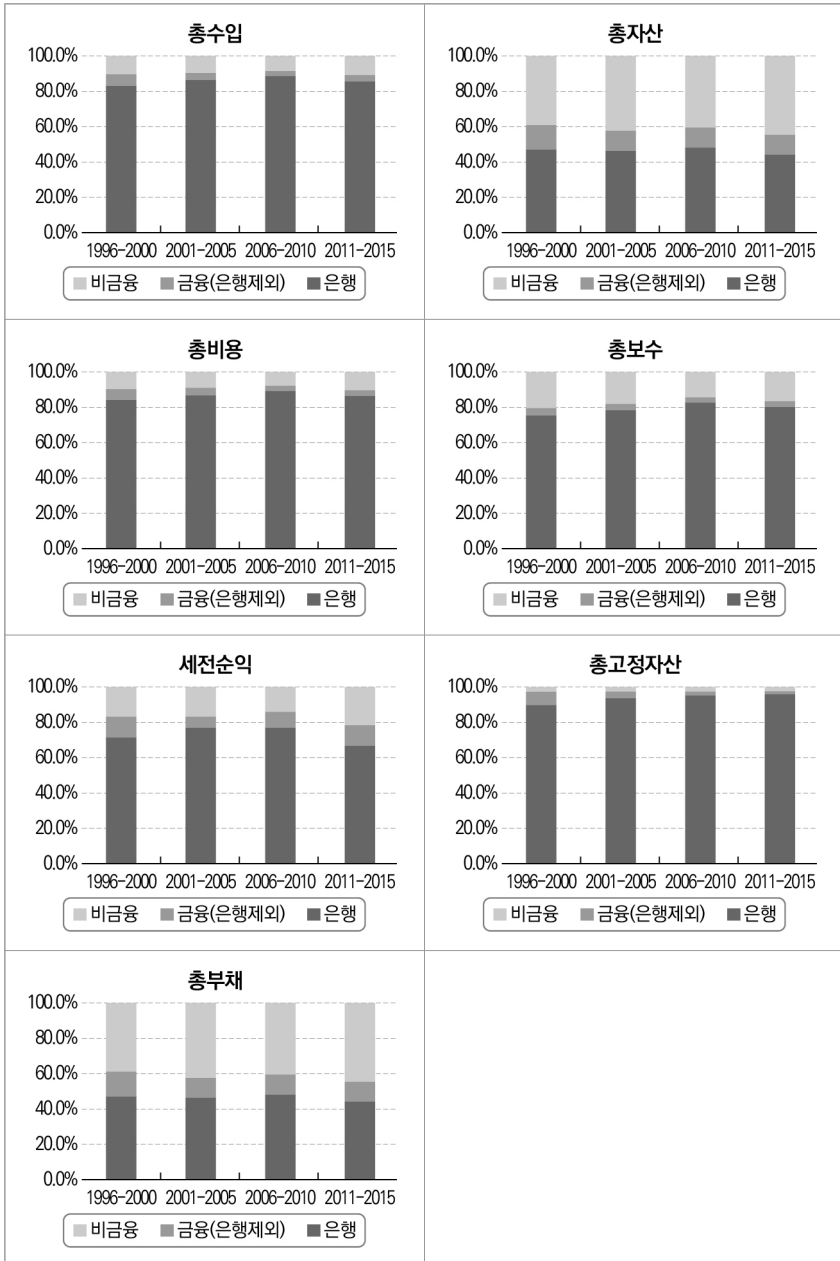
총비용에 비해 총보수는 금융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총보수에서 비금융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15년 기준 81.1%였고 은행의 비중이 15.8%, 은행제외 금융기업의 비중이 3.1%를 나타냈다.

세전순익의 비중은 비금융업 기업들이 약 70% 정도를 차지했다. 총수입, 총자산, 총비용 등과는 달리 금융 기업들의 순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권의 이윤이 비금융 기업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고정자산은 비금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95% 가량을 차지했는데, 금융업의 특성상 은행 및 금융기업의 고정자산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총부채의 경우 총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은행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은행의 특성상 예금 자체가 부채 및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림 3-2. 주요 변수의 금융과 비금융 부문 비중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금융기업과 비금융 기업의 총수입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3-14]가 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금융기업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기업들 간의 특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총수입의 평균과 중앙값은 은행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모든 기업들의 평균은 전 기간에 비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하였다. 중앙값은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 두드러진다.

비금융 기업의 평균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평균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기간 급등하였고, 은행의 총수입 평균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총수입의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은행 제외 기업과 비금융 기업 순이었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경우가 가장 컸고, 이는 극소수의 기업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년간 은행의 평균과

표 3-14. 총수입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29,705	2,762.0	8.5	369.5
	2001~2005	45,075	2,991.0	10.7	268.7
	2006~2010	67,683	3,547.6	11.6	232.1
	2011~2015	50,184	6,325.1	10.7	369.3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6,976	898.3	5.7	27.2
	2001~2005	12,914	554.3	7.7	9.6
	2006~2010	22,502	392.0	8.9	5.4
	2011~2015	15,658	944.4	8.2	8.0
금융(은행)	1996~2000	666	15,043.8	2.8	3,119.6
	2001~2005	666	21,759.8	2.7	3,040.1
	2006~2010	578	41,778.6	2.3	6,887.1
	2011~2015	520	74,979.8	2.0	13,691.0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5. 총자산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31,123	3,425.6	6.8	400.4
	2001~2005	50,166	3,338.3	9.3	263.2
	2006~2010	83,495	3,839.3	9.6	204.9
	2011~2015	61,170	7,394.7	7.8	354.5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7,384	4,293.6	8.0	168.5
	2001~2005	15,273	2,922.7	9.8	85.5
	2006~2010	28,147	2,579.5	11.5	67.5
	2011~2015	18,517	7,345.5	9.8	135.9
금융(은행)	1996~2000	667	136,752.7	2.9	23,478.3
	2001~2005	666	228,938.7	2.8	27,764.9
	2006~2010	578	488,373.2	2.3	75,439.7
	2011~2015	521	839,523.8	2.1	145,365.9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앙값이 은행 제외 금융기업과 비금융 기업에 비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표 3-15]는 금융, 비금융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총자산의 평균은 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996~2000년 기간에는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평균이 비금융 기업보다 높았으나, 2001~05년 기간부터 비금융 기업의 총자산이 더 커졌고, 가장 최근인 2011~15년 기간에는 두 기업군 간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다. 중앙값은 은행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은행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차이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두드러진 점은 은행의 평균과 중앙값이 다른 두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과 모든 기업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급증했다는 것이다.

금융과 비금융 기업의 총비용에 대한 기간별 통계는 총수입과 유사하였다.

표 3-16. 총비용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비금융	1996~2000	30,033	2,672.6	8.5	380.3
	2001~2005	46,811	2,779.4	10.8	257.2
	2006~2010	72,851	3,142.3	12.1	183.8
	2011~2015	54,842	5,614.3	11.2	285.0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7,044	820.3	5.4	28.7
	2001~2005	13,619	514.9	7.5	9.7
	2006~2010	24,108	299.9	8.7	3.6
	2011~2015	16,778	721.5	7.9	6.5
금융(은행)	1996~2000	666	14,137.5	2.7	2,829.3
	2001~2005	666	19,829.8	2.7	2,799.3
	2006~2010	578	37,045.3	2.3	5,848.4
	2011~2015	521	67,828.9	2.1	12,117.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6]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평균과 증양값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은행 제외 금융기업과 비금융 기업 순이었다. 또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들의 평균과 증양값이 2011~15년 대폭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과 비금융 기업의 총보수에 대한 정보는 [표 3-17]이 보여준다. 평균과 증양값은 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이 뒤따랐다. 20년 기간 동안 은행의 총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총보수는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증양값은 오히려 감소했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앞서 분석한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 격차는 크지 않았다. 2011~15년 기간 모든 기업들의 총 보수는 대폭 상승한 것은 다른 변수들과 일치한다.

[표 3-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전순익 또한 은행의 평균과 증양값이

표 3-17. 총보수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28,877	201.9	6.5	20.0
	2001~2005	42,924	221.4	8.3	16.4
	2006~2010	62,932	255.1	9.9	14.9
	2011~2015	46,803	465.8	9.5	28.5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5,474	53.8	5.2	2.9
	2001~2005	9,839	42.0	9.3	1.3
	2006~2010	16,216	36.4	5.5	0.9
	2011~2015	11,439	74.3	4.7	1.7
금융(은행)	1996~2000	664	2,342.4	3.3	216.7
	2001~2005	666	3,170.3	3.1	301.1
	2006~2010	578	4,676.4	2.6	737.3
	2011~2015	520	7,669.3	2.5	1,389.6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8.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29,745	135.5	13.9	5.4
	2001~2005	46,970	191.3	19.7	1.6
	2006~2010	73,351	278.0	15.8	3.1
	2011~2015	55,300	322.7	18.1	1.9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6,971	91.4	13.2	1.9
	2001~2005	13,902	56.1	26.9	0.3
	2006~2010	24,688	97.5	14.6	0.4
	2011~2015	17,074	226.5	13.4	0.4
금융(은행)	1996~2000	666	1,482.7	3.8	245.2
	2001~2005	666	3,018.1	2.8	283.4
	2006~2010	578	6,955.1	2.3	1,076.3
	2011~2015	521	10,332.0	2.2	2,363.0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른 두 기업군을 압도하였다. 하지만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은행 제외 금융 기업이 가장 컸고, 비금융 기업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수의 기업의 이윤이 대다수 기업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은행의 변동계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기업군의 변동계수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세전순익의 평균은 2011~15년 기간 금융기업들의 경우에만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중앙값을 보면 은행 제외 금융기업은 1996~2000년 기간에 비해 대폭 감소세를 보였고, 2011~15년 기간에는 전 기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또한 비금융 기업의 중앙값은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대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세전순익만이 2011~15년 기간 평균과 중앙값 모두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ROA는 비금융 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은행 제외 금융기업과 은행의 순이었다. 은행의 평균과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변동계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변수들에 비해 ROA의 경우

표 3-19. ROA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29,670	0.02	10.0	0.00
	2001~2005	44,911	0.03	6.3	0.00
	2006~2010	67,306	0.04	4.4	0.01
	2011~2015	49,999	0.02	8.4	0.01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6,878	0.02	5.5	0.01
	2001~2005	12,648	0.01	- 5.5	0.00
	2006~2010	21,955	0.02	17.7	0.01
	2011~2015	15,381	0.02	5.6	0.01
금융(은행)	1996~2000	666	0.01	1.9	0.01
	2001~2005	666	0.01	1.0	0.01
	2006~2010	578	0.01	0.4	0.01
	2011~2015	520	0.01	0.6	0.0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0.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30,226	2,016.6	9.1	199.4
	2001~2005	46,310	2,181.2	11.1	146.3
	2006~2010	70,817	2,159.4	12.1	111.6
	2011~2015	51,063	4,371.0	9.8	185.6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6,074	847.2	9.6	36.3
	2001~2005	10,823	485.7	9.1	13.1
	2006~2010	17,988	158.1	7.4	5.3
	2011~2015	12,243	326.4	6.7	9.4
금융(은행)	1996~2000	666	3,023.4	2.0	595.8
	2001~2005	664	4,508.3	2.4	640.6
	2006~2010	578	7,754.2	2.1	1,209.6
	2011~2015	520	10,762.6	2.0	2,260.9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에는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0]에 나타나 있듯이 총고정자산의 평균은 은행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은행의 총고정자산 평균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평균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1~15년 대폭 상승하였으나, 2001~0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성장이 정체되었던 비금융 기업이 총고정자산은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으며 은행 제외 금융기업이 그 다음을 나타냈다.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는 은행 제외 금융기업이 가장 컸는데, 역시 소수의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1]은 금융과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은행의 평균과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은 당연해 보인다. 1996~2000년 기간에는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평균이 비금융 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표 3-21. 총부채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양값
비금융	1996~2000	31,145	3,423.2	6.8	399.9
	2001~2005	50,350	3,327.0	9.3	261.5
	2006~2010	84,069	3,812.2	9.6	200.5
	2011~2015	61,785	7,321.6	7.8	343.7
금융(은행)	1996~2000	7,394	4,287.6	8.0	167.3
	2001~2005	15,323	2,913.4	9.8	84.9
	2006~2010	28,261	2,568.8	11.5	66.9
	2011~2015	18,599	7,319.7	9.8	134.1
금융(은행)	1996~2000	667	136,752.7	2.9	23,478.3
	2001~2005	666	228,938.7	2.8	27,764.9
	2006~2010	578	488,373.2	2.3	75,439.7
	2011~2015	521	839,523.8	2.1	145,365.9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1~15년 기간에는 두 기업군의 평균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양값은 비금융 기업이 은행 제외 금융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평균과 중양값은 모든 기업의 경우 2011~15년 대폭 상승했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순이었다. 은행의 부채 증가율이 다른 두 기업군에 비해 매우 가파른 것도 두드러진다.

[표 3-22]는 금융과 비금융 기업의 유동비율을 보여준다. 은행의 유동비율은 평균과 중양값 모두 2 이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기업군의 유동비율 평균은 2 이상이나 중양값은 대부분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비금융 기업과 은행 제외 금융기업의 경우 평균이 2011~15년 기간 급증하였는데 이 기간 변동계수도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적은 수의 기업들의 유동비율 급증한 현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한 중양값과 급증한 평균이 소수의 대형 기업들의 유동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금융, 비금융)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비금융	1996~2000	30,719	2.2	5.6	1.9
	2001~2005	47,571	2.2	6.6	1.6
	2006~2010	76,160	2.9	17.6	1.5
	2011~2015	56,866	14.0	23.0	1.2
금융 (은행 제외)	1996~2000	7,022	14.1	6.1	1.7
	2001~2005	12,860	8.0	6.5	1.4
	2006~2010	23,534	24.6	17.1	1.4
	2011~2015	16,037	28.7	21.4	2.2
금융(은행)	1996~2000	665	3.9	0.9	5.3
	2001~2005	666	3.0	1.1	4.6
	2006~2010	578	3.0	0.8	3.8
	2011~2015	521	3.2	0.6	3.4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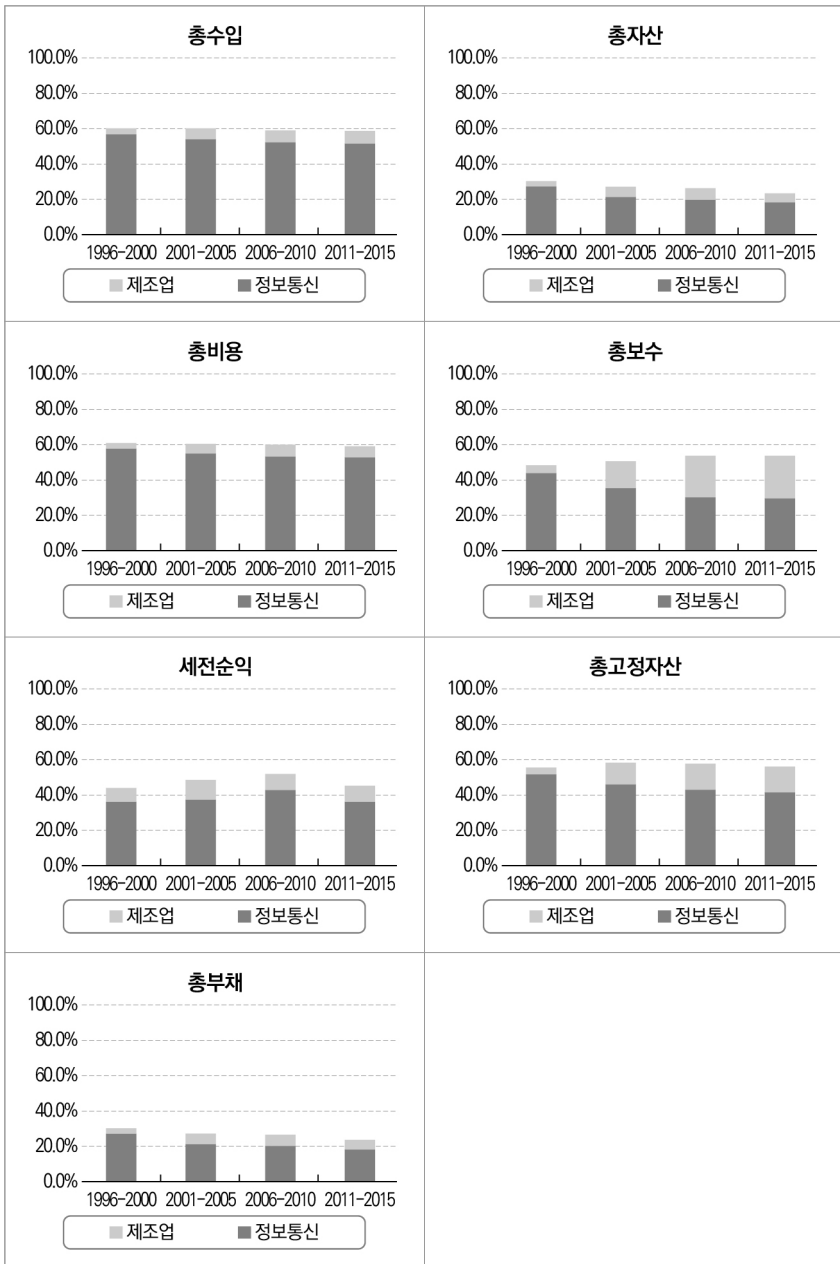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본 연구는 인도 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중인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인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서비스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부문에 대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의 총수입과 총비용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15년 기준 각각 52%, 6% 정도였다. 이 두 변수에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기간 소폭 하락했으나, 정보통신업의 비중은 1996~2000년 2%대에서 2011~15년 기간 6% 이상으로 상승했다. 제조업의 총자산에 대한 비중은 20년 기간 감소했으며, 정보통신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총비용에 비해 총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1996~2000년 기간 전체 기업의 44.2%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

그림 3-3. 주요 변수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비중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여 2011~15년 기간 29.5%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통신업의 비중은 1996~2000년 기간 3.4%에서 2011~15년 23.3%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총고정투자 비중도 20년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비중은 증가하여 2011~15년 14.5%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이윤은 20년간 등락이 있었으나 비중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 총부채는 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경우 감소세, 정보통신업의 경우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입, 총비용, 총고정투자에서 5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총보수와 세전순익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총수입과 총비용에 비해 총보수와 총고정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수익성에 대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3-23]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총수입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총수입의 평균과 중앙값은 제조업이 정보통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두 부분의 평균은 20년 기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11~15년 기간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중앙값은 15년간 정체되었다가 최근 급상승했는데 특히 제조업의 상승폭이 컸다. 변동계수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표 3-23. 총수입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제조업	1996~2000	18,448	3,049.6	8.8	509.9
	2001~2005	23,639	3,579.9	11.3	464.4
	2006~2010	31,059	4,612.3	12.3	509.8
	2011~2015	21,242	9,265.9	10.8	940.9
정보통신	1996~2000	1,353	1,790.3	5.6	123.6
	2001~2005	2,998	2,692.4	8.0	112.2
	2006~2010	4,525	3,914.8	6.4	120.2
	2011~2015	3,484	6,616.3	5.4	199.0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4. 총자산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9,084	3,292.4	6.2	502.1
	2001-2005	25,000	3,071.7	8.0	394.2
	2006-2010	34,131	3,966.9	9.6	381.9
	2011-2015	22,727	8,607.4	8.1	779.3
정보통신	1996-2000	1,446	3,087.0	6.3	212.1
	2001-2005	3,259	5,935.9	10.8	221.6
	2006-2010	5,214	7,331.7	8.8	167.8
	2011-2015	3,859	12,220.0	5.8	271.2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은 수준이었으나 여전히 높았다.

[표 3-24]는 총자산에 대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기간별 통계를 나타낸다. 총자산의 평균과 증양값은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은 20년간 두 부문 전부 상승했으며 2011~15년 기간 급증한 특징을 보이는데, 제조업의 평균이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증양값은 두 부문 모두 감소 또는 정체되었다가 최근 급증했는데, 평균과는 달리 2011~15년 기간 정보통신의 상승률이 제조업보다 높았다. 두 부문의 평균과 증양값의 격차는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정보통신업의 차이가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5]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총비용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 다. 평균과 증양값은 모두 제조업이 정보통신업보다 컸으며, 반대로 변동계수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은 두 부문 모두 20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급증했는데, 제조업의 급등세가 더욱 컸다. 증양값은 1996~2010년 기간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으나 2011~15년 대폭 상승했는데, 제조업의 상승률이 정보통신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의 평균과 증양 값의 격차가 제조업보다 크며 20년 기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보통신업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소모하며 이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표 3-25. 총비용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8,593	2,990.8	8.9	522.9
	2001~2005	24,263	3,394.0	11.3	456.5
	2006~2010	32,355	4,226.8	12.8	459.4
	2011~2015	22,072	8,687.0	11.1	877.7
정보통신	1996~2000	1,372	1,583.9	5.4	119.1
	2001~2005	3,108	2,291.5	7.6	108.3
	2006~2010	4,817	3,321.3	6.3	106.0
	2011~2015	3,683	5,814.5	5.2	179.4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6]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평균은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로 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6~2000년 기간 정보통신업의 평균은 제조업의 약 1.1배였으나 2011~15년 기간에는 5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증양값의 경우 2001~05년 기간까지는 제조업이 정보통신업보다 높았으나 이후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제조업의 평균과 증양값은 2006~10년 기간까지 정체되었다가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다. 반면 정보통신업의 증양값은 20년 기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2011~15년 기간 크게 증가했다. 변동성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두 부문 간 큰

표 3-26. 총보수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8,301	184.6	6.0	27.4
	2001~2005	23,318	185.3	6.8	25.7
	2006~2010	30,409	194.4	7.9	23.6
	2011~2015	21,029	381.3	5.9	53.9
정보통신	1996~2000	1,281	208.1	4.7	14.0
	2001~2005	2,896	603.8	7.6	18.9
	2006~2010	4,309	1,009.1	7.5	28.4
	2011~2015	3,308	1,930.1	7.6	56.3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7.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8,521	123.2	13.7	8.5
	2001~2005	24,302	204.8	15.9	4.8
	2006~2010	32,421	346.9	11.8	9.3
	2011~2015	22,098	429.5	12.1	10.0
정보통신	1996~2000	1,342	277.3	9.1	6.0
	2001~2005	3,120	395.5	12.2	0.9
	2006~2010	4,835	485.5	11.9	2.2
	2011~2015	3,701	817.7	16.8	1.4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차이는 없었고, 정보통신업의 변동계수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은 두 부문 다 큰 편이었으며, 특히 정보통신업의 두 통계 간 격차는 20년간 계속 상승했다.

[표 3-27]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세전순익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평균은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컸으나, 중앙값은 반대로 나타났고, 두 부문 간 변동계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부문의 평균은 20년 기간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제조업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반면 정보통신업의 경우 2011~15년 기간 상대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제조업의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나, 정보통신업의 중앙값은 감소했다.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은 두 부문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보통신의 경우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정보통신의 경우 소수의 기업에 이윤이 집중되는 것을 나타낸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ROA의 통계는 [표 3-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은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컸으나 2006년 이후에는 두 부문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변동계수는 제조업이 높았으나 2011~15년 기간에는 정보통신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값은 두 부문이 20년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3-28. ROA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8,439	0.01	- 6.1	0.00
	2001~2005	23,602	0.03	7.9	0.01
	2006~2010	30,991	0.05	2.5	0.02
	2011~2015	21,219	0.03	3.1	0.01
정보통신	1996~2000	1,351	0.06	2.0	0.02
	2001~2005	2,981	0.05	2.8	0.01
	2006~2010	4,502	0.05	3.3	0.01
	2011~2015	3,468	0.03	10.6	0.01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9]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기간별 총고정자산 통계의 추이를 나타낸다. 평균은 1996~2000년 기간에는 제조업이 정보통신업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후에는 정보통신이 제조업을 추월했다. 증양값은 평균과는 달리 20년 기간 내내 제조업이 정보통신업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업에서 적은 수의 기업에 고정자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평균은 15년 간 정체되었다가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으며, 정보통신업의 평균은 20년 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1~15년 급증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의 증양값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대폭 상승했으며, 정보통신

표 3-29.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제조업	1996~2000	18,895	1,861.3	6.7	276.9
	2001~2005	24,456	2,028.6	8.5	240.4
	2006~2010	32,569	2,113.7	11.4	218.5
	2011~2015	21,759	4,466.7	9.3	438.3
정보통신	1996~2000	1,352	1,582.2	6.8	77.4
	2001~2005	3,029	4,038.0	13.9	95.3
	2006~2010	4,628	4,971.1	11.5	77.5
	2011~2015	3,575	8,836.7	8.0	98.9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업의 중앙값은 20년간 등락을 반복했다.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은 두 부문 모두 20년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정보통신업의 간격이 더욱 급격하게 증가했다.

[표 3-30]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총부채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평균은 1996~2000년 기간 두 부문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이후 정보통신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값은 20년 기간 제조업이 정보통신업보다 컸으며, 변동계수의 값은 기간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제조업이 정보통신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제조업의 평균은 1996~2005년의 10년간 정체되었다가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보통신업의 평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의 중앙값은 첫 10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대폭 상승했으며, 정보통신업의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등락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변화는 적었다.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은 두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정보통신업의 간격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표 3-31]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유동비율에 대한 통계를 보여준다. 1996~2000년 기간에는 정보통신업의 평균이 제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제조업의 평균은 꾸준히 2 이상을 유지한 데 반해 정보통신업의 평균은 계속 하락했으며 2 이하의 값을 보였다. 중앙값 또한 1996~2000년에

표 3-30. 총부채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제조업	1996~2000	19,086	3,292.0	6.2	502.0
	2001~2005	25,042	3,066.9	8.0	393.4
	2006~2010	34,310	3,945.2	9.6	377.5
	2011~2015	22,849	8,568.3	8.2	770.0
정보통신	1996~2000	1,449	3,081.4	6.3	211.7
	2001~2005	3,283	5,894.5	10.9	217.6
	2006~2010	5,257	7,269.2	8.9	162.2
	2011~2015	3,888	12,118.2	5.8	264.7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31.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제조업, 정보통신)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제조업	1996~2000	18,993	2.0	1.7	2.0
	2001~2005	24,643	2.0	2.3	1.8
	2006~2010	33,324	2.1	3.9	1.8
	2011~2015	22,386	2.8	5.9	1.2
정보통신	1996~2000	1,397	3.4	3.8	2.4
	2001~2005	3,116	1.9	6.8	1.9
	2006~2010	4,876	1.6	6.6	1.5
	2011~2015	3,699	1.4	2.3	1.5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반대가 되었다. 제조업의 변동계수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정보통신업의 변동계수는 등락을 반복했다. 중요한 점은 2011~15년 기준 제조업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 수준이나 정보통신업의 평균은 1.4에 불과했으며 두 부문의 중앙값은 모두 2 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부문의 상당수 기업들은 유동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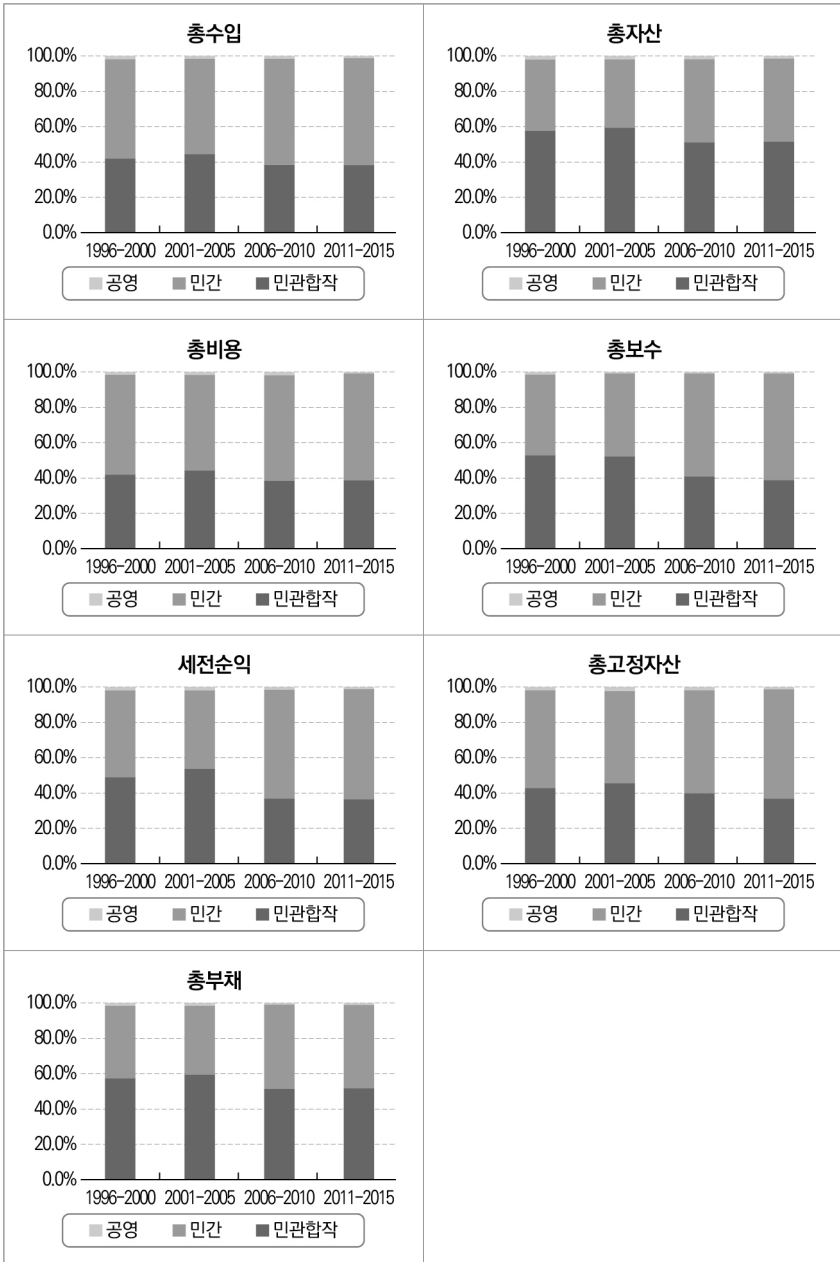
다. 소유구조별 비교

1)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림 3-4]는 주요 변수의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기업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과 총부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50~60% 정도를 차지했고 공기업이 40~50%를 점유했다. 총자산과 총부채에서는 공기업의 비중이 민간기업의 비중보다 다소 컸으며 민관합작기업의 비중은 1% 정도를 차지했다.

[표 3-32]는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기업의 총수입에 대한 주요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과 중앙값 모두 공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민관합작기업과 민간기업의 순서였다. 변동계수는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았

그림 3-4. 주요 변수의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비중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32. 총수입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공기업	1996~2000	1,861	22,533.8	4.0	2,013.3
	2001~2005	2,627	26,613.9	4.7	1,449.5
	2006~2010	3,335	31,721.4	5.3	969.3
	2011~2015	2,846	49,246.5	4.8	1,580.6
민간 기업	1996~2000	35,188	1,572.5	4.4	246.3
	2001~2005	55,699	1,511.6	7.3	132.8
	2006~2010	87,096	1,883.5	9.0	91.9
	2011~2015	63,289	3,601.5	9.8	163.3
민관 합작	1996~2000	298	4,317.8	2.7	725.0
	2001~2005	329	6,024.5	2.7	860.4
	2006~2010	332	8,962.8	3.4	851.7
	2011~2015	227	12,618.7	2.8	1,838.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민간기업의 순이었다. 평균과 중앙값 모두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민관합작기업의 평균은 이 기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편이다.

[표 3-33]은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통계를 보여 준다. 평균을 살펴보면 공기업의 총자산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민관합작기업과 민간기업 순서였다. 모든 기업들의 총자산 평균은 20년 기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에는 공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관기업과 민간기업의 순이었으나, 이후에는 민관합작기업의 중앙값이 공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중앙값은 2001~05년 기간 급감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1~15년 다시 상승한 반면, 민관합작기업의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모든 기업의 총자산 평균과 중앙값은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상승률은 민간기업의 통계가 가

표 3-33. 총자산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공기업	1996~2000	1,900	69,943.8	3.6	4,198.1
	2001~2005	2,768	77,877.0	4.2	2,941.9
	2006~2010	3,625	94,673.5	4.7	2,338.4
	2011~2015	3,094	173,743.8	4.5	3,685.3
민간기업	1996~2000	36,970	2,501.0	6.5	330.6
	2001~2005	62,986	2,242.4	10.8	194.3
	2006~2010	108,230	2,940.6	14.3	144.7
	2011~2015	76,863	6,655.4	11.3	264.0
민관합작	1996~2000	304	10,880.8	1.7	2,290.2
	2001~2005	351	12,503.5	1.7	3,891.9
	2006~2010	365	15,227.9	2.1	3,187.3
	2011~2015	251	27,231.1	1.8	6,472.2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장 컸다.

변동계수는 민간기업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과 민관합작기업의 순이었다. 공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평균과 증양값의 차이가 다른 군의 기업들에 비해 가장 컸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평균과 증양값의 차이는 2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에 반해 민관합작기업의 평균과 증양값 차이는 20년 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표 3-34]는 총비용의 공기업, 민간, 민관합작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총비용도 총수입과 총비용과 마찬가지로 평균과 증양값의 경우 공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관합작과 민간기업의 순서였다. 모든 기업군의 평균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나, 증양값은 민관합작기업만 꾸준한 상승세였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증양값은 첫 15년간 감소하다 2011~15년 기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평균은 2011~15년 기간 급증한 반면 민관합작기업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으나, 민관합작의 증양값은

표 3-34. 총비용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공기업	1996~2000	1,867	21,691.5	4.1	2,147.3
	2001~2005	2,666	24,918.5	4.7	1,655.6
	2006~2010	3,411	29,384.2	5.5	923.7
	2011~2015	2,950	45,435.3	5.0	1,292.7
민간 기업	1996~2000	35,578	1,517.1	4.2	254.6
	2001~2005	58,099	1,403.8	7.2	129.2
	2006~2010	93,790	1,645.9	9.0	67.3
	2011~2015	68,958	3,162.8	10.0	119.9
민관 합작	1996~2000	298	4,130.0	2.7	642.7
	2001~2005	331	5,756.5	2.7	805.5
	2006~2010	336	8,516.0	3.5	845.3
	2011~2015	233	11,984.1	2.9	1,654.0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하였고 나머지 기업군의 증양값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었다.

[표 3-35]는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기업에 대한 총보수의 통계를 보여 준다. 평균은 20년 기간 동안 모든 기업군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2011~15년 기간 크게 상승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증양값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15년 기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민관합작기업의 증양값은 20년 기간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민간기업과 민관합작기업의 증양값은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급상승했다. 민관합작기업의 변동계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변동계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다른 기업군의 변동계수는 20년 기간 동안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각 기업군의 평균과 증양값 간 차이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경우 계속 증가했다. 1996~2000년 기간 공기업 총보수의 평균은 증양값의 약 9.2배 정도였는

표 3-35. 총보수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공기업	1996~2000	1,851	2,193.2	2.9	238.4
	2001~2005	2,591	2,431.1	3.4	184.9
	2006~2010	3,224	2,461.7	3.8	115.4
	2011~2015	2,750	3,695.9	3.5	153.8
민간 기업	1996~2000	32,869	107.8	4.4	14.6
	2001~2005	50,513	111.6	6.5	10.1
	2006~2010	76,178	148.7	10.9	8.5
	2011~2015	55,794	296.4	11.6	17.5
민관 합작	1996~2000	295	273.8	2.3	73.4
	2001~2005	325	290.6	2.3	76.4
	2006~2010	324	372.1	2.4	94.8
	2011~2015	218	654.1	2.1	202.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데 계속 증가하여 2011~15년에는 24배로 대폭 상승했다. 20년간 민간기업의 평균과 증양값 차이도 증가세를 보이며 2011~15년 기준 평균이 증양값의 17배 정도였다. 민관합작기업의 평균과 증양값의 차이는 20년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보수 분포에서 변량(Variation)이 고르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수 기업의 피고용자들에 대한 상대적 보수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평균과 증양값의 기업군 간 상대값을 살펴보면 기업군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6~2000년 기간 민간기업 대비 공기업의 평균은 약 20배였으나, 2011~15년 12배 정도로 감소했다.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기업들의 세전순익에 대한 통계는 [표 3-36]이 보여준다. 모든 기업군의 평균은 20년 기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2011~15년 기간 급등세는 없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증양값은 계속 감소하다 2011~15년 기간 상승했으며, 민관합작기업의 증양값은

표 3-36.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공기업	1996~2000	1,862	1,459.5	5.0	20.9
	2001~2005	2,668	2,292.3	6.4	9.9
	2006~2010	3,415	2,823.9	5.9	33.2
	2011~2015	2,955	3,304.2	6.1	52.2
민간기업	1996~2000	35,222	83.6	11.8	4.7
	2001~2005	58,539	93.8	16.2	0.9
	2006~2010	94,866	174.0	14.3	1.6
	2011~2015	69,707	244.6	16.7	1.0
민관합작	1996~2000	298	372.3	3.8	33.4
	2001~2005	331	423.1	4.6	53.5
	2006~2010	336	546.1	2.9	38.5
	2011~2015	233	648.2	3.4	86.8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년 기간 지속 상승하였고 전 기간 대비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다. 변동계수는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순서였다.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과 증양값의 격차가 대폭 상승한 것이 두드러진다.

[표 3-37]은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기업의 ROA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나타낸다. 기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기업군의 평균과 증양값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동성은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기업군의 변동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3-38]은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기업의 총고정자산 통계를 나타낸다. 평균은 공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관합작, 민간기업 순서였다. 20년 기간 동안 모든 기업군의 평균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1~15년 기간 민간기업의 평균이 크게 증가했다. 증양값은 평균과 다른 변화의 추이를 보였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증양값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1~15년 크게 증가했으며, 민관합작기업의 증양값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 상승하였고, 특

표 3-37. ROA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공기업	1996~2000	1,861	0.01	8.7	0.00
	2001~2005	2,625	0.02	7.4	0.00
	2006~2010	3,329	0.02	8.9	0.01
	2011~2015	2,834	0.01	6.9	0.01
민간 기업	1996~2000	35,055	0.01	7.6	0.01
	2001~2005	55,271	0.02	9.6	0.00
	2006~2010	86,178	0.03	6.2	0.01
	2011~2015	62,839	0.02	7.7	0.01
민관 합작	1996~2000	298	0.02	3.7	0.01
	2001~2005	329	0.02	4.4	0.01
	2006~2010	332	0.02	2.3	0.01
	2011~2015	227	0.01	4.6	0.01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38.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공기업	1996~2000	1,874	15,840.8	4.4	797.5
	2001~2005	2,649	18,844.6	4.8	617.0
	2006~2010	3,380	19,197.6	4.9	372.2
	2011~2015	2,840	29,346.0	4.5	528.6
민간 기업	1996~2000	34,788	1,083.3	5.7	158.5
	2001~2005	54,803	1,033.7	8.9	100.2
	2006~2010	85,664	1,097.6	13.0	64.8
	2011~2015	60,753	2,389.7	10.4	109.8
민관 합작	1996~2000	304	3,350.0	3.2	188.9
	2001~2005	345	4,713.7	3.2	224.7
	2006~2010	339	5,383.1	3.0	436.2
	2011~2015	233	7,989.5	2.3	1,510.8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히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3배가량 대폭 증가했다. 중앙값의 크기는 1996~2000년 기간에는 공기업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민관합작과 민간기업이 뒤를 이었으나, 2011~15년 기간에는 합작기업의 중앙값이 공기업의 중앙값보다 거의 3배가량 크게 나타났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민관합작기업의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1~15년 기간에는 대폭 감소했다.

[표 3-39]는 공기업, 민간, 민관합작기업의 총부채 평균을 나타낸다. 모든 기업군의 평균은 20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11~15년 기간 전 기업의 평균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 중 민간기업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에는 공기업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민관합작과 민간기업의 순이었으나, 이후 민관합작기업의 중앙값이 공기업보다 높아졌다. 민관합작기업의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계속 상승했고, 나머지 기업군의 중앙값은 감소세를 보이다 2011~15년 기간 상승했다. 모든 기업군의 중앙값은 2011~15년

표 3-39. 총부채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공기업	1996~2000	1,900	69,943.8	3.6	4,198.1
	2001~2005	2,776	77,658.0	4.2	2,902.0
	2006~2010	3,637	94,355.8	4.7	2,318.4
	2011~2015	3,119	172,163.6	4.5	3,451.1
민간 기업	1996~2000	37,002	2,498.8	6.5	330.0
	2001~2005	63,212	2,235.0	10.8	192.6
	2006~2010	108,906	2,921.6	14.3	142.0
	2011~2015	77,535	6,599.4	11.4	257.1
민관 합작	1996~2000	304	10,880.8	1.7	2,290.2
	2001~2005	351	12,503.5	1.7	3,891.9
	2006~2010	365	15,227.9	2.1	3,187.3
	2011~2015	251	27,231.1	1.8	6,472.2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0.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공기업	1996~2000	1,897	5.09	6.7	1.43
	2001~2005	2,740	2.48	1.5	1.23
	2006~2010	3,568	2.99	3.3	1.28
	2011~2015	3,055	3.16	9.5	1.26
민간기업	1996~2000	36,205	3.65	5.1	1.91
	2001~2005	58,008	4.24	9.0	1.61
	2006~2010	96,350	7.78	29.3	1.51
	2011~2015	70,127	19.52	30.8	1.29
민관합작	1996~2000	304	4.74	1.0	2.94
	2001~2005	349	6.43	1.6	3.02
	2006~2010	354	5.63	1.8	1.91
	2011~2015	242	2.74	1.0	1.70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급증하는데, 특히 민관합작기업의 중앙값이 대폭 상승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과 중앙값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합작기업의 거리는 20년 기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기업, 민간기업, 민관합작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대한 유동비율은 다른 변수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평균은 전부 2 이상으로 유동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값이 대부분, 특히 최근 들어 2 이하의 값을 보이면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민관합작기업의 경우 1996~2005년 기간 유동비율의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2 이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유동성을 보였으나 이후 유동비율이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변동계수는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순서였다. 특히 다른 기업군에 비해 민간기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최근 10년간 변동계수가 급증했다.

2)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그림 3-5]는 주요 변수의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비중 차이를 기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국내기업의 수가 해외기업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나, 모든 변수에서 해외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41]은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총 수입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국내와 해외기업의 평균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 상승했으며, 특히 2011~15년 기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대폭 상승세가 눈에 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증양값은 하락세를 보이다 2011~15년 기간 상승했는데, 국내기업의 증양값은 2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동계수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과 증양값 모두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평균과 증양값의 차이는 국내와 해외기업 모두 20년 기간 증가했는데,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의 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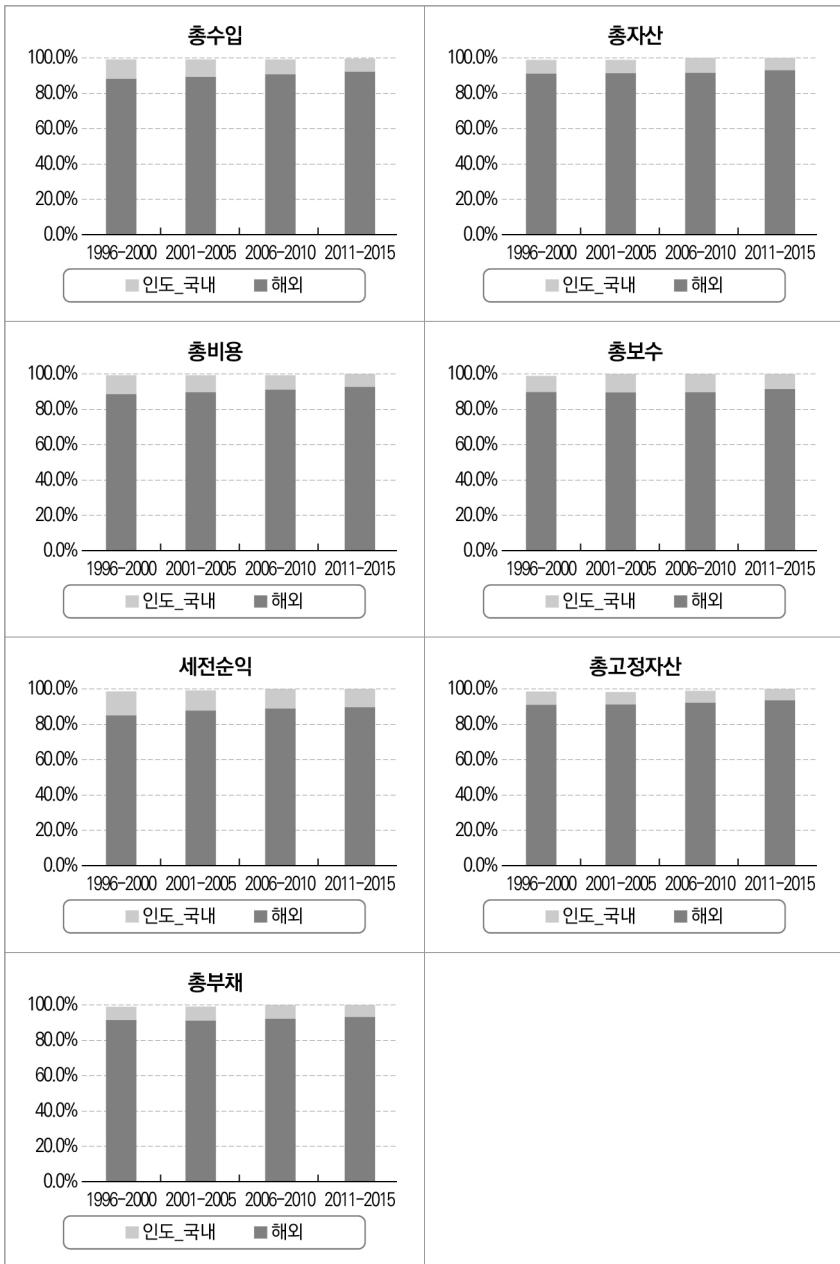
[표 3-42]는 국내와 해외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총자산의 평균과 증양값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다. 변동계수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기업의 총자산 평균은 1996~2010년간 정체하였으나 2011~15년 기간 급증했고, 해외기업의 총 자산 평균은 20년 기

표 3-41. 총수입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인도 국내	1996~2000	34,548	2,519.1	8.8	245.7
	2001~2005	55,186	2,543.4	11.7	131.8
	2006~2010	86,994	2,841.5	13.0	92.4
	2011~2015	63,606	5,528.0	11.4	168.5
해외	1996~2000	2,501	3,955.8	3.3	948.7
	2001~2005	3,140	4,528.0	3.0	831.1
	2006~2010	3,437	6,338.2	3.2	795.2
	2011~2015	2,529	9,186.5	3.2	928.0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주요 변수의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비중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2. 총자산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6,254	5,734.7	10.6	331.9
	2001~2005	62,391	5,361.1	14.1	194.3
	2006~2010	107,908	5,658.0	16.3	146.8
	2011~2015	77,089	13,368.4	13.8	274.4
해외	1996~2000	2,616	6,204.3	3.4	1,109.2
	2001~2005	3,363	7,471.4	4.4	974.0
	2006~2010	3,947	11,636.1	5.5	836.1
	2011~2015	2,868	19,575.5	4.7	1,141.6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앙값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다 2011~15년 기간 상승했는데, 특히 국내기업의 중앙값이 대폭 증가했다. 국내와 해외기업 모두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큰 편인데, 특히 국내기업의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기업의 분포가 국내기업에 비해 고르며 변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3-43]은 국내와 해외기업의 총비용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평균과 중앙값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중앙값의 차이가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 국내기업의 평균은 계속해서 정체하다 2011~15

표 3-43. 총비용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4,925	2,422.3	8.9	255.6
	2001~2005	57,580	2,347.6	11.8	128.8
	2006~2010	93,652	2,493.7	13.7	67.9
	2011~2015	69,248	4,865.1	12.0	124.6
해외	1996~2000	2,520	3,775.8	3.2	917.3
	2001~2005	3,185	4,223.8	3.0	796.7
	2006~2010	3,549	5,688.0	3.3	643.6
	2011~2015	2,660	8,181.0	3.4	688.9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년 대폭 상승한 반면, 해외기업의 평균은 2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와 해외기업의 중앙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1~15년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국내기업의 중앙값이 크게 상승했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년 기간 동안 해외기업의 변동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년 기간 동안 국내와 해외기업 모두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가 더욱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44]는 인도 국내와 해외기업의 총보수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평균과 중앙값 모두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국내와 해외기업의 차이는 중앙값이 보다 컸다. 국내기업의 평균은 15년 간의 상승하지 않다가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한 반면, 해외기업의 평균은 2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기업의 중앙값은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급증했으나, 해외기업의 중앙값은 평균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20년 간의 변화가 없었다.

[표 3-45]는 국내와 해외기업에 대한 세전순익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평균과 중앙값 모두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고, 중앙값의 차이가 평균의

표 3-44. 총보수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2,375	212.5	7.8	14.5
	2001~2005	50,201	215.5	9.6	10.1
	2006~2010	76,301	226.6	11.1	8.5
	2011~2015	56,219	445.8	10.3	17.8
해외	1996~2000	2,345	296.4	2.4	77.6
	2001~2005	2,903	399.9	2.5	91.8
	2006~2010	3,101	599.8	2.6	102.8
	2011~2015	2,325	861.6	2.4	145.5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5.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4,571	135.3	14.0	3.7
	2001~2005	58,003	174.3	20.1	0.8
	2006~2010	94,696	248.9	16.3	1.6
	2011~2015	69,989	353.8	16.6	1.0
해외	1996~2000	2,513	282.2	5.4	29.7
	2001~2005	3,204	404.9	5.1	27.9
	2006~2010	3,585	720.3	4.4	39.4
	2011~2015	2,673	905.9	4.5	24.7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차이에 비해 매우 컸다. 국내와 해외기업의 평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중앙값은 증감을 반복했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모든 기업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컸다.

[표 3-46]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기업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며, 평균의 변동은 해외기업의 경우가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47]은 국내와 해외 기업의 총고정자산에 대한 통계를 나타낸다. 평균과 중앙값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변동계수는 국내기업

표 3-46. ROA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4,421	0.01	8.7	0.00
	2001~2005	54,777	0.02	9.2	0.00
	2006~2010	86,108	0.02	6.8	0.01
	2011~2015	63,154	0.01	8.4	0.01
해외	1996~2000	2,495	0.02	3.9	0.02
	2001~2005	3,119	0.03	4.7	0.02
	2006~2010	3,399	0.04	6.9	0.04
	2011~2015	2,519	0.03	2.8	0.02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7.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인도 국내	1996~2000	34,200	1,826.2	9.6	157.4
	2001~2005	54,391	1,835.0	12.3	98.2
	2006~2010	85,682	1,736.9	13.6	64.2
	2011~2015	61,081	3,635.5	10.9	110.2
해외	1996~2000	2,462	1,901.6	2.7	421.9
	2001~2005	3,061	2,328.6	3.1	431.6
	2006~2010	3,362	2,837.8	3.7	373.3
	2011~2015	2,512	4,296.3	3.6	455.7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외기업의 평균은 20년 기간 계속 상승했으나, 국내기업의 평균은 정체되다가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해외기업의 증양값은 2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국내기업의 증양값은 20년 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든 기업의 평균과 증양값의 격차는 증가했는데, 국내기업의 격차가 더 커졌다.

[표 3-48]은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총부채도 다른 변수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평균과 증양값은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으며, 증양값의 차이가 훨씬 컸다. 국내기업의 평균은 15년간 정

표 3-48. 총부채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인도 국내	1996~2000	36,281	5,730.3	10.6	331.3
	2001~2005	62,606	5,344.1	14.2	192.6
	2006~2010	108,572	5,622.3	16.3	144.0
	2011~2015	77,765	13,255.9	13.8	266.3
해외	1996~2000	2,621	6,192.5	3.4	1,106.2
	2001~2005	3,382	7,430.2	4.4	967.4
	2006~2010	3,971	11,563.9	5.5	821.0
	2011~2015	2,889	19,420.2	4.7	1,119.8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9.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인도국내, 해외)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인도 국내	1996~2000	35,531	4.5	6.9	1.9
	2001~2005	57,504	2.8	4.6	1.6
	2006~2010	96,200	5.3	29.9	1.5
	2011~2015	70,462	11.4	32.9	1.3
해외	1996~2000	2,571	3.9	1.8	1.7
	2001~2005	3,244	7.9	6.0	1.5
	2006~2010	3,718	5.5	17.3	1.3
	2011~2015	2,720	3.8	15.2	1.5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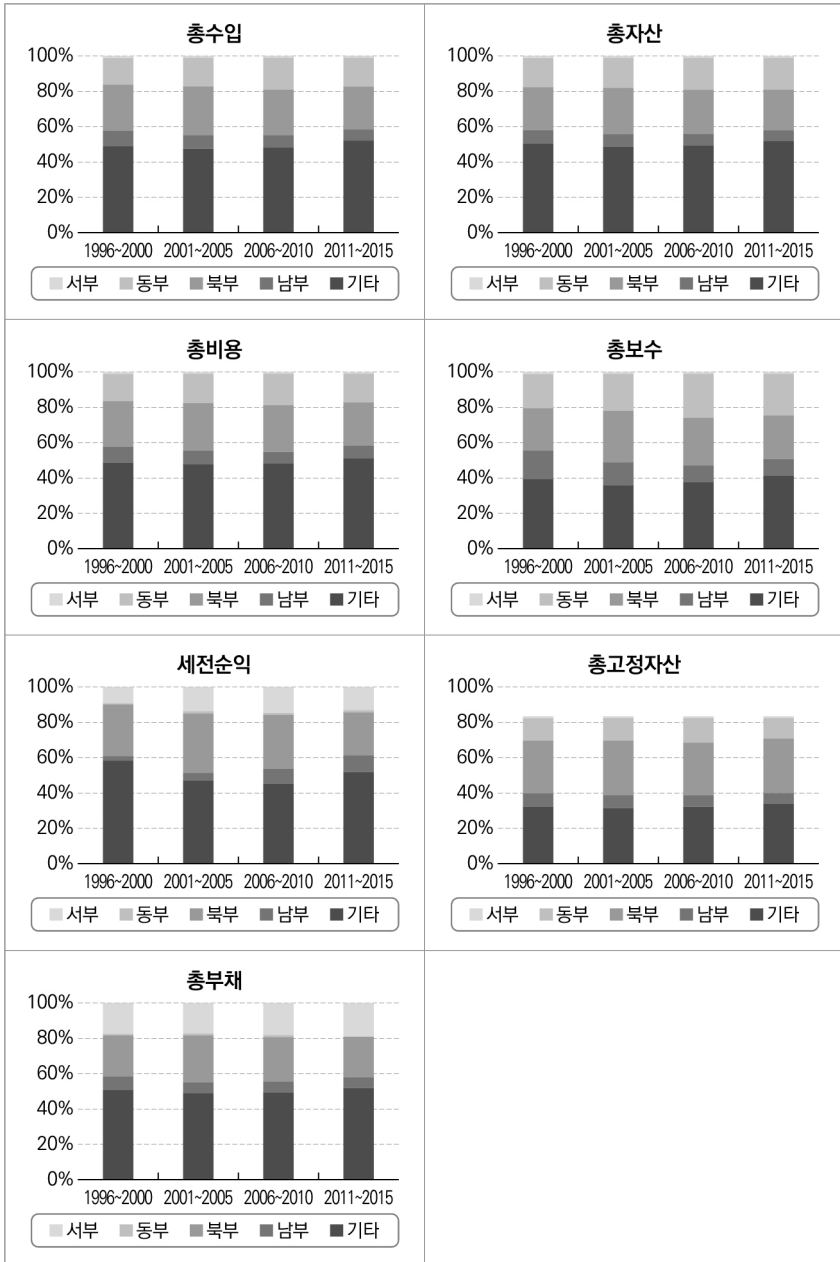
체되었다가 2011~15년 기간 급증하였고, 중앙값은 15년간 감소하다 역시 최근 대폭 상승했다. 해외기업의 평균은 2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중앙값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15년 기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앙값의 경우 최근 국내기업의 수준은 20년 전을 하회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은 20년 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변동계수는 국내기업의 수준이 해외기업의 수준보다 높았다.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모든 기업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표 3-49]는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유동비율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나타낸다. 평균을 보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보다 높은 지급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국내와 해외기업 가릴 것 없이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낮으나 두 기업군 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그림 3-6]은 인도 기업에 대한 주요 변수의 권역별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변수에 따라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변수의 비중은 서부권역

그림 3-6. 주요 변수의 권역별 비중 기간별 추이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부, 남부, 동부, 기타 순이었다. 권역별 GDP를 고려하면 북부권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기업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인도 산업의 중심인 마하라슈트라 주와 구자라트 주가 속해 있는 서부권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표 3-50]은 총수입의 권역별 통계를 기간별로 제공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평균과 중앙값 모두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서부와 남부권역의 평균은 20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동부와 북부권역의 평균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대폭 상승했다. 기타권역의 평균은 20년

표 3-50. 총수입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서부	1996~2000	15,771	3,057.7	9.7	244.0
	2001~2005	22,266	3,362.7	12.6	173.7
	2006~2010	31,258	4,174.4	13.7	135.8
	2011~2015	25,067	7,651.4	12.2	197.3
동부	1996~2000	4,240	2,082.2	4.0	239.5
	2001~2005	8,050	1,473.1	5.7	59.0
	2006~2010	13,757	1,410.4	5.9	33.3
	2011~2015	9,072	3,019.8	5.2	82.4
북부	1996~2000	8,212	3,107.7	6.2	354.0
	2001~2005	14,178	2,996.5	7.6	168.9
	2006~2010	24,195	2,926.1	8.1	97.3
	2011~2015	17,485	5,168.1	6.7	175.6
남부	1996~2000	8,861	1,736.9	3.5	268.4
	2001~2005	13,724	1,919.2	5.1	169.2
	2006~2010	20,768	2,388.4	6.2	134.1
	2011~2015	14,136	4,421.9	5.4	249.9
기타	1996~2000	188	2,124.5	2.5	530.4
	2001~2005	434	2,285.2	4.1	205.3
	2006~2010	785	2,213.2	5.8	43.7
	2011~2015	599	2,904.7	5.0	120.9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간 소폭 상승에 그쳤다. 모든 권역의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2010~15년 상승했으나 여전히 20년 전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1996~2000년 기간 서부와 북부권역의 평균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서부가 북부권역을 추월하면서 2011~15년 기준 서부권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변동계수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서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51]은 권역별 총자산의 기간별 통계를 나타낸다.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다. 총자산의 평

표 3-51. 총자산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서부	1996~2000	16,535	6,941.5	11.7	330.2
	2001~2005	24,967	7,040.6	15.0	233.1
	2006~2010	38,274	8,612.7	16.2	176.4
	2011~2015	29,798	18,608.7	14.0	326.8
동부	1996~2000	4,425	3,972.9	5.7	341.1
	2001~2005	8,822	2,741.5	9.0	160.2
	2006~2010	16,094	2,601.2	12.3	132.9
	2011~2015	10,492	6,643.7	10.6	231.4
북부	1996~2000	8,623	6,370.0	6.7	396.0
	2001~2005	16,474	5,969.5	9.4	195.1
	2006~2010	31,320	5,256.4	11.1	130.7
	2011~2015	22,235	10,994.0	9.7	227.2
남부	1996~2000	9,319	4,179.1	7.1	373.8
	2001~2005	15,319	4,138.2	9.2	229.1
	2006~2010	25,535	4,832.8	10.8	175.4
	2011~2015	16,963	12,118.1	9.4	373.3
기타	1996~2000	197	6,415.3	2.4	833.7
	2001~2005	520	4,507.6	3.7	226.7
	2006~2010	995	2,581.9	5.1	126.4
	2011~2015	717	6,094.4	4.6	394.2

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상이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균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부, 북부, 동부, 기타 순서였으며 20년 기간 동안 이 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기타 권역이 가장 컸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중앙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후 남부와 서부의 중앙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1~15년 기간의 중앙값은 기타권역 다음으로 남부와 서부 순이었고 동부와 북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년 기간 동안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적은 수의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 간 중앙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1996~2000년 기간 기타지역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상당 수준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52]는 각 권역의 총비용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총비용 또한 평균이 2011~15년 대폭 상승했다. 중앙값도 서부권역을 제외하면 같은 현상을 보였다. 1996~2000년 기간 평균은 북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서부, 동부, 남부, 기타권역 순서였다. 하지만 서부와 남부권역의 증가율이 타 지역을 추월하면서 2011~15년 기간에는 서부의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북부, 남부, 동부, 기타 권역 순 이었다. 중앙값은 1996~2000년 기간 기타 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부, 남부, 서부, 동부권역 순이었는데, 서부와 동부권역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011~15년 기간에는 남부권역의 중앙값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서부, 기타, 북부, 동부 권역의 순이었다. 모든 권역에서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서부권역은 지속적으로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년 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부권역을 제외하면 20년 기간 동안의 변화는 적어 보인다.

[표 3-53]은 권역별로 총보수의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총보수도 역시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급증했다. 서부와 남부 권역의 평균은 20년

표 3-52. 총비용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5,949	2,910.2	9.9	248.9
	2001~2005	23,229	3,092.7	12.9	162.5
	2006~2010	33,672	3,653.1	14.5	96.3
	2011~2015	27,390	6,695.6	12.9	144.8
동부	1996~2000	4,288	2,066.2	3.9	244.2
	2001~2005	8,255	1,430.4	5.6	62.6
	2006~2010	14,357	1,257.0	5.9	23.0
	2011~2015	9,633	2,646.2	5.0	57.8
북부	1996~2000	8,311	2,961.0	6.2	369.6
	2001~2005	14,884	2,718.3	7.3	158.8
	2006~2010	26,456	2,511.3	8.1	65.3
	2011~2015	19,111	4,526.7	6.8	116.9
남부	1996~2000	8,932	1,705.3	3.6	284.4
	2001~2005	14,269	1,786.1	5.1	166.6
	2006~2010	22,220	2,138.6	6.5	106.6
	2011~2015	15,372	3,964.8	5.6	200.0
기타	1996~2000	188	1,939.4	2.4	543.5
	2001~2005	456	2,006.1	4.0	194.2
	2006~2010	831	1,887.5	5.9	35.0
	2011~2015	632	2,440.4	4.9	111.9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간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1996~2000년 기간에는 동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북부, 서부, 남부의 순서였으며, 서부와 남부권역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부와 남부의 증가세가 커지면서 2011~15년 기간에는 서부와 남부의 평균은 거의 같았으며 다음으로 북부, 동부, 기타권역 순서였다. 증양값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급증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남부권역의 경우에는 증양값이 1996~2000년 기간의 수준에 2011~15년 기간의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증양값도 평균과 마찬가지로 서부와 남부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표 3-53. 총보수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4,559	205.5	8.6	14.3
	2001~2005	19,969	215.9	9.4	12.7
	2006~2010	26,701	271.6	9.7	13.0
	2011~2015	21,606	511.1	10.0	22.2
동부	1996~2000	3,917	315.8	5.5	18.0
	2001~2005	7,031	230.0	7.7	5.5
	2006~2010	11,868	155.4	9.4	3.0
	2011~2015	8,012	339.9	7.6	7.3
북부	1996~2000	7,787	241.9	7.7	16.9
	2001~2005	13,070	265.9	10.0	10.4
	2006~2010	21,302	247.9	11.1	7.7
	2011~2015	15,457	430.7	9.0	16.4
남부	1996~2000	8,494	176.6	5.1	19.2
	2001~2005	12,941	199.8	6.5	15.0
	2006~2010	19,106	250.1	10.1	13.5
	2011~2015	13,120	500.3	9.9	28.1
기타	1996~2000	185	270.5	2.4	47.3
	2001~2005	415	244.4	3.9	18.4
	2006~2010	749	158.9	6.1	3.3
	2011~2015	566	271.6	5.1	14.2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1~15년 기간 증양값은 남부, 서부, 북부, 동부, 기타권역 순서로 변화였다. 변동계수는 20년 전체 기간을 보면 기타권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서부, 북부, 남부권역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모든 지역에 있어서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20년 기간 동안 평균과 증양값의 거리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54]는 권역별 세전순익의 기간별 통계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균과 증양값이 2011~15년 기간 급증하지 않았다. 평균은 모든 지역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부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부권역

표 3-54.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5,768	203.0	4.3	9.4
	2001~2005	23,409	231.0	1.5	13.2
	2006~2010	34,059	350.7	2.6	12.0
	2011~2015	27,592	498.7	1.4	12.3
동부	1996~2000	4,226	44.7	6.1	40.2
	2001~2005	8,327	98.3	0.6	28.0
	2006~2010	14,521	148.5	1.2	12.0
	2011~2015	9,700	284.2	0.9	14.0
북부	1996~2000	8,251	195.8	4.1	13.8
	2001~2005	15,006	250.8	0.8	21.4
	2006~2010	26,791	300.6	1.2	18.3
	2011~2015	19,514	355.1	0.8	20.1
남부	1996~2000	8,877	55.9	4.2	12.7
	2001~2005	14,335	117.0	1.1	11.0
	2006~2010	22,408	176.4	2.5	13.3
	2011~2015	15,449	242.6	1.7	17.8
기타	1996~2000	185	303.4	25.9	4.2
	2001~2005	458	300.3	0.6	7.7
	2006~2010	837	313.6	0.7	9.5
	2011~2015	637	489.0	1.9	9.5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증양값만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증양값은 등락을 반복했고, 동부권역의 증양값은 20년 기간 동안 크게 하락했다. 평균의 변동성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평균과 증양값의 격차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서부와 기타권역의 격차가 가장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55]는 권역별 ROA의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평균은 기타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의 평균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부권역의 평균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변동성은 남부와 북부가 높았고 서부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3-55. ROA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5,711	0.02	4.9	0.01
	2001~2005	22,088	0.02	6.2	0.01
	2006~2010	30,889	0.02	4.8	0.01
	2011~2015	24,894	0.02	4.2	0.01
동부	1996~2000	4,232	- 0.00	16.2	0.01
	2001~2005	7,984	0.01	- 22.9	0.00
	2006~2010	13,625	0.03	4.6	0.01
	2011~2015	9,019	0.03	6.1	0.00
북부	1996~2000	8,176	0.02	7.2	0.00
	2001~2005	14,067	0.02	10.6	0.00
	2006~2010	23,947	0.03	6.9	0.01
	2011~2015	17,320	0.01	9.8	0.01
남부	1996~2000	8,833	0.00	20.9	0.00
	2001~2005	13,651	0.01	7.5	0.00
	2006~2010	20,600	0.02	13.7	0.01
	2011~2015	14,070	0.01	59.4	0.01
기타	1996~2000	187	0.03	2.2	0.01
	2001~2005	432	0.04	2.4	0.00
	2006~2010	778	0.07	1.6	0.00
	2011~2015	594	0.05	1.7	0.01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56]은 권역별 총고정자산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한다. 총고정자산의 평균과 증양값도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대폭 상승한 특징을 보였다.

20년 기간 서부와 남부의 평균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급증했다. 따라서 1996~2000년 기간 평균의 크기는 기타, 북부, 서부, 동부, 남부의 순서였으나 2011~15년 기간에는 북부, 서부, 남부, 기타, 동부의 순으로 변화였다.

모든 지역의 증양값은 1996~2000년 기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1~15년 급증했는데, 특히 기타권역의 초반 감소가 가파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역

표 3-56.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5,445	1,724.3	6.7	140.6
	2001~2005	21,770	1,882.3	9.5	103.0
	2006~2010	30,059	2,073.9	12.2	74.1
	2011~2015	23,314	4,033.6	10.0	116.7
동부	1996~2000	4,066	1,568.4	4.4	154.1
	2001~2005	7,267	1,222.3	5.8	63.9
	2006~2010	12,379	954.2	7.0	37.9
	2011~2015	8,168	2,099.3	5.9	81.1
북부	1996~2000	8,217	2,933.1	10.6	192.9
	2001~2005	14,103	2,912.2	13.0	106.5
	2006~2010	23,940	2,410.8	13.9	61.8
	2011~2015	16,981	5,208.8	10.9	103.5
남부	1996~2000	8,978	1,166.6	5.1	196.3
	2001~2005	14,227	1,137.5	5.8	131.5
	2006~2010	22,188	1,209.4	6.5	93.0
	2011~2015	14,767	2,187.3	4.8	160.0
기타	1996~2000	187	4,087.6	2.7	392.6
	2001~2005	427	4,175.9	3.5	135.0
	2006~2010	815	1,959.1	4.6	54.5
	2011~2015	593	3,241.7	4.0	176.6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증양값은 20년 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변동계수는 기타권역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동부와 남부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서부와 동부권역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년 기간 동안 평균과 증양값의 거리는 증폭했으며, 특히 북부와 서부권역의 평균과 증양값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

[표 3-57]은 권역별 총부채의 기간별 통계를 보여준다. 모든 지역의 총부채에 대한 평균과 증양값 역시 2011~15년 기간 전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부권역의 평균은 20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나머지 권역의 평균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급증했다. 총부채의 증양값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

표 3-57. 총부채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서부	1996~2000	16,558	6,931.6	11.7	329.1
	2001~2005	25,048	7,019.3	15.1	231.4
	2006~2010	38,520	8,555.5	16.2	172.8
	2011~2015	30,060	18,437.0	14.1	316.1
동부	1996~2000	4,425	3,972.9	5.7	341.1
	2001~2005	8,842	2,735.6	9.0	159.6
	2006~2010	16,143	2,593.1	12.3	131.7
	2011~2015	10,522	6,625.1	10.6	229.9
북부	1996~2000	8,624	6,369.2	6.7	395.9
	2001~2005	16,536	5,949.8	9.4	193.6
	2006~2010	31,532	5,220.4	11.1	127.9
	2011~2015	22,460	10,887.0	9.8	219.6
남부	1996~2000	9,327	4,175.1	7.1	372.7
	2001~2005	15,390	4,120.3	9.3	226.5
	2006~2010	25,713	4,798.5	10.9	171.4
	2011~2015	17,139	12,013.5	9.4	360.8
기타	1996~2000	197	6,415.3	2.4	833.7
	2001~2005	520	4,507.6	3.7	226.7
	2006~2010	998	2,574.9	5.1	125.7
	2011~2015	721	6,081.3	4.6	390.9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2011~15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기타권역의 증양값이 대폭 하락한 것이 두드러진다. 변동계수는 기타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년 간 평균과 증양값의 격차는 모든 지역에서 커졌다.

[표 3-58]은 권역별 유동비율의 기간별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동비율의 평균은 서부와 동부권역에서 2011~15년 기간 급증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등락을 반복했다. 증양값은 20년 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전의 기업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역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유동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든 경우의 증양값이 2 이하를 나타내며 대

표 3-58.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권역별)

구분	연도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서부	1996~2000	16,204	3.2	2.9	1.9
	2001~2005	23,281	2.7	3.8	1.6
	2006~2010	34,386	3.4	13.7	1.5
	2011~2015	27,521	15.3	27.2	1.3
동부	1996~2000	4,319	2.9	7.6	1.7
	2001~2005	8,086	3.2	6.4	1.5
	2006~2010	14,431	5.6	11.0	1.5
	2011~2015	9,446	14.8	20.7	1.4
북부	1996~2000	8,450	8.2	6.0	2.1
	2001~2005	14,762	4.3	8.8	1.7
	2006~2010	27,098	8.2	29.0	1.6
	2011~2015	19,902	6.6	40.7	1.3
남부	1996~2000	9,163	3.9	3.0	1.8
	2001~2005	14,505	2.9	2.5	1.5
	2006~2010	23,464	6.3	20.9	1.5
	2011~2015	15,901	3.0	9.2	1.2
기타	1996~2000	195	7.1	6.3	1.8
	2001~2005	460	2.3	2.0	1.5
	2006~2010	891	5.7	4.7	1.5
	2011~2015	651	2.2	6.3	1.3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수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부, 동부, 북부 권역에 대한 변동계수는 급증세를 보인 반면, 기타 권역의 변동계수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편이었다.

3. 소결

기업 전체의 샘플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면 모든 변수의 경우 평균이 중앙값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변수의 변동계수 또한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기업의 지급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앙값이 2보다 낮음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전체 표본의 기간별 통계 추이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나타낸다.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은 2001~05년 기간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했고, 2006~10년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양상은 인도 기업들의 실적이 2010년 이후 매우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동비율의 중앙값이 20년 기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20년간 기업들의 유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의 기업들을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민간-민관합작, 지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여러 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특성도 전체 기업의 특성과 거의 일치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큰 수준을 나타냈고, 평균이 2011~15년 기간 급증했으며, 변동계수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이나 중앙값은 2 이하였다.

은행의 규모나 실적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은행만이 유일하게 유동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2 이상을 기록해, 유동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했으며, 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다. 인도 공기업은 규모나 실적이 민간이나 민관합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평균의 경우 20년 기간 서부와 남부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중앙값은 20년 기간 감소세를 보였는데, 기업의 규모나 실적에 대한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적과 성과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다. 정보통신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산업 내 기업 간 격차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 산업별 기업특성

1) 1, 2, 3차 산업 비교

1, 2, 3차 산업의 비중에 대한 기간별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2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차와 1차 순이었다. 총자산과 총부채에서만 3차의 비중이 1차보다 컸는데, 금융기업이 3차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6~2010년 기간까지는 2차 산업의 총보수 비중이 3차 산업보다 컸으나, 2011~15년 기간에 진입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보다 커졌는데, 이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수입, 총비용, 세전순익의 각 산업 비중은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총자산은 3차 산업이 증가한 반면, 1차 산업은 감소했다. 세전순익의 각 산업 비중은 1996~2015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총고정자산과 총부채는 20년 기간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이 증가했다.

1, 2, 3차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공통점은 전체 샘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변수에서 변동계수는 1차 산업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2차와 3차 순이었는데, 2차와 3차 산업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1차 산업의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모든 산업의 변동계수는 매우 큰 수준이었다. 모든 산업의 공통점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업의 실적은 양(+)의 비대칭(Skewed to the Right)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높은 변동계수와 중앙값보다 매우 큰 평균을 볼 때 물론 산업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포의 퍼진 정도가 매우 크며, 인도 기업의 분포는 실적 또는 규모가 매우 큰 소수 기업들과 다수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변수의 평균은 2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3차와 1차 순이었다. 중앙값은 역시 2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다음으로 1

차, 3차의 순이었다. 따라서 3차 산업의 분포가 가장 고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총자산과 총부채에서는 3차 산업의 평균이 가장 컸는데,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업들이 3차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고정자산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15년간 변화가 미미하다가 2011~15년 급증한 것은, 이 기간 인도 기업의 장기투자가 대폭 상승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금융과 비금융 부문 비교

은행과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업 및 비금융 기업의 비중은 대부분 변수들의 경우 비금융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총고정자산에서는 비금융 기업들의 비중이 95%를 기록했다. 금융부문의 총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당연해 보인다.

산업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금융과 비금융 부문 모두 2011~15년 기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급증한 점이 공통적이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경우 평균과 중앙값 모두 은행이 다른 두 기업군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비금융과 은행제의 금융 기업 간 차이도 상당했다. 이는 은행제의 금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임을 나타낸다. 총수입과 총비용의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은행제의 금융, 비금융 부문의 순서였는데, 은행이 가장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총자산과 총부채도 평균과 중앙값 모두 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의 경우 은행제의 금융과 비금융 부문의 순이었고, 중앙값은 비금융 기업이 은행제의 금융기업보다 높았다. 총자산과 총부채에서도 평균과 중앙값의 간격은 은행제의 금융기업이 가장 컸다.

총보수, 세전순익, 총고정자산의 평균과 중앙값도 은행이 다른 두 기업군에 비해 매우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융과 은행제의 금융 부문의 순서였는데, 1996~2015년 기간 동안 은행의 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은행제의 금융과 비금융 부문 순이

었다.

ROA는 대부분의 변수들과 다른 양상은 나타냈다. 비금융 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은행제의 금융기업과 은행의 순서였다. 중앙값은 모든 기업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변동계수는 은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은행제의 금융기업과 비금융 기업의 순이었다.

유동비율은 은행의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도 1 이하로, 은행의 유동성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의 특성상 이러한 통계는 당연해 보인다. 비금융과 은행제의 금융기업의 경우 평균이 2 이상이나 중앙값이 2 이하로 50%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3)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비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변수의 경우 전체 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정보통신업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은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총보수와 총고정자산에서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다른 변수들의 비중에 비해 이 두 변수의 비중에서 정보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급증했으며,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변수에서 정보통신업의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총보수의 평균에서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중앙값은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보수에 있어서 정보통신업 내 기업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1) 공기업과 민간기업 비교

총자산과 총부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50% 이상, 공공부문이 40% 정도를 기록했고,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민관합작기업의 비중은 모든 변수에서 2% 미만이었다. 총자산과 총부채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공공이 민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2011~15년 기간 평균과 중앙값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관합작기업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부문의 총수입, 총비용, 총보수, 세전순익, 총부채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평균과 중앙값의 경우 공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민관합작과 민간부문의 순이었으며, 변동계수는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순이었다. 총자산도 중앙값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총수입 등의 변수들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ROA는 모든 기업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비슷했으며, 변동성은 민관합작기업이 가장 낮았고 민간과 공기업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유동비율은 기업군 간 기간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였는데, 가장 최근인 2011~15년 기간 기준 모든 기업들의 중앙값이 2 이하로 지급능력의 안정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이한 점은 1996~2005년의 10년 기간에는 민관합작기업의 유동비율 평균과 중앙값이 전부 2 이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중앙값이 2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소수의 고성과 기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반 이상의 기업들은 단기 지급능력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비교

모든 변수에서 국내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기업수를 비교해 보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은 해외기업이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은 두 기업군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11~15년 급증했다. 모든 중앙값은 1996~2010년 기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1~15년 대폭 상승했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유동비율도 앞서 살펴본 다른 구분의 특성과 같이 국내와 해외기업 모두 평균은 2 이상, 중앙값은 2 이하를 나타내었는데, 해외기업도 유동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011~15년 기간 국내기업의 유동성 평균이 해외기업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 지역별 기업특성

주요 변수의 지역별 비중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부권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부, 남부, 동부, 기타 순이었다. 권역별 GDP 기준으로 보면 북부권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기업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인도 최대의 산업지역인 마하라슈트라 주와 고성장을 지속해온 구자라트 주가 속해 있는 서부권역의 비중이 높은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점은 세전순익을 제외한 2011~15년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변수의 경우 서부와 남부의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모든 지역의 중앙값은 2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의 평균과 중앙값의 격차가 커졌는데, 이는 기업의 분포가 점점 더 고르지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즉, 소수 기업의 팔목할 만한 성과에 의해 전체 기업의 실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총보수의 경우 동부와 기타권역의 평균이 20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유동비율도 역시 모든 지역이 평균은 2 이상이

나 중앙값은 2 이하를 나타내며, 인도 기업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르지 못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 개요

2. 중요소생산성 추정

3. 기업특성별 중요소생산성 비교

4. 소결



1. 개요

본장에서는 인도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추정하고,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것이 위치한 지역, 소유구조 등 기업의 특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량 변화 중 생산요소 투입량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두 기업의 생산량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총요소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량은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총요소생산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이 함수관계의 잔차(Residual)를 계산함으로써 도출된다.

기업의 생산량과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다면, 통계학적 방법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널리 사용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생산함수는 [식 4-1]로 나타낼 수 있다.

$$Y_{jt} = A_{jt} L_{jt}^{\alpha} K_{jt}^{\beta} \quad \text{[식 4-1]}$$

Y_{jt} 는 t년도 기업 j의 생산량, L_{jt} 와 K_{jt} 는 각각 t년도 기업 j의 노동과 자본 투입량, A_{jt} 는 총요소생산성(또는 기술 수준)을 나타낸다.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인 L_{jt} 와 K_{jt} 는 각종 기업 자료에 양적으로 기재되어 관측이 가능한 반면, 개별 기업의 생산성인 A_{jt} 는 관측되지 않는 부분이다. [식 4-1]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생산함수를 선형화하고 추정을 위한 식으로 변환하면 [식 4-2]로 나타낼 수 있다.

$$y_{jt} = a + \alpha l_{jt} + \beta k_{jt} + u_{jt}, \quad \text{[식 4-2]}$$

알파벳 소문자는 로그값을 뜻하며, $a + u_{jt} = \ln A_{jt}$ 이다. a 는 기업과 연도에 걸친 생산성의 평균치이며, u_{jt} 는 평균으로부터의 기업, 연도 간 차이를 뜻한다. 만약 u_{jt} 에 생산요소 투입량을 결정하는 기업이 관측 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l_{jt} , k_{jt} 과 u_{jt}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요소, 자신만이 인지하는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과 같은 전통적 방식을 적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다면 내생성(Endogeneity)에 의한 추정치의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즉, OLS는 투입요소의 외생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내생성으로 인해 $E[l_{jt}u_{jt}] \neq 0$ 또는 $E[k_{jt}u_{jt}] \neq 0$ 이므로 α 와 β 의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없다.

학계에서는 생산함수 추정 시 수반되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u_{jt} 를 생산주체인 기업이 인지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면,

$$y_{jt} = a + \alpha l_{jt} + \beta k_{jt} + \omega_{jt} + \epsilon_{jt}, \quad [\text{식 4-2}]$$

ϵ_{jt} 는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따른 일반적 오차 또는 생산량인 y_{jt} 에 대한 계측 오차인 반면, ω_{jt} 는 생산자에게만 관측되는 생산성 충격으로 요소투입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생성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ω_{jt} 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생산함수 추정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하거나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추정하기도 하나, 적절한 도구변수를 구하기 어렵고 ω_{jt} 를 ω_j 나 ω_t 로 고정할 근거도 부족하므로 실제 적용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ω_{jt} 를 관측 가능한 변수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일관추정치를 구하는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구조적 접근 방법(Structural Estimation Approach)이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Olley and Pakes(1996, 이하 OP)는 관측 불가능한 생산성 충격의 대리변수로 기업의 투자를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에 접근한다. 자본이 ω_{cit} 의 현재와 과거 수준에 의존하고 투자가 $I_{jt} = K_{jt} - (1 - \delta)K_{jt-1}$ 로 계산된다면, 투자함수식은 $i_{jt} = i(k_{jt}, \omega_{jt})$ 로 표현된다. 투자가 $i > 0$ 에서 ω_{jt} 에 대해 강증가(strictly increasing)한다면 $i > 0$ 에 대해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ω_{jt} 는 관측 가능한 i_{jt} 와 k_{jt} 의 함수가 되고, 이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생산함수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OP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자료상 양(+)의 투자를 보이는 관측치의 수에 의존한다. 모든 기업이 매년 투자를 행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실적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0의 투자나 유실된 투자 관측치를 데이터에서 제거해야 하므로 OP의 방법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해 Levinsohn and Petrin(2003)은 ω_{jt} 의 대리변수로 투자보다는 중간재 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OP와 유사하게 중간재 투입량을 생산성과 자본의 함수로 가정한 후 이것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중간재 데이터는 기업 수준의 투자에서보다 0인 관측치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OP 방식보다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총요소생산성 추정

가. 추정 모형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투자실적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가용성을 고려하여 Levinsohn and Petrin(2003, 이하 LP)이 제안한 방식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OP의 투자함수식을 대체하는 중간재 수요함수식은 $m_{jt} = m(k_{jt}, \omega_{jt})$ 이고, 이것이 ω_{jt} 에 대

해 강증가한다면, ω_{jt} 는 다음과 같이 k_{jt} 와 m_{jt} 의 함수가 된다.⁵⁹⁾

$$\omega_{jt} = \omega(k_{jt}, m_{jt}), \text{ 단 } \omega = m^{-1} \quad [\text{식 4-3}]$$

[식 4-2]에서 y_{jt} 가 총수입(gross revenue)이라면,⁶⁰⁾ 생산함수는

$$y_{jt} = a + \alpha l_{jt} + \beta k_{jt} + \gamma m_{jt} + \omega_{jt} + \epsilon_{jt} \quad [\text{식 4-4}]$$

[식 4-3]을 [식 4-4]에 대입하면,

$$y_{jt} = \alpha l_{jt} + \phi_{jt} + \epsilon_{jt}, \text{ 단, } \phi_{jt} = a + \beta k_{jt} + \gamma m_{jt} + \omega(k_{jt}, m_{jt}) \quad [\text{식 4-5}]$$

OP 방식과 마찬가지로 제1단계에서 ϕ_{jt} 를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k_{jt} 와 m_{jt} 에 대한 고차다항식으로 근사한 후 OLS로 [식 4-5]를 추정하여 α 와 ϕ_{jt} 의 불편추정량을 도출한다. 즉, $\hat{\phi}_{jt} = \hat{y}_{jt} - \hat{\alpha} l_{jt}$. 제2단계에서는 각각 자본과 중간재의 계수인 β 와 γ 의 불편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hat{\omega}_{jt}$ 를 추정한다. 이에 앞서 LP는 현재의 ω_{jt} 가 바로 전기의 상태에 의존하는 확률과정, 즉 1차 마코브 과정(Markov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식 4-6]으로 표현할 수 있다.

$$\omega_{jt} = E[\omega_{jt} | \omega_{jt-1}] + \xi_{jt}, \quad [\text{식 4-6}]$$

단, ξ_{jt} 는 k_{jt} 와 관련이 없는 생산성 충격으로 기업이 인지하는 총요소생산성 변화 중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며, 생산함수 추정 시 동시성(Simultaneity)

59) 본절에서는 LP의 방법론을 소개하기 위해 주로 Petrin, Poi, and Levinsohn(2004)의 수식을 따른다.

60) 본 연구는 생산량 y 를 대리하는 변수로 개별기업의 총소득(total income) 자료를 이용할 예정이므로 y 가 총수입일 때를 가정한 생산함수 추정법에 대해 설명한다. y 가 부가가치(value added)인 경우의 추정방법은 Petrin, Poi, and Levinsohn(2004), pp. 115-116을 참고토록 한다.

에 의한 내생성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다. [식 4-6]에 의해 [식 4-5]의 추정결과인 $\widehat{\omega}_{jt} = \widehat{\phi}_{jt} - \beta k_{jt} - \gamma m_{jt}$ 로부터 다음과 같이 $\widehat{\beta}$ 과 $\widehat{\gamma}$ 을 얻기 위한 추정식이 식(4-7)과 같이 도출된다.

$$\widehat{\epsilon}_{jt} + \widehat{\xi}_{jt} = y_{jt} - \widehat{\alpha} l_{jt} - \beta k_{jt} - \gamma m_{jt} - E[\widehat{\omega}_{jt} | \widehat{\omega}_{jt-1}] \quad [\text{식 4-7}]$$

이상의 식에서 β 와 γ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식 4-6]이 의미하는 바, 적어도 두 개의 적률조건(Moment condition), 예를 들어 $E[\epsilon_{jt} + \xi_{jt} | k_{jt}] = 0$ 과 $E[\epsilon_{jt} + \xi_{jt} | m_{jt-1}] = 0$ 이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β 와 γ 를 [식 4-8]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min_{(\beta, \gamma)} \sum_j \left\{ \sum_t (\widehat{\epsilon}_{jt} + \widehat{\xi}_{jt}) Z_{jt} \right\}^2, \quad [\text{식 4-8}]$$

[식 4-8]에서는 $Z_{jt} \equiv (k_{jt}, m_{jt-1})$ 로 도구변수 행렬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두 단계에 걸친 추정과정을 통해 요소 투입량의 계수인 α , β , γ 의 불편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exp(y_{jt} - \widehat{\alpha} l_{jt} - \widehat{\beta} k_{jt} - \widehat{\gamma} m_{jt})$ 로 계산된다.

나. 데이터

본 연구는 인도의 기업 수준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위해 CMIE의 Prowes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업별 재무 자료를 사용한다.⁶¹⁾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생산량(Y)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총소독

61) CMIE의 Prowes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을 참고한다. 인도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위한 기간은 본 보고서의 앞선 내용에 맞추어 1996~2015년으로 설정한다. 다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계산 과정에서 첫 번째 연도가 누락되는 것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

표 4-1.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	단위	출처
생산량(Y)	총소득	백만 Rs	Prowess CMIE 데이터베이스
노동투입량(L)	임금총액	백만 Rs	
자본투입량(K)	연말 순고정자산액	백만 Rs	
중간재투입량(M)	전력 및 용수사용 총액	백만 Rs	

자료: 저자 작성.

(total income)과 순고정자산(net fixed asset)으로 정의한다. 노동투입량(L)은 기업별 임금총액으로 대리하며,⁶²⁾ 중간재 투입량(M)은 Levinsohn and Petrin(2003)의 제안에 따라 전력 및 용수사용액으로 측정한다.⁶³⁾ 모든 변수가 인도 현지통화인 루피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인도의 2011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후 사용한다. [표 4-1]은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를 나타낸다.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은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라 크게 3개로 분류된다. 즉, 농업, 어업, 임업은 1차 산업, 제조업과 건설업은 2차 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정의된다. [표 4-2]는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의 관측치수와 통계적 특성을 요약한다. 총관측치의 산업별 구성은 1차 산업 3.3%, 2차 산업 57.5%, 3차 산업 39.2%로 2차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소득으로 계산한 생산량은 전산업 기준 평균 47억 2,400만 루피이며,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이 평균 61억 500만 달러로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1차 산업 31억 1,000만 루피, 3차 산업 28억 3,600만 루피 순이다. 노동투입량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크며, 자본투입량과 전력 및 용

합수를 추정한다.

- 62) 생산함수의 정의상 노동투입 변수로 고용자 수나 노동시간을 사용해야 하나, CMIE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이 한 해 지급한 임금총액을 노동투입량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본 분석에서 도출되는 노동투입량의 계수는 통상적인 생산함수의 노동소득분배율이라기보다는 총생산량 중 노동비용 투입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63) 중간재 투입변수로 전력소비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Levinsohn and Petrin(2003), pp. 325-326을 참고한다.

표 4-2. 변수의 산업별 통계적 특성 1

구분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전 산업	생산(y)	147,563	4,724	50,738
	노동(L)	147,563	262	2,629
	자본(K)	147,563	1,882	18,177
	중간재(m)	147,563	161	1,395
1차 산업	생산(y)	4,816	3,110	13,799
	노동(L)	4,816	137	608
	자본(K)	4,816	886	3,016
	중간재(m)	4,816	121	494
2차 산업	생산(y)	84,824	6,105	64,462
	노동(L)	84,824	253	1,572
	자본(K)	84,824	2,314	20,287
	중간재(m)	84,824	208	1,447
3차 산업	생산(y)	57,923	2,836	21,229
	노동(L)	57,923	286	3,735
	자본(K)	57,923	1,332	15,415
	중간재(m)	57,923	96	1,364

자료: 저자 작성.

수사용량으로 계산한 중간재투입량 역시 2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비교할 때, 1차 산업의 중간재투입량이 3차 산업보다 소폭 클 뿐 노동과 자본투입량은 모두 3차 산업에서 더 크다.

[표 4-3]은 산업별로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생산량 간의 비율, 변수의 표준편차와 평균 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생산량 대비한 노동 투입의 비중은 3차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크며, 자본과 중간재 투입 비중의 산업 간 격차는 비교적 작은 가운데, 각각 3차 산업과 1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1차 산업의 노동 투입 비중이 2차 산업보다 크고, 3차 산업의 중간재 투입량이 세 개 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량의 표준편차와 평균값의 비율로 계산한 생산량의 기업 간, 연도 간 차이를 살펴보면, 2차 산업에서 생산량으로 측정된 기업규모 간 차이가 두드러지

표 4-3. 변수의 산업별 통계적 특성 2

구분	요소투입량/생산량			표준편차/평균			
	노동	자본	중간재	생산	노동	자본	중간재
전 산업	.0555	.3984	.0341	10.740	10.034	9.658	8.665
1차 산업	.0441	.2849	.0389	4.437	4.438	3.404	4.083
2차 산업	.0414	.3790	.0341	10.559	6.213	8.767	6.957
3차 산업	.1008	.4697	.0339	7.486	13.059	11.573	14.208

주: 요소투입량/생산량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표 4-2]를 토대로 저자 작성.

는 반면 노동, 자본, 중간재 등 요소 투입량의 기업 간, 연도 간 차이는 3차 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 1차 산업은 생산량과 생산요소 투입량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고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별로 투입요소 중 기업 간, 연도 간 격차가 가장 큰 생산요소는 1차 산업에서 노동, 2차 산업은 자본, 3차 산업에서는 중간재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2차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큰 가운데, 기업별 생산량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자본 투입량의 기업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3차 산업의 경우 노동 투입량이 생산량의 크기와 기업 간 생산량 차이를 유발하는 데 다른 산업에서보다 비교적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 총소득을 생산량으로 사용하므로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중간재 투입을 고려한 생산함수식을 정의한다. 또한 산업분류를 고려할 때 생산함수의 요소투입 계수가 산업 간에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Levinsohn and Petrin(2003)의 방식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식 4-5]의 ϕ_{jt} 를 3차 다항식으로 근사한 후 1단계와 2단

계 추정과정을 수행한다.⁶⁴ 추정계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부트스트랩(bootstrap)을 250회 반복하여 도출한다.

[표 4-4]는 산업별 생산함수의 OLS, 고정효과 모형, LP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노동 계수(α)의 OLS 추정치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표본에서 LP 추정치를

표 4-4. 생산함수 추정결과

구분		(1) OLS	(2) 고정효과	(3) LP
1차 산업	노동(α)	.4801** (.0129)	.5843** (.0189)	.4788** (.0355)
	자본(β)	.1232** (.0143)	.0954** (.0157)	.3304** (.1047)
	중간재(γ)	.3919** (.0514)	.3651** (.0149)	.5078** (.1037)
	R-squared	.7307	.7286	-
	관측치 수	4,816	4,816	4,816
2차 산업	노동(α)	.5147** (.0029)	.5618** (.0044)	.5132** (.0084)
	자본(β)	.2324** (.0029)	.1016** (.0035)	.2732** (.0221)
	중간재(γ)	.2169** (.0024)	.2639** (.0033)	.5162** (.0293)
	R-squared	.7573	.7526	-
	관측치 수	84,824	84,824	84,824
3차 산업	노동(α)	.6049** (.0039)	.5495** (.0056)	.6088** (.0091)
	자본(β)	.1850** (.0036)	.1223** (.0043)	.1582** (.0186)
	중간재(γ)	.1371** (.0045)	.2203** (.0552)	.3274** (.0442)
	R-squared	.6493	.6470	-
	관측치 수	57,923	57,923	57,923

주: 1)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2)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64) 따라서 실증분석 모형은 $y_{jt} = a + \alpha l_{jt} + \beta k_{jt} + \gamma m_{jt} + \sum_{h=1}^3 \sum_{i=1}^{3-h} \delta_{ht} k_{jt}^h m_{jt}^i + \epsilon_{jt}$ 가 된다.

상회하는 반면, 3차 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LP 추정치가 더 큰 값을 갖는다. Levinsohn and Petrin(2003)에 따르면, 이론적, 실증적으로 OLS의 α 값이 LP 추정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자본 계수(β)의 OLS 추정치는 투입요소와 생산성 충격 간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상향(upward) 또는 하향(downward) 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Prowess CMIE 인도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LP 추정치가 OLS 추정치보다 큰 값을 갖는데 반해 3차 산업의 경우 OLS 추정치보다 작게 나타나 표본 특성에 산업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투입계수인 γ 는 전 산업에서 LP 추정치가 OLS보다 높은 값을 갖는다. 한편 고정효과를 포함한 생산함수 추정계수는 OLS와 LP의 추정결과와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자본 계수(β)의 크기가 OLS나 LP 추정치에 비해 작은 값을 갖고 노동 계수(α)도 다른 두 추정치와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LP 추정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중간재 계수(γ), 3차 산업에서는 노동 투입의 계수(α)가 가장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자본의 추정계수(β)는 1차 산업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3차 산업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3.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가. 산업별 비교

1) 1차, 2차, 3차 산업⁶⁵⁾

인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생산함수 추정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표 4-4]의 모형(3)에 제시된 추정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산업별 총요소생산

65) 상세한 산업 분류는 본 보고서의 제3장 [표 3-1]을 참고한다.

성은 개별기업의 총소득을 가중치로 두고 기업 단위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치를 합산하여 도출한다.⁶⁶⁾ [표 4-5]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가중평균값(weighted mean)과 중앙값(median)을 나타내며, 처음 4개 열과 마지막 3개 열은 각각 분석 기간 중 첫 5개년에 대비한 기간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와 1차 산업에 대비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여준다.

[표 4-5]에서 나타나듯 1차와 2차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평균적으로 2010년까지 대체로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다. 반면 3차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내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대체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2011~15년 동안 3차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최근 5년 동안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은 인도의 경기둔화 시점과도 일치한다. 인도는 2006~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을

표 4-5. 산업간 총요소생산성 비교

구분	1996~2000=1				1차 산업=1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0.97(0.92)	8.38(2.57)
2001~2005	1.25	1.36	0.93	0.93	1.05(0.93)	6.19(2.41)
2006~2010	1.63	1.61	0.89	1.00	0.96(0.92)	4.59(2.19)
2011~2015	1.35	1.20	0.87	0.88	0.87(0.96)	5.42(2.39)
중앙값						
1996~2000	1.00	1.00	1.00	1.00	0.89	2.29
2001~2005	1.01	1.01	0.83	1.00	0.89	1.87
2006~2010	1.07	1.21	0.86	1.14	1.00	1.84
2011~2015	0.94	1.03	0.82	1.03	0.97	1.99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66) 기업특성별로 표본에 속한 기업의 상세한 숫자는 <부록 1>을 참고한다.

제외하고 8.5~10.3%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나 2011~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6~7.6% 수준으로 급감한다.⁶⁷⁾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하면, 1차와 2차 산업의 생산성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2차 산업이 다소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생산성은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별로 총요소생산성 순위의 중앙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성은 총소득으로 가중한 산업의 평균 생산성보다 대체로 낮다. 이는 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포가 좌측으로 다소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차 산업의 경우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평균값이 중앙값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생산성 분포의 좌측 꼬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총소득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산업 수준의 평균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기업 간 격차는 기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차 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표 4-6]은 2차 산업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한다. 비제조업에는 광업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관련 산업, 건설업이 포함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5년 동안 하락세로 전환된다. 특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대비한 비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한다.

2차 산업 중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낮음으로써 전체적인 평균 생산성도 낮은 반면 중간적 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제조업 부문 기업별 생산성 분포가 우측에 쏠려 있음을 의미한다. 2차 산업의 비제조업 부문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67) World Bank WDI(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일: 2016. 11. 25).

표 4-6. 2차 산업 중 제조업과 비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구분	1996-2000=1		제조업=1
	제조업	비제조업	비제조업
평균값			
1996~2000	1.00	1.00	0.47(1.40)
2001~2005	1.23	2.18	0.84(1.52)
2006~2010	1.43	2.89	0.96(1.53)
2011~2015	1.00	2.81	1.33(1.61)
중앙값			
1996~2000	1.00	1.00	1.23
2001~2005	1.01	1.08	1.32
2006~2010	1.18	1.39	1.45
2011~2015	0.99	1.32	1.64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기업의 규모와 생산성이 반비례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3)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서비스

3차 산업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비금융서비스는 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도소매, 운송, 정보통신,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다. [표 4-7]에 나타나듯, 금융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 개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중간적 위치에 있는 금융서비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기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업종의 평균적 생산성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의 생산성 분포가 갈수록 우측으로 가늘게 퍼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반해,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규모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기업별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가운데, 업종의 평균적 생산성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표 4-7. 3차 산업 중 금융과 비금융서비스 총요소생산성 비교

구분	1996-2000=1		비금융서비스=1
	금융서비스	비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평균값			
1996~2000	1.00	1.00	1.19(1.00)
2001~2005	1.02	0.91	1.33(0.88)
2006~2010	1.09	0.88	1.47(0.96)
2011~2015	1.33	0.81	1.96(0.88)
중앙값			
1996~2000	1.00	1.00	1.33
2001~2005	0.82	0.86	1.27
2006~2010	0.86	0.89	1.29
2011~2015	0.78	0.87	1.18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비금융서비스와 비교한 금융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6~2000년 평균 1.19배에서 2011~15년에는 1.96배로 높아졌으며, 중간적 기업의 생산성 역시 비금융서비스업보다 높다. 그러나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업종 생산성은 비금융서비스보다 오히려 낮음으로써 생산성에 따라 기업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기업별 생산성 분포의 좌측으로 갈수록 비금융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이 금융서비스 기업보다 높은 반면 중앙을 포함하여 우측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성은 금융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난다.

4) 정보통신(ICT)서비스

인도는 전통적인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강국이며, 최근에는 정부주도하에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조업 및 기타비금융서비스업 생산성과의 비교를 통해 인도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NIC

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J)으로 정의한다.

[표 4-8]의 처음 세 개의 열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의 평균 생산성은 1996년 이래 대체로 하락 추세에 있다. 2006~10년 인도 경제의 고성장기에 다소 간의 반등이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의 생산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총요소생산성의 중앙값과의 비교할 때, 규모에 따른 기업 단위에 생산성 편중은 보이지 않으며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근 5개년의 경기둔화에도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들어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정보통신서비스 생산성이 1.5배 가량 높다.

[표 4-8]의 마지막 세 개 열은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서비스와 기타비금융서비스를 비교한다. 앞선 [표 4-7]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표 4-8. 정보통신서비스의 총요소생산성

구분	1996-2000=1		제조업=1	1996-2000=1		기타 비금융=1
	ICT	제조업	ICT	ICT	기타 비금융	ICT
평균값						
1996~2000	1.00	1.00	2.02(1.79)	1.00	1.00	0.25(0.59)
2001~2005	0.85	1.23	1.40(1.61)	0.85	1.19	0.18(0.52)
2006~2010	0.98	1.43	1.38(1.41)	0.98	1.21	0.20(0.50)
2011~2015	0.75	1.00	1.52(1.51)	0.75	1.15	0.16(0.49)
중앙값						
1996~2000	1.00	1.00	1.91	1.00	1.00	0.77
2001~2005	0.77	1.01	1.45	0.77	0.91	0.65
2006~2010	0.72	1.18	1.16	0.72	0.97	0.57
2011~2015	0.71	0.99	1.36	0.71	0.96	0.56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포함한 전체 비금융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분석 기간 내내 하락세로 보인 반면, [표 4-8]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외할 경우 비금융서비스의 생산성은 상승세로 반전된다. 이는 기간에 따른 비금융서비스의 생산성 둔화가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생산성 하락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나타낸다. 다만 기타비금융서비스 기업 중 중간적 기업의 생산성은 완만한 감소를 보임으로써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비금융서비스업과 비교한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대체로 20% 안팎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7]의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성과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서비스 관련 업종과 통신서비스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기술서비스업은 통신서비스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는다. 인도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이 기대와는 달리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낮은 것은 인도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정보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적 특징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⁶⁸⁾

나. 소유구조별 비교

1) 공기업과 민간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전체 기업을 소유구조별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한 기업별 생산성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표 4-9]는 산업별, 기간별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평균적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1차 산업에서 생산성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전 기간에 걸쳐 기준시점인 1996~2000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2011~15년 생산성의 다소간 하락이 있었으나 여전히 1990년대 후반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68) 이는 인도의 정보통신서비스 생산성이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낮다는 것일 뿐 그것의 발전 수준이 절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거나 국제경쟁력 자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4-9.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구분	1996-2000=1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공기업	민간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2005	1.16	1.30	1.77	1.10	1.08	0.79
2006-2010	2.31	1.63	2.37	1.20	1.16	0.84
2011-2015	1.77	1.35	1.59	0.97	1.38	0.73
증양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2005	0.31	1.04	1.51	1.00	1.10	0.81
2006-2010	0.41	1.10	2.13	1.18	1.32	0.84
2011-2015	0.32	0.97	1.97	1.01	1.31	0.80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기준치로 두고 계산한 가중평균임.
 자료: 저자 작성.

2000년대 1차 산업에서 생산성의 전반적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5]에서 살펴본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증양값으로 살펴본 생산성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민간기업의 경우도 평균값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발생했고, 공기업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산업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큰 반면 민간기업은 큰 변동 없이 각 기간마다 대체로 동일한 생산성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1차 산업과는 달리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3차 산업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가장 극적인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데 반해 민간기업은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3차 산업 역시 규모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4-5], [표 4-7], [표 4-8]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2000년대 3차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비금융서비스 부문 중 정보통신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0]은 공기업 대비 민간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산업별, 기간별로 제시한다. 1차 산업에서 민간기업 생산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공기업에 근접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공기업의 64~69%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중간적 기업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차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기업규모가 큰 소수의 공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2차 산업 역시 기간에 관계없이 민간기업의 생산성이 공기업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앙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성과 단순평균으로 계산된 생산성은 민간기업에서 훨씬 더 높아,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공기업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0.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교

구분	민간기업(공기업=1)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평균값			
1996~2000	0.90(0.99)	0.98(2.14)	0.83(0.86)
2001~2005	0.99(1.35)	0.90(1.48)	0.61(0.80)
2006~2010	0.64(0.77)	0.73(1.30)	0.61(0.78)
2011~2015	0.69(0.89)	0.88(1.29)	0.44(0.74)
중앙값			
1996~2000	0.97	2.15	1.01
2001~2005	1.41	1.96	0.85
2006~2010	1.11	1.64	0.73
2011~2015	1.28	1.51	0.70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3차 산업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전반적 생산성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민간기업의 생산성은 공기업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생산성 순위의 중간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평균 생산성도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능가함으로써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생산성은 기술력과 경영능력, 노사관계 같은 기업 단위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및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 등 산업 또는 국가 단위의 능력과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앞선 절에서 분석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인도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의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의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규모의 경계를 누리고 제도적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

2)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표 4-11]은 인도 현지기업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으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고, 기간에 따른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1차 산업에 속해 있는 국내기업의 평균적 총요소생산성은 1996~2000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군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2차 산업에서도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지는 데 반해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은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3차 산업에서는 1차 산업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기업의 생산성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표 4-11.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구분	1996-2000=1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2005	1.38	0.82	1.40	1.03	0.94	1.00
2006~2010	1.79	0.96	1.67	1.05	0.91	1.16
2011~2015	1.51	0.56	1.24	0.82	0.88	1.19
중양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2005	1.04	0.83	1.00	1.06	0.81	0.85
2006~2010	1.10	0.88	1.19	1.21	0.85	0.86
2011~2015	0.97	0.66	1.02	0.99	0.81	0.77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한 가중평균임.

자료: 저자 작성.

종합하면, 생산성 측면에서 외국기업의 상승세는 2차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도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양자 간 경쟁시장과 경영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적절한 분석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도 진출 외국기업과 인도 국내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현지기업과 직접 생산성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인도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비교하는 대신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중 한국기업과 다른 외국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2]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 기타 해외기업의 평균적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2차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는 제조업이며, 이 분야의 강국답게 다른 해외기업과 비교할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차 산업의 생산성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한국업체는 3차 산업 중 도소매 거래 및 자동차 수리업(G)에

표 4-12. 외국계 기업 중 한국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구분	평균값(기타외국계=1)		중앙값(기타외국계=1)	
	2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96~2000	2.04	-	1.63	-
2001~2005	1.82	-	1.22	-
2006~2010	1.32	0.19	1.13	0.50
2011~2015	1.31	0.17	1.16	0.44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한 기중평균임.

자료: 저자 작성.

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보통신서비스(J)와 금융보험업(K)에 대한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3차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은 아직까 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생산성 수준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한국기업의 평균적 생산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지역별 비교

인도의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라 인도 대륙을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나눈다. 동부는 비하르, 오리사, 차티스가르, 자하르칸드 등 주로 벵골 만 북쪽 지역이고, 서부는 구자라트와 뭄바이가 위치한 마하라슈트라, 고아 등 아라비아 해 인근 지역이다. 남부는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풍디세리 등으로 인도의 중부내륙에서 남쪽으로 인도양, 동쪽으로는 벵골 만 남쪽 연안까지의 지역을 지칭하며, 북부는 델리 수도연방구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찬디가르, 히마찰 프라데시와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한다. 이들 지역 외 아루 나찰프라데시, 메갈라야 등 중국, 미얀마와 국경을 맞닿은 동북단 지역과 벵골 만 동쪽의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는 그 비중이 미미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

는다.

분석대상 지역별 표본기업의 수는 동서남북이 각각 2,409개, 7,384개, 5,151개, 5,523개로 각 지역의 산업발전 정도와 대체로 일치한다.⁶⁹⁾ 이렇듯 동부 지역의 표본수가 절대적으로 작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크게 작기 때문에, 동부와 다른 지역 간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더욱이 표본을 산업별로 나눌 경우 표본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특정 기업의 표본 포함 여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게 되어 지역 간 생산성 차이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⁷⁰⁾ 따라서 동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생산성을 평가 하되, 동부와와의 비교는 피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 간 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1차 산업

[표 4-13]은 1차 산업의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을 보여준다. 처음 4개 열은 1996~2000년을 기준으로 각 기간의 생산성을 계산한 수치이며, 나머지 3개 열은 동부에 대한 다른 지역의 생산성 수준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 간 생산성 비교는 동부를 제외한 서부와 남부, 북부 간 비교에 국한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4개 지역에서 모두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표 4-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둔화가 나타난다. 동부를 제외하면, 2010년까지 서부와 남부의 생산성 향상이 뚜렷한 반면, 이후 2015년까지의 생산성 하락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생한다. 북부 지역의 경우 생산성의 큰 변동은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간적 기업의 생산성 추이는 전

69) 지역별 경제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고토록 한다.

70) 지역별, 산업별 표본기업의 상세한 숫자는 <부록 1>을 참고한다.

표 4-13.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1차 산업

구분	1996-2000=1				동부=1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부	남부	북부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03(1.33)	1.80(0.97)	2.71(2.21)
2001~2005	1.61	1.32	1.51	0.90	0.85(1.01)	1.68(1.00)	2.06(1.61)
2006~2010	2.56	1.69	1.76	1.08	0.68(0.91)	1.24(0.89)	1.56(1.21)
2011~2015	2.65	1.20	1.28	1.02	0.47(1.00)	0.87(0.84)	1.42(1.25)
중앙값							
1996~2000	1.00	1.00	1.00	1.00	0.89	0.92	2.07
2001~2005	1.20	1.20	1.06	0.56	0.89	0.81	1.43
2006~2010	1.44	1.17	1.24	0.53	0.73	0.79	1.14
2011~2015	0.98	1.16	1.05	0.49	1.06	0.98	1.52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지역에서 기업 생산성 분포의 좌측 꼬리 현상을 말해주는데, 특히 예측한 바대로 동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북부 지역에서는 생산성 개선이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가 가장 낮다. 또한 서부와 남부, 북부와와 생산성 격차도 대체로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동부를 제외한 세 지역 중 남부에서 가장 큰데, 최근 5년간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 악화로 인해 그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는 동부와 남부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까지 전 지역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나 2011~15년 동안에는 전 기간 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특히 서부

표 4-14.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2차 산업

구분	1996-2000=1				동부=1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부	남부	북부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2.17(1.30)	2.47(1.09)	1.64(1.23)
2001~2005	1.57	1.20	1.50	1.37	1.66(1.29)	2.37(1.05)	1.44(1.28)
2006~2010	2.47	1.42	1.70	1.52	1.24(1.06)	1.70(0.90)	1.01(1.05)
2011~2015	1.91	0.88	1.64	1.34	1.01(1.07)	2.13(0.95)	1.16(1.03)
중앙값							
1996~2000	1.00	1.00	1.00	1.00	1.55	1.18	1.46
2001~2005	1.09	1.00	0.94	1.03	1.42	1.01	1.38
2006~2010	1.67	1.11	1.13	1.20	1.03	0.80	1.05
2011~2015	1.38	0.92	1.02	1.00	1.03	0.87	1.06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지역에서는 기준 시점인 1996~2000년 수준 이하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최근 5년간 생산성의 하락은 [표 4-5]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서부의 2차 산업이 인도의 경기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로 판단할 때, 전 지역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성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편차는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산업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로 동부와 비교할 때 약 2배, 서부와 북부에 대해서는 1.4~1.6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남부와 다른 지역 간 생산성 격차는 2011~15년 동안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서부와 북부를 비교하면, 대체로 서부가 높은 생산성을 보이다가 최근 생산성 악화의 영향으로 그 순위가 역전된다. 한편 앞선 분석과 일관되게 남부 지역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규모에 따른 생산성 편차 역시 이 지역에서 크게 나타난다.

3)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동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준연도인 1996~2000년 대비 총요소생산성의 감소가 나타난다. [표 4-15]에 따르면,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보이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은 남부에서의 생산성 급락이 두드러진다. 3차 산업 총요소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를 제외할 때 서부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5개년만 놓고 보면, 남부의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부 지역은 인도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카르나타카의 벵갈루루, 하이데라 버드 등이 위치한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이다. [표 4-7]과 [표 4-8]은 3차 산업의 평균 생산성 저하가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업(I)의 생산성 하락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할 때, 남부 지역이 정보통신서비스 생산성 저하의 주요 진원지이며, [표 4-9]에 따라 특히 이 지역에 위치한 민간 IT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컸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인도의 금융

표 4-15. 지역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3차 산업

구분	1996-2000=1				동부=1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부	남부	북부
평균값							
1996~2000	1.00	1.00	1.00	1.00	0.66(0.90)	0.64(0.74)	0.64(0.84)
2001~2005	1.24	0.86	0.84	0.83	0.46(0.81)	0.43(0.65)	0.43(0.83)
2006~2010	1.02	0.95	0.93	0.86	0.61(0.80)	0.58(0.66)	0.54(0.81)
2011~2015	1.07	0.93	0.80	0.90	0.58(0.84)	0.48(0.71)	0.54(0.84)
증양값							
1996~2000	1.00	1.00	1.00	1.00	0.98	0.85	0.91
2001~2005	0.98	0.85	0.78	0.87	0.86	0.68	0.81
2006~2010	1.06	0.89	0.79	0.91	0.83	0.63	0.78
2011~2015	0.94	0.83	0.78	0.88	0.87	0.70	0.86

주: 평균값은 총소득을 기준치로 한 기중평균이며, ()는 단순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중심지인 뭍바이가 위치한 서부의 경우 3차 산업의 평균 생산성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4. 소결

본장에서는 Prowess CMIE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다. 분석기법으로 생산함수 추정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vinsohn and Petrin(2003)이 제시한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생산량을 대리하는 기업별 총소득을 사용하므로 노동, 자본, 중간재의 3가지 투입요소로 구성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정의한다. Levinsohn and Petrin(2003)의 제안에 따라 중간재 변수로 개별 기업의 전력 및 용수사용량을 사용한다. 표본의 전체 관측치의 숫자는 14만 7,563개이며, 표본내 기업수는 2만 733개이다. 생산함수의 추정계수는 산업별로 다른 값을 갖도록 표본을 분리하여 추정하고, 각 잔차항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다.

개별기업을 특성에 따라 구분한 후 특성별 평균 생산성으로 환산하기 위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을 가중평균한다. 이를 통해 발견한 기업특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성은 2010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다. 이에 반해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감소를 주도한다. 3차 산업에서 금융서비스의 생산성은 개선된 반면 비금융서비스, 그중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대체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생산성 차이는 3차 산업에서 가장 크고, 2000년대 3차 산업의 생산성 둔화

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관측되는데, 특히 3차 산업에서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기업은 2차 산업에서 다른 외국기업보다 압도적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3차 산업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지역별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성 둔화가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에 있다. 2차 산업에서는 남부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최근 5년간 서부의 생산성은 급락세를 보인다. 2차 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이며,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다른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고 있다. 3차 산업에서는 남부와 북부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남부의 생산성 급락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서부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은 남부의 생산성이 가장 떨어진다. 남부는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 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저하가 이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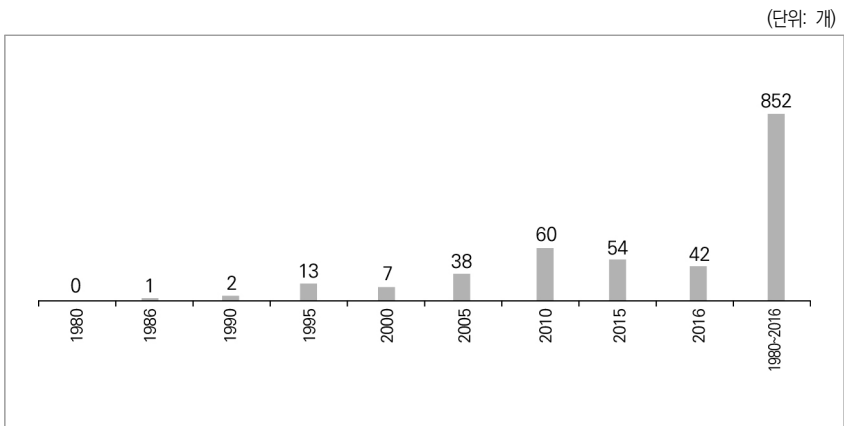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에 집계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신규 법인 수 기준)은 852개로, 동 기간 우리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42억 4,600만 달러였다.⁷¹⁾

신규 법인 수 기준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수는 1995년에 13개, 2000년에 7개였으나, 2005년 38개, 2010년 60개, 2015년 54개, 2016년 42개를 기록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금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도 진출 기업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투자규모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별 구분을 살펴보면 총 852개 기업 중 제조업이 465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05개, 건

그림 5-1.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신규 법인 수



- 주: 1) 1985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1986년 자료로 대체.
- 2) 1980~2016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 법인 수 총합.
- 3) 2016년은 9월 말까지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6. 11. 23).

7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6. 11. 23).

표 5-1.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총 투자 금액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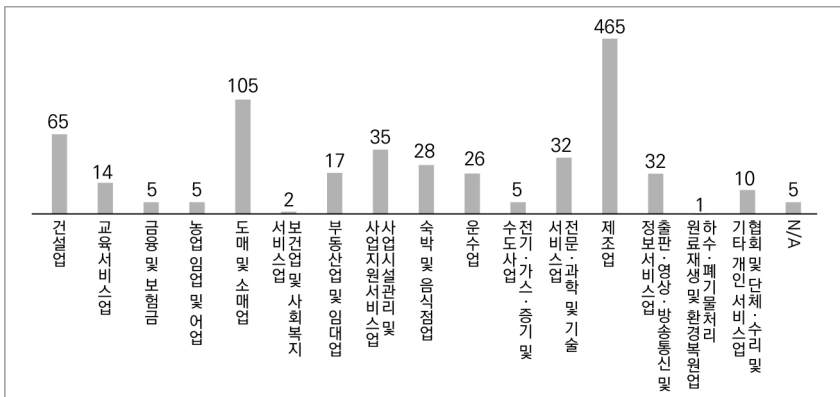
연 도	투자금액
1980	0
1986	292,750
1990	962,550
1995	13,833,270
2000	15,377,802
2005	92,163,511
2010	199,134,197
2015	341,089,859
2016	229,913,216
1980~2016	4,245,709,414

주: 1) 1985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1986년 자료로 대체.
 2) 1980~2016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총 투자 금액.
 3) 2016년은 9월 말(3분기 비금융기관 역외금융 투자실적 제외)까지의 투자실적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6. 11. 23).

설업이 65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5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각각 32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주요 분야가 제조업이며, 도매 및 소

그림 5-2.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업종별(대분류 기준) 구분(1980~2016년)

(단위: 개)



주: 2016년은 9월 말까지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6. 11. 23).

표 5-2.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투자형태(신규법인 기준)

(단위: 개)

연 도	-	공동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
1980~1989	3	0	1	3
1990~1999	6	4	12	62
2000~2009	49	70	198	89
2010	7	12	29	12
2011	8	20	23	15
2012	3	14	26	10
2013	3	2	22	13
2014	5	5	14	16
2015	2	14	19	19
2016	3	19	7	13
1980~2016	89	160	351	252

주: 1) 2016년은 9월 말까지 반영.

2) '-'는 해당 사항 없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6. 11. 23).

매업과 건설업 등에도 상당수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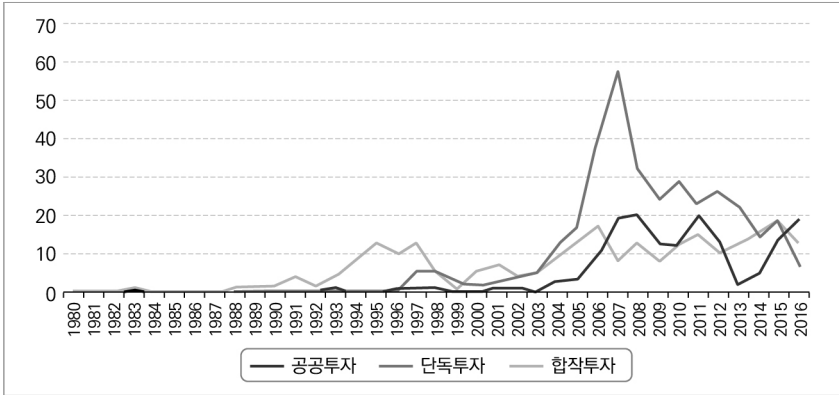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에 진출한 총 852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단독투자(351개 기업) > 합작투자(252개 기업) > 공동투자(160개 기업)' 순으로 단독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형태별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기업들은 2000년 중반 이전까지 단독투자 형태의 인도시장 진출을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나, 2007~08년 시점부터는 단독투자를 통한 인도 진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공동투자와 합작투자는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10년 중반 이후 공동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단독투자의 형태보다는 공동투자와 합작투자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5-3]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에 대한 형태와 비율 구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비율 구간은 '10% 미만', '10% 이상~50% 미만', '50%', '50% 초과~100% 미만', '100%'로 구분되어 있다. 공동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의 투

그림 5-3.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투자형태 추이(신규법인 기준, 1980~2016년)

(단위: 개)



주: 1) 단위 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투자 형태(표)' 참고.

2) 2016년은 9월 말까지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6. 11. 23).

자형태를 각각의 투자 비율 구간으로 세분화해 보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들은 '단독투자 100%'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1980~2016년 기간 우리 기 업들의 대인도 '단독투자 100%' 금액은 약 20억 4,800만 달러로 약 48.24% 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독투자 100%'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합작투자 50% 초과~100% 미만'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기간 '합작투자 50% 초과~100% 미만' 투자 금액은 약 9억 7,000만 달러로 약 22.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작투자 50% 초과~100% 미만'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는 약 4억 9,800만 달러의 규모로 '공동투자 100%'의 투자가 많은데, 총 투자 의 11.74%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투자 100%'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 었으나, 본격적으로 투자가 꾸준히 진행된 시기는 2000년대 이후이다. 마지막 으로 '합작투자 10% 이상~50% 미만'의 투자가 약 4억 6,300만 달러의 규모 로 총 투자의 약 10.90%를 차지하고 있다. '합작투자 10% 이상~50% 미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5-3.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형태별 투자 금액(1980~2016년)

(단위: USD, %)

연도	공동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 이상	100%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초과~100%미만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 초과~100%미만
1980	-	-	-	-	-	-	-	-	-	-
1981	673	-	-	-	-	-	-	-	-	-
~										
1990	-	-	-	-	-	-	800,000	-	147,550	-
1991	-	-	-	-	-	-	1800,000	-	775,138	29,285
1992	784,076	-	-	-	-	-	-	-	3,099,800	-
1993	-	-	-	180,000	-	-	-	200,000	981,000	-
1994	1,620,230	-	-	20,000	-	-	-	1,295,000	2,569,618	-
1995	-	-	-	-	-	-	-	400,000	8,333,270	2,030,000
1996	38,216,000	-	-	20,000	-	-	-	1,000,000	5,755,964	1,446,000
1997	-	-	-	5,680,000	-	-	39,006,311	50,000	7,210,297	13,122,938
1998	272,840	-	-	1,000,000	-	-	15,754,794	50,000	19,191,507	285,770
1999	-	-	-	320,000	-	-	551,130	-	6,091,272	-
2000	-	-	-	-	-	-	5,396,000	-	9,223,968	230,000
2001	232,000	-	-	58,000	-	-	826,300	971,000	21,157,743	327,827
2002	93,000	-	-	1,600,000	-	-	7,344,413	-	3,324,700	420,000
2003	265,459	-	-	900,000	-	-	1,550,895	-	1,649,491	509,000
2004	470,663	-	-	3,678,244	-	-	6,532,334	-	1,554,040	1,204,000
										27,788,006

표 5-3. 계속

(단위: USD, %)

연도	공통투자			단독투자			합작투자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 이상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 초과~100%미만	10% 미만	10%이상~50%미만	50% 이상		
2005	158,358	-	204723	7,612,955	-	22,400	73,652,082	-	6,600,679	824,000	3,088,314
2006	1,230,265	-	2839200	24,994,179	-	-	52,906,981	566,900	2,011,729	2,961,429	14,316,366
2007	7,259,521	130,000	2338192	44,563,661	8,000	35,000	212,027,165	-	212,688,972	1,993,015	32,561,060
2008	1,117,328	-	-	81,580,258	-	-	71,935,302	-	10,214,781	6,373,560	19,982,318
2009	63,940	-	-	56,822,950	-	-	159,305,728	-	561,220	9,845,836	15,744,272
2010	618,444	-	-	43,893,393	-	-	107,703,016	-	4,305,089	10,550,000	32,064,255
2011	3,860,954	-	-	39,178,195	-	-	347,705,096	4,550	1,056,290	21,791,240	42,018,103
2012	7,908,521	-	-	38,828,980	-	-	199,115,575	-	41,652,152	7,900,413	23,882,754
2013	4,069,703	-	-	51,180,140	-	-	198,240,163	8,500,500	15,754,895	9,606,316	59,286,899
2014	11,922,968	-	-	48,109,257	-	-	214,072,380	-	8,137,592	11,222,823	43,151,017
2015	26,825,828	-	-	31,520,820	-	-	161,835,919	2,000,000	63,490,389	9,074,005	46,342,898
2016	14,360,865	-	-	16,595,368	-	-	169,263,563	-	5,093,200	12,282,327	12,317,893
1980~2016	121,812,917	130000	5382115	498,336,400	8,000	57,400	2,048,325,147	15,037,950	462822557	124,029,784	969,766,624
2016	(2.87)	(0.00)	(0.13)	(11.74)	(0.00)	(0.00)	(48.24)	(0.35)	(10.90)	(2.92)	(22.84)

주: 1) '-'는 해당 사항 없음.

2) 투자비율구간은 '10% 미만', '10% 이상~50% 미만', '50% 초과~100% 미만', '100%'로 구분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 구간이 없는 경우는 투자형태 내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

3) 2016년은 9월 말까지 반영.

4) 1980~2016은 198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총합을 의미하며, 괄호안의 값은 총 투자 금액(4,245,709,414 달러)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등록계(검색일: 2016. 11. 23).

표 5-4. 우리 기업의 인도 지역별·업종별 진출 현황(2015년 11월 기준)

권역	도시/주	주요업종/기업수
북부	델리 인근	전기·전자(31), 건설·중공업(30) 자동차·기계(13), 무역·물류(27), 금융(9), 컨설팅(12), 화학(8), 기타(36)
		총 166개사
서부	뭄바이, 부네(마하라슈트라 주) 인근 / 구자라트 주	제조업(41), 건설·중공업(7), 운송·물류(8), 도소매·유통(13), 서비스(12)
		총 81개사
남부	첸나이 인근(타밀나두 주)	자동차·부품(91), 건설(13), 제과(1), 전기·전자(9), 무역·물류(13), 금융 및 기타(38)
	방갈로르(카르나타카 주) / 안드라프라데시 주	연구개발(8), 전자·기계(6), 자동차·부품(3), 건설장비(1), 유통·물류(4), 제약(1), 기타(4)
	총 191개사	
동부	부바네스와르(오리사 주)	제철(1)
기타		화학, 발전 등 3개사
		총계: 약 443개사

자료: 인도 델리 무역관 내부자료.

[표 5-4]는 최근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을 지역별-업종별로 보여준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 기업은 남부권역에 191개, 북부권역에 166개, 서부권역에 81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동부 및 기타권역에는 거의 진출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CMIE Prowes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도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분류만 있을 뿐 각 기업의 국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KOTRA가 운영하는 ‘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OIS)’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검색’을 통해 인도 진출 우

표 5-5. 한국기업 기초통계(1996~2015년, 20년 평균)

변수	관측치수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기업규모				
총수입	362	10,387.4	3.4	1,139.9
총자산	404	6,804.2	2.9	1,218.6
지출				
총비용	367	10,044.8	3.4	1,086.9
총보수	344	271.6	2.6	60.1
수익, 수익성				
세전순익	372	423.5	4.4	21.3
ROA	357	0.03	10.1	0.02
총고정자산	379	4,198.6	3.4	752.0
부채, 위험				
총부채	409	6,721.0	2.9	1,208.8
유동비율	378	8.2	5.4	1.3

주: 1) 개, 백만 루피.

2) ROA와 유동비율은 비율이므로 총자산으로 가중평균을 구함.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리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CMIE Prowess 데이터와 매칭을 통해 본 연구의 데이터 내 한국기업을 구분하였다.⁷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1996년부터 2015년의 20년 기간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5-5]가 제공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 또한 인도 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앙값에 비해 평균이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적은 수의 기업들에 대한 성과가 전체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유동비율 또한 평균은 2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중앙값은 2 미만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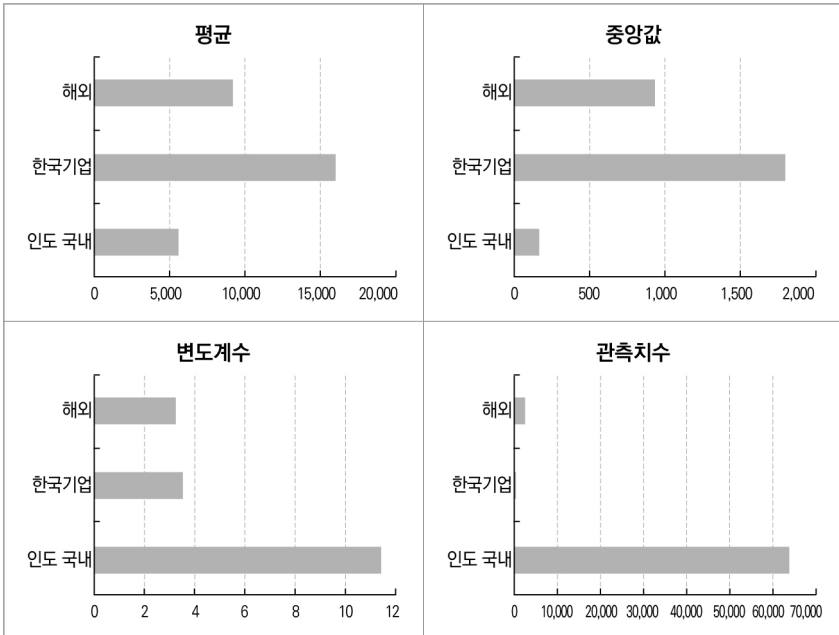
72) OIS(<http://www.ois.go.kr/>, 검색일: 2016. 11. 1).

가. 기업규모

1) 총수입

[표 5-6]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총수입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주며, [그림 5-4]는 2011~15년 기간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총수입에 대한 통계를 비교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총수입에서 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평균과 중앙값 모두 20년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변동계수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에 비해 변동계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기업은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과는 달리 2011~15년 기간 평균과 중앙값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2011~15년 총수입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6. 한국기업 총수입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5,383.5	1.7	978.1
	2001~2005	9,949.3	2.5	1,193.2
	2006~2010	11,713.7	3.3	1,341.8
	2011~2015	15,955.5	3.5	1,801.8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1~15년 기간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주요 통계를 비교해 보면, 평균과 중앙값 모두 한국기업이 나머지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한국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인 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에서도 한국기업은 해외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인도 국내기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총자산

[표 5-7]은 한국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제공하며, [그림 5-5]는 2011~15년 기간 총자산의 통계를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총자산 평균은 20년 기간 증가세를 보였고, 중앙값은 2011~15년 기간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변동계수는 20년 기간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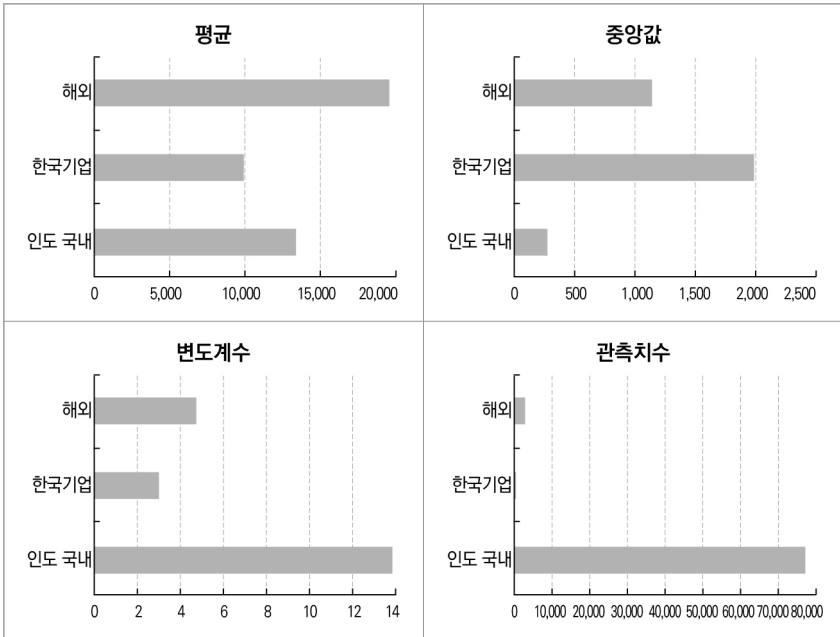
2011~15년 기간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통계를 비교해

표 5-7. 한국기업 총자산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9,298.2	2.3	1,911.6
	2001~2005	5,332.7	2.5	776.0
	2006~2010	6,184.2	3.2	1,601.6
	2011~2015	9,876.2	3.0	1,986.3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5. 2011~15년 총자산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볼 때 평균은 한국기업이 해외기업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도 국내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중앙값은 한국기업이 해외기업과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변동계수는 한국기업이 인도 내 다른 기업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나. 비용

1) 총비용

[표 5-8]은 한국기업의 총비용 통계를 기간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6]은 2011~15년 기간 총자산의 통계를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인도 내 한국기업의 총비용 평균과 중앙값은 20년

표 5-8. 한국기업 총비용 기간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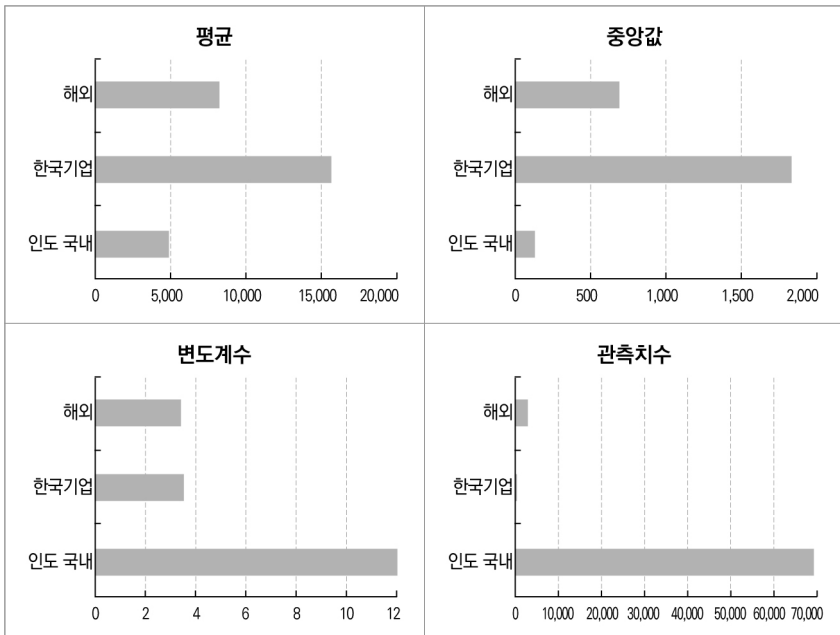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5,469.2	1.7	934.1
	2001~2005	9,471.8	2.5	1,067.2
	2006~2010	11,345.1	3.3	1,284.9
	2011~2015	15,654.3	3.5	1,837.5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변동계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1~15년 기간 총비용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한국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았는데, 한국기업의 경우 기업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는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5-6. 2011~15년 총비용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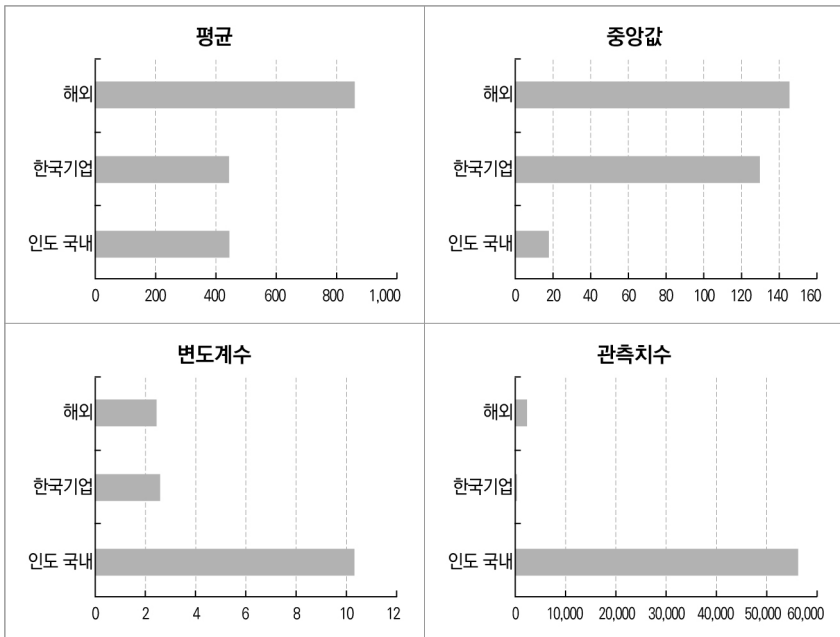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총보수

[표 5-9]는 인도 내 한국기업의 총보수 통계를 기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7]은 2011~15년 기간 총보수의 통계를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한다. 인도 내 한국기업의 총보수의 평균과 중앙값은 20년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변동계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율이 크지는 않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치를 나타냈다.

2011~15년 기간 총보수의 평균은 총비용과는 달리 해외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앙값 또한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높았으며, 한국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의 중앙값은 인도 국내기업의 수준을 압도했다. 최근의 변동계수는 해외기업과 한국기업이 거의 같았으며, 인도 국내기업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5-7. 2011~15년 총보수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9. 한국기업 총보수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161.4	1.6	46.2
	2001~2005	223.9	2.0	55.6
	2006~2010	303.8	2.5	83.0
	2011~2015	444.9	2.5	129.6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이윤

1) 세전순익

[표 5-10]은 인도 내 한국기업의 세전순익 통계를 기간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8]은 2011~15년 기간 세전순익을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보여준다. 세전순익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균은 2001~05년 기간 감소한 이후 계속 상승하였으며, 중앙값은 20년 기간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인도 진출 초기에 비해서 최근 대기업들의 순익이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변동계수는 20년 기간 동안 등락을 반복했으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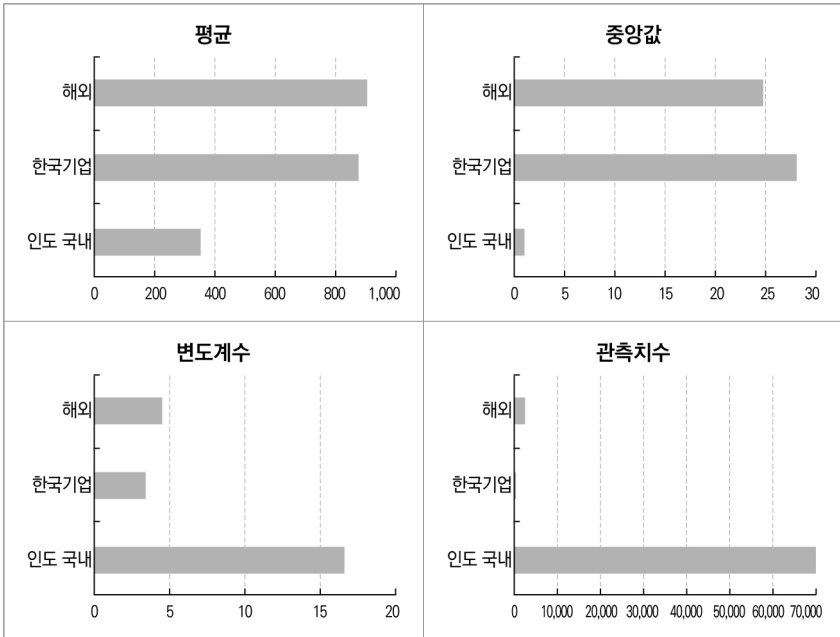
2011~15년 기간 세전순익의 평균과 중앙값은 해외기업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고, 한국기업과 해외기업 모두 인도 국내기업보다 큰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실적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한 것은 한국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표 5-10. 한국기업 세전순익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616.1	3.2	113.5
	2001~2005	486.8	4.8	70.3
	2006~2010	541.9	3.4	50.8
	2011~2015	876.2	3.5	28.0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8. 2011~15년 세전순익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것으로 보인다. 변동계수는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컸으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두 기업군 모두 인도 국내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 ROA

[표 5-11]은 인도 내 한국기업의 ROA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하며, [그림 5-9]는 2011~15년 기간 ROA의 통계를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ROA의 한국기업 평균은 20년 기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앙값은 2011~15년 큰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하였다. 한국기업의 ROA에 대한 변동계수는 지금까지의 변수들과는 2001~15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1보다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1~15년 기간 ROA의 평균과 중앙값은 한국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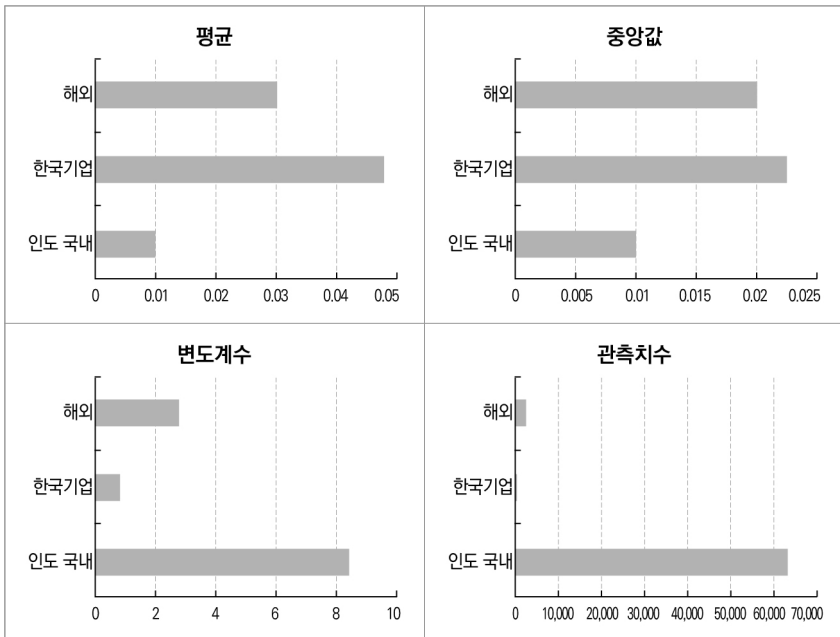
표 5-11. 한국기업 ROA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 0.01	0.37	- 0.00
	2001~2005	0.02	2.91	0.04
	2006~2010	0.04	0.54	0.02
	2011~2015	0.05	0.81	0.02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였으며, 변동계수도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ROA는 총자산 대비 세 전순익인데, 2011~15년 기간 한국기업의 총자산이 여타 기업군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자산에 대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그림 5-9. 2011~15년 ROA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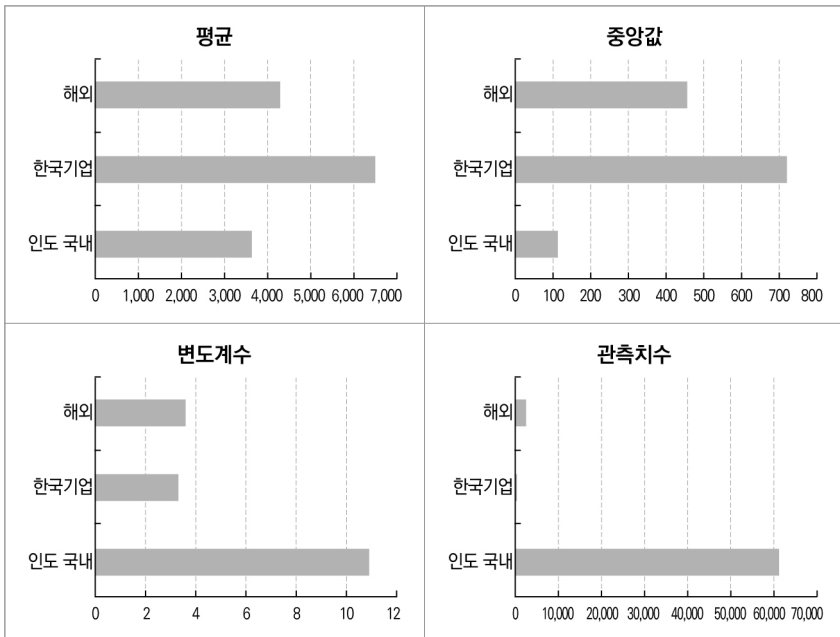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총고정자산

[표 5-12]와 [그림 5-10]은 각각 인도 내 한국기업의 총고정자산의 기간별 통계와 한국기업, 인도국내기업, 해외기업에 대한 총고정자산의 2011~15년 기간 통계를 나타낸다. 한국기업의 총고정자산 평균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1~15년 기간 큰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값은 20년 기간 동안 등락을 반복했는데, 최근의 수준이 20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1~15년 기간 한국기업의 총고정자산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은 해외기업과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한국기업의 20년간 총고정자산의 통계와 함께 살펴보면 인도 전체 기업의 총고정자산은 20년 기간 동안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는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했으며, 인도 국내기업이 매우 높았다.

그림 5-10. 2011~15년 총고정자산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12. 한국기업 총고정자산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한국기업	1996~2000	6,731.6	2.4	1,061.5
	2001~2005	4,299.3	2.8	656.3
	2006~2010	3,750.7	3.5	846.9
	2011~2015	6,474.9	3.3	718.3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위험

1) 총부채

[표 5-13]은 한국기업의 총부채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보여주며, [그림 5-11]은 2011~15년 기간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총부채에 대한 통계를 비교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 총부채의 평균과 증양값은 1996~2000년 대비 2011~05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1~15년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총부채 평균은 20년 전 수준에서 약간 상승한 수준이었다. 변동계수는 20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변화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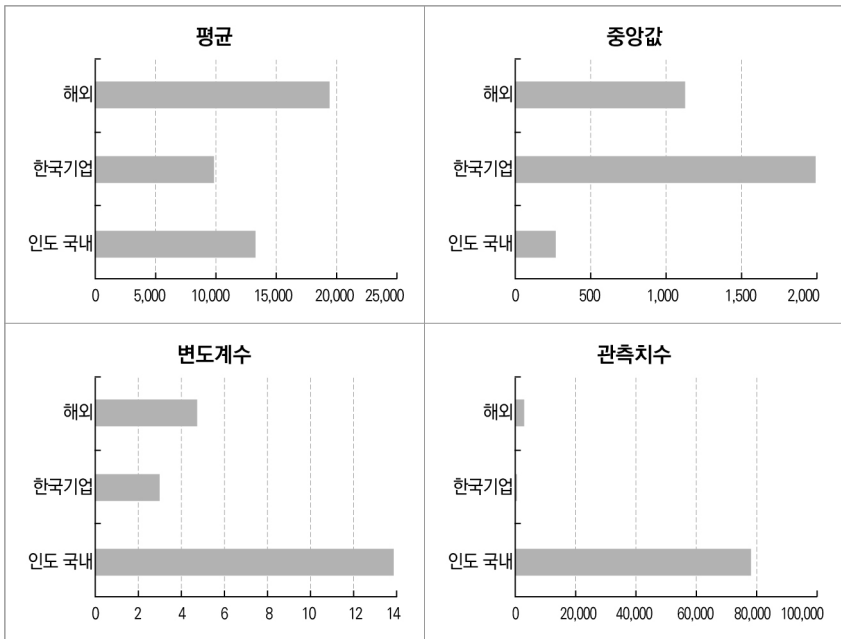
2011~15년 기간 인도 진출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총부채에 대한 주요 통계를 비교해 보면, 평균은 한국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증양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상대적이긴 하나 한국기

표 5-13. 한국기업 총부채 기간별 통계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증양값
한국기업	1996~2000	9,298.2	2.3	1,911.6
	2001~2005	5,332.7	2.5	776.0
	2006~2010	5,978.3	3.3	1,528.5
	2011~2015	9,876.2	3.0	1,986.3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1. 2011~15년 총부채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업 간의 총부채에 대한 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1~15년 기간 변동계수는 한국기업이 가장 낮았고, 해외기업은 한국기업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인도 국내기업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유동비율

[표 5-14]는 인도 내 한국기업의 유동비율에 대한 기간별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12]는 2011~15년 기간 인도 내 기업을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구분하여 유동비율의 통계를 제공한다. 20년 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기업의 유동비율 평균과 중앙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변동계

표 5-14. 한국기업 유동비율 기간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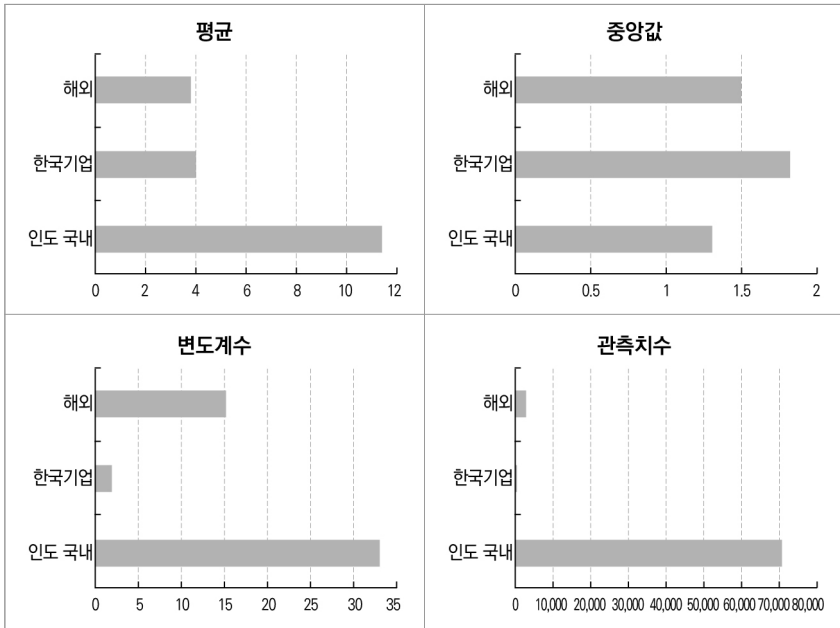
구분	연도	평균	변동계수	중앙값
한국기업	1996~2000	2.1	1.8	1.4
	2001~2005	1.8	0.8	1.3
	2006~2010	4.8	3.4	1.2
	2011~2015	4.0	1.9	1.8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는 등락을 보이면서 최근 수준이 20년 전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유동비율의 평균만을 보면 한국기업은 안정적인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기업 간 유동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15년 기간 유동비율의 평균은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인도 국내기업이 거의 3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중앙값은 한

그림 5-12. 2011~15년 유동비율의 한국기업,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통계 비교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해외기업은 한국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였으며, 인도 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변동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 국내기업의 유동비율은 변량이 고르지 못하며 소수의 대기업들의 유동비율 값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기업들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50% 이상의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3. 소결

본장에서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신규 법인 수는 852개이었으며, 누적 투자액은 42억 달러 정도이다.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순이었다. 진출 형태는 단독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합작투자와 공동투자의 순서였다. 최근 현황을 보아도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사이고, 역시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은 남부권역의 첸나이와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191개, 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에 166개,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 주의 서부권역에 81개사가 진출해 있었으며, 동부와 기타권역에는 한국기업이 거의 진출하지 않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특성에서는 규모 관련 변수들은 1996~2015년 기간 평균과 중앙값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우리 기업의 실적 또한 2011~15년 기간 대폭 증가했다. 2011~15년 기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았는데, 총보수는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세전순익은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1. 요약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는 괄목할 만하다. 최근 인도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성장률은 7.3%를 기록하며,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신흥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민족, 종교, 문화, 지역 등의 이질성과 복잡성 요인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에서 보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 인도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인도 경제협력을 위한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의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고,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며,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 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

되었다.

인도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0% 이상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이 30% 정도인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지난 40년간 정체되어 15% 정도로, 인도 경제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성장이 더디었던 이유는 저임금으로 인한 수요부족,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복잡한 회사법 및 노동법, 인프라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데,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와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에 따라 제조업이 인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이 인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독립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주도의 공업화를 추진하였던 인도 정부는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공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15년 GDP 대비 9.4%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금융 공기업의 비중이 2.8%로 금융 민간기업의 2.9%와 거의 같았다.

인도의 지역별 산업 현황은 정치, 경제적 환경과 각 주정부의 역량에 따라 상이했다. 특히 1991년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의 주별 이질성이 심화됐는데, 노동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 또한 주정부 간 정책의 차이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전하였다.

인도 산업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최근까지 제조업이 부진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영국 식민지 시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육성정책이 도입되면서 인도의 제조업은 기반을 잃게 되었다.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으로 인해 자원분배가 왜곡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도는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

나지 못했다.

1990년대 국제수지 유동성의 문제로 개혁개방이 단행되면서 기존 정부주도의 산업보호정책이 폐기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인도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친시장·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정책으로 향후 인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총수입, 총자산, 총비용, 총보수, 세전순익, ROA, 총고정자산, 총부채, 유동비율의 1996~2015년 20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적은 수의 대기업들의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3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부문별 산업특성 분석에서 두드러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은 규모나 실적에서 은행제의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기업군에서 은행만이 유일하게 유동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2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지급능력을 보였다. ② 인도 공기업은 규모나 실적이 민간이나 민

관합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③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은 남부와 서부권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두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성장세가 가장 높음을 나타낸다. 20년 기간 동안 모든 지역의 평균은 증가한 반면 중앙값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여, 지역과 관계없이 기업 실적의 격차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든 변수의 경우 해외기업의 평균과 중앙값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는데, 해외기업의 실적이 국내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보통신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산업 내 기업 간 격차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총요소생산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성은 2010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데 반해,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11~15년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주도했다. 금융 부문의 생산성은 개선된 반면 비금융 부문의 생산성이 감소했고,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생산성 차이는 3차 산업에서 가장 크고, 2000년대 3차 산업의 생산성 둔화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악화가 주도했다. 특히 3차 산업에서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기업은 2차 산업에서 다른 외국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으나, 3차 산업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셋째, 지역별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2차 산업에서는 남부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나, 2011~15년 기간 서부의 생산성

은 급락세를 보였다. 2차 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이며,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다른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고 있다. 3차 산업에서는 남부와 북부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5년 기간 남부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했다.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서부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은 남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남부는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 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저하가 이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인도 내 한국기업의 신규 법인 수는 852개이었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42억 달러였다.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순이었다. 진출 형태는 단독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합작투자와 공동투자의 순서였다.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권역에의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특성에서는 규모 관련 변수들은 20년간 평균과 중앙값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우리 기업의 실적 또한 2011~15년 기간 대폭 증가했다. 2011~15년 기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았는데, 총보수는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세전순익은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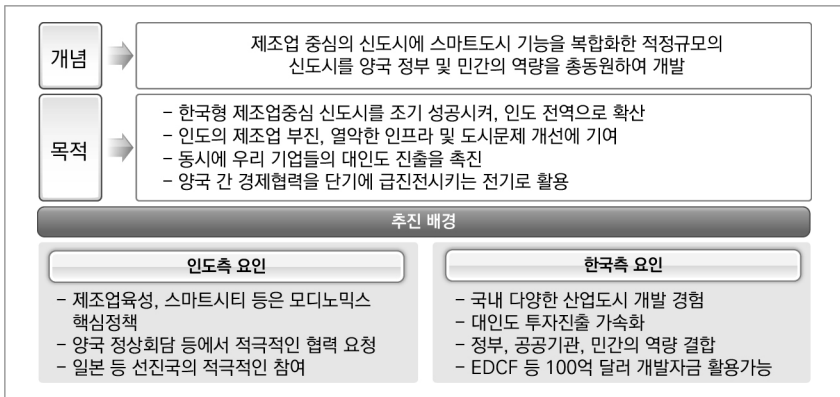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살펴본 산업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및 다양한 분야의 기업특성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우리 정부는 모디노믹스로 상징되는 인도 정부의 각종 친시장·고성장 경제정책과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부정책인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성과에 따른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인도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인 한국의 대인도 100억 달러 지원을 모디노믹스의 핵심 사업 중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과 산업회랑 구축에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

그림 6-1.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자료: 조총제, 송영철, 이정미(2015), [그림 4-14], p. 202 직접 인용.

이자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도 최근 인도 정부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변화를 고려한 진전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조총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이 있다.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인도 산업은 개혁개방이 단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나 오랜 기간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모디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와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 투자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아직까지 모디 정부가 2009년 인도 투자·공적자산관리국(Dipam: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이 수립한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을 개정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⁷³⁾ 공기업 매각의 적정 매수자 선정과 고용문제 등의 정치적 요인 때문에 쉽게 전면적인 매각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경제회랑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공기업의 매각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

글상자 6-1. 인도 정부의 공기업 매각 방식

투자·공적자산관리국(Dipam)은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로 원래 명칭이 투자회수국(Department of Disinvestment)였으나, 2016년 6월 20일 개명되었다. Dipam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공적 사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Dipam은 인도 정부로부터 중앙정부 소유의 공기업에 대한 금융구조 조정과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정부 조언이 주 임무이기도 하다. 아래의 표는 Dipam에서 공표한 인도 정부의 공기업 매각에 대한 비전과 방식이다.

공기업 지분매각 방식

구분	내용
소수지분 매각	소수지분을 민간에게 매각(최대 49%)
공기업 → 공기업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게 매각
민영화	경영권 이전(공기업 자격 상실) / 블록(Block)으로 매각 / 최대 74%
기타	기업내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잔여지분을 다시 매도

자료: Dipam(<http://dipam.gov.in/>), 검색일: 2016. 12. 1).

73) 투자·공적자산관리국은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로 원래 명칭이 투자회수국(Department of Disinvestment)이었으나, 2016년 6월 20일 개명되었다.

74) 이대우(2015), p. 55.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본 연구의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거시와 산업 데이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서부와 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두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전했으며, 경영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상이한 환경과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바꾸어 말하면 서부와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의 요충 지역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함에 따라 경쟁이 심하고 주 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노동법과 회사법의 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진출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북부권역의 라자스탄 주와 마디아 프라데시 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하에서도 주 정부 차원에서 보다 노동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려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중요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차 산업에서는 남부 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년간 성장률 또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인도 최대 규모의 주인 마하라슈트라 주와 모디 총리가 주 총리 시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구라자트 주가 속한 서부권역의 생산성은 최근 5년간 급락세를 보였다. 3차 산업에서는 서부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으며 남부와 북부는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남부권역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의 저하가 현저했다. 따라서 산업별로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진출지역 선정 시 이러한 지역별·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인도 기업의 실적이 2010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 기업 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소수의 기업이 과반 이상의 기업보다 규모나 실적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적으로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지급능력은 안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인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은 최근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5년의 생산성 저하가 눈에 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보다 면밀하게 세부산업의 특성과 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규모나 실적이 평균적으로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인도에 안착한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인도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인도를 거대 시장 자체만으로 보고 수출 위주로 진출할지, 또는 현지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선점할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승하고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인도를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지의 판단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정책, 법, 제도, 시장지배력 등을 포함한 시장

의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산업별 기업특성 분석을 통한 산업특성 및 구조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세부 산업별 인도의 기업특성과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고는 세부 산업별 구조, 즉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 국가산업분류(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 가장 광범위한 산업구분을 보더라도 인도 산업은 총 21개로 나뉘며 제조업이 이 중 하나이다. 또한 제조업은 24개의 세부 산업으로 구분된다.⁷⁵⁾ 따라서 산업집중도를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한 세부 산업별 연구는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또 다른 한계는 사용된 데이터가 공식부문(Formal Sector)에 속한 기업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였으므로, 인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산업에 대한 기여와 이에 따른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과 분석결과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은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5) 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2008).

참고문헌

[국문자료]

- Rodrik, Dani. 2014. 「서비스업, 제조업을 대체할 성장동력 될 수 있나?」. 포스코 경영연구소.
- 김신주. 2016.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 상원 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규, 감형규. 2014. 『New 재무관리』. 유원북스.
- 신세린. 2015a. 「인도 모디 정부 집권 1년차 FDI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5b. 「Digital India, Skill India 계획의 주요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6. 「인도 ‘스타트업 인디아’ 주요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5. 『인도 29개 주별 현황』.
- 이대우. 2015. 「인도 공기업 지분 매각 가속화 - 재정적자 해소, 인프라 도움. 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친디아플러스.
- 이순철, 김완중. 2015.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순철, 최윤정, 정재완, Prabir De. 2007.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용, 송영철, 조충제, 최윤정. 2013.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13-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미. 2014. 「최근 모디 신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지호, 김정렬, 조영희. 2010.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송영철. 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전략

- 지역심층연구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2015. 『인도 모디(Moid)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15-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손승호. 2011.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순철. 2010.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연구보고서 1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15. 「인도 농업 현황 및 전망」.

[영문자료]

- Alfaro, Laura and Anusha Chari. 2009. *India transformed? insights from the firm level 1988-2005*. No. w154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hattacharya, B. B. and S. Sakthivel. 2004. "Regional Growth and Disparity in India: Comparison Pre- and Post-Reform Decad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9, pp. 1071-1077.
- Clingingsmith, David and Jeffrey G. Williamson. 2005. "India's Deindustrializa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Central Statistical Organisation, Government of India. 2008. *National Industrial Classification(All Economic Activities)*.
- Chakravorty, Sanjoy and Somik V. Lall. 2007. *Made in India: the Economic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i, Anusha and Nandini Gupta. 2008. "Incumbents and protectionism: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entry liberaliz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8.3(2008): 633-656.
- Chatterjee, Anup and K. Narindar Jetli. 2009. *Industr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since 1947*. New Century Publications.
- CMIE. 2016. "ProwessIQ Database Directory." (February 16)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DIPP). 2015. *Consolidated FDI Policy*. Effective from May 12, 2015.
- Felipe, Jesus, Utsav Kumar, and Arnelyn Abdon. 2013. "Exports, Capabilities,

- and Industrial Policy in Ind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1.3(2013): 939-956.
- Government of India. 2014. “The Constitutions(One Hundred and Twenty_Second Amendment) Bill.”
- Kalyani, Muna. 2016. “Indian Informal Sector: A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rial Studies and Research*, 4(1): 78-85.
- Levinsohn, J. and A. Petrin. 2003.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s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0(2): 317-341.
- Mazumdar, Surajit. 2012.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Output in India since Independence: A Study Report.” Institute for Studies in Industrial Development, New Delhi.
- Mishra, Ram. 2014.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INDIA’S ECONOMIC DEVELOPMENT. OECD.” Workshop on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garaj, R. 2011. *Industrial Performance, 1991-2008*. India Development Report.
- Olley, S. and A. Pakes. 1996. “The Dynamics of Productiv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dustry.” *Econometrica* 64: 1263-1297.
- Petrin, A., B. Poi, and J. Levinsohn. 2004.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in Stata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The Stata Journal*, 4(2): 113-123.
- Saha, Bibhas, Kunal Sen, and Dibyendu Maiti. 2013. “Trade openness, labour institutions and flexibilis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India.” *Labour Economics*, 24(2013): 180-195.
- Sahoo, Pravakar. 2010. “Employment in India’s Organized Manufacturing Sector during Pre- and Post-Reform Periods.” *The Asia Pacific Journal of Economics & Business*, 14.2(2010): 36-48.
- Sanyal, Amal. 2010. *Contemporary Issues and Ideas in Social Sciences*. The Curious Case of the Bombay Plan.
- Singh, Ajit. 2008.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dustrial Policy in India: Adapting to the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Citeseer.

- Sivadasan, Jagadeesh. 2006. *Regulatory Regime in India: 1947 to 1998*.
webuser.bus.umich.edu/jagadees/other/indmfg_data/Reg_histor
y_india.pdf(검색일: 2016. 6. 21).
- Thakur, Babita, Rozika Gupta, and Rajesh Singh. 2012. "Changing Face
of India's Industrial Policies: A 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Vol. 2, No. 12.
- Thomas, Ronny, and K. Narayanan. 2012. "Productivity heterogeneity
and firm level exports: case of Indian manufacturing industry."
11th Annual GEP Postgraduate Conference.

[언론기사]

- "DIPP notifies 100% FDI in more financial services." 2016. 10. 25.
Business Standard.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pti-stories/dipp-notifies-100-fdi-in-more-financial-services-116102501270_1.html(검색일: 2016. 12. 6).
- "Factbox India's stringent labour laws." 2014. 6. 30. *Reuters*. <http://in.reuters.com/article/uk-india-labour-reforms-idINKBNOF504S20140630>(검색일: 2016. 7. 2).
- "The history of rail transport in India." 2014. 2. 10. *Odisha Bulletin*.
<http://odishabulletin.com/rail-transport-history/>(검색일 2016. 9. 5).
- "What India's five manufacturing hubs expect from Modi government
to kick-start growth." 2014. 6. 30. *Economic Time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auto/news/industry/what-india-as-five-manufacturing-hubs-expect-from-modi-government-to-kick-start-growth/articleshow/37893216.cms>(검색일: 2016. 7. 2).

[웹사이트]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y Policy and Promotion, DIPP).
<http://dipp.nic.in/English/default.aspx>(검색일: 2016. 11. 1).
-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 <http://meity.gov.in/>(검색일: 2016. 11. 2).
-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 Dipam.
<http://dipam.gov.in/>(검색일: 2016. 12. 1).

Make in India. <http://www.makeinindia.com>(검색일: 2015. 8. 5).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MSDE). <http://www.msde.gov.in/>(검색일: 2016. 10. 4).

[데이터]

ASI(Annual Survey of Industries) 2013-2014. <http://mail.mospi.gov.in/index.php/catalog/>(검색일: 2016. 5. 11).

CEIC Database.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16. 5. 9, 5. 10, 5. 11, 5. 12).

CMIE(Centre for Monitoring the Indian Economy), Prowess Database. <http://prowessdx.cmie.com/>(검색일: 2016. 6. 1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6. 11. 25).

OIS. <http://www.ois.go.kr/>(검색일: 2016. 11.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1. 23).

K

RE

목록



부록 1.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특성별 표본기업수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산업
전체 기업		628	10,497	9,608	20,733
소유권	공기업	23	359	425	807
	민간기업	603	10,113	9,148	19,864
	합작기업	2	25	35	62
국적별	국내기업	593	9,967	9,209	19,769
	외국기업	33	505	364	902
	한국기업	2	22	6	30
2차 산업	제조업	-	9,176	-	-
	비제조업	-	1,321	-	-
3차 산업	금융서비스	-	-	2,248	-
	정보통신서비스	-	-	1,277	-
	기타서비스	-	-	5,683	-
지역별	동부	69	1,289	1,051	2,409
	서부	195	3,509	3,680	7,384
	남부	210	2,710	2,231	5,151
	북부	148	2,844	2,531	5,523
	기타	3	126	59	188
	미분류	3	19	56	78

자료: CMIE, Prowess Database(검색일: 2016. 6.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alysis of Industrial Policies and Firms Characteristics in India: Focusing on Firm Size, Profit, Cost, and Productivity

LEE Woong, BAE Chankwon, LEE Jung-Mi, SHIN Selynn, and KIM Shinjou

This repor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firms in various sectors such a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anie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nd regions, by using firm-level data.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include firm size, cost, profit, and risk. For firm size, total income and total assets are used. For cost, total expenses and total compensation are utilized. Profit before tax, return on assets, and gross fixed investment are adopted as proxies for firm's profit. To measure firm's risk, total liabilities as well as liquidity ratio are drawn from income statements of Indian firm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firms,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analyzed through the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irms that operate in India. This study also examines industrial structure of the Indian economy with the use of macro- and industry-level data and explores industrial policies of the Indi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report show that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Indian economy grew slowly and was stagnant for long time, despite multifaceted and continuous policy reforms by the Indian government, could be found in the failure of privately led economy. It is shown that large firms and public enterprises are dominant in most areas in the Indian economy. On the other hand, high performance of foreign firms in India indicates that the Indian government's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have been successful.

The results from regional analysis demonstrate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ies,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ies have not covered evenly all regions, and differentiated policies by state government deepened regional differences over time. Lastly, it is remarkable that Korean firms' high performance in the Indian market, implying that the Korean firms' entry into the Indian market is effective.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지영 · 최유정
-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 16-11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계국 · 신민이 · 라미령
-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용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진주
-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홍중 외
-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홍중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흥
-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안

■ 2015년

-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립 ·
정은이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용 · 문성만 · 권혁주

-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 15-30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후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 15-31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용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鮮变革发
展展望) / 찌저 · 쉬원지 · 위즈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國におけるイ
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운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근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항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운아 · 이 용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광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재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鮮半島統一與中國的國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強一) · 피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國統一と日本經濟) / 후카오 교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權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Анализ атраивыгоды для 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중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이 웅(李 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경제학 박사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現, E-mail: 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4)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2015) 외

배찬권(裵燦權)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ckbae@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공저, 2014)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공저, 2015) 외

이정미(李廷美)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leejm@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공저, 2015) 외

신세린(愼洗麟)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Development Policy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selynn@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 모디 정부 집권 1년차 FDI 동향과 전망」(오늘의 세계경제 15-24)

김신주(金信珠)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인도 Centre for Economic Studies and Planning, Jawaharlal Nehru

University 경제학준박사(M.Phil. in Econom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現, E-mail: shiratta@gmail.com)

저서 및 논문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16-27)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플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alysis of Industrial Policies and Firms Characteristics in India: Focusing on Firm Size, Profit, Cost, and Productivity

LEE Woong, BAE Chankwon, LEE Jung-Mi, SHIN Selynn, and KIM Shinjou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지수와 변수를 활용했으며,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인도 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에 진출에 있는 한국기업과 인도 국내기업 및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인도 산업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을 위해 보다 미시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9 788932 216270

ISBN 978-89-322-1627-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